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99-190010-10



201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소 중 안 권 리 공 정 안 관 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당학회(전북대학교 박경미, 경희대학교 임유진, 덕성여자대학교 박진수)에 의뢰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 일러두기 |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 개발실적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내 통합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201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 01 ▶ 201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 141 ▶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187 ▶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 225 ▶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
- 233 ▶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
- 241 ▶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 271 ▶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민중당 민중정책연구원
- 291 ▶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대한애국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I. 서론

이 연구는 정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2018년 정책연구소 활동과 운영실적을 토대로 정당의 정책연구소 성과와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궁극적 관심은 2018년도 정책연구소 활동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연구소의 운영방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에 따라 이 연구는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2018년 활동실적의 특성을 살펴 보고는 것이다. 둘째, 각 정책연구소 운영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분석은 정책연구소를 더 발전시켜 정당정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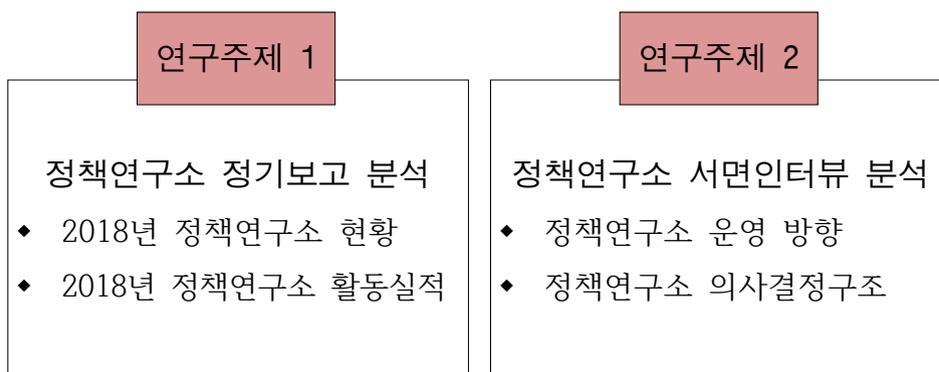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 운영은 2004년 개정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근거로 제도적 지원을 받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각 정당은 2004년 개정 정당법 제29조 3의 제1항에 의거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에 설치한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29조 3의 제2항에 있다. 이와 같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정책연구소 운영과 발전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정책개발을 촉진하여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기능 향상과 책임정치 실현을 추구하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 이후 정당법 개정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시켰다. 각각 2019년 2월과 2017년 6월에 개정된 현행 정당법 제38조과 정치자금법 제28조는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가 지출하도록 하였다. 2019년 현재 정당법 제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38조 제2항은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의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한데 있다. 이와 같은 정치관계법 조항에 따라 정책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지원함으로써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정책연구소는 정당법 제35조 제3항에 준하여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연구소의 정기보고는 이 연구가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보고를 진행한 각 정책연구소의 현황과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그림 1-1> 연구주제



이러한 목적에서 추진된 이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두 가지 연구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연구주제는 각 정당 정책연구소가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정기보고’ 분석이다.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보고를 한 정책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민중당 민중정책연구원, 대한애국당 애국정책연구원, 총 일곱 개의 정책연구소이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정책연구소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책연구소 운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면 인터뷰에는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총 세 가지 대주제에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내용은 이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두 가지 연구주제로 진행된 이 연구는 2018년 정책연구소 현황과 활동실적 분석과 서면 인터뷰 분석을 토대로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II.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2018년 활동실적

「정당법」 제38조는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들의 이합집산과 신생 정당의 출현이 빈번한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매년 정당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변화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활동실적을 보고하는 정책연구소의 수도 매년 다르게 나타난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된 정책연구소는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에 불과하다. 소수정당 중 가장 오래 명맥을 유지해온 정의당은 2012년 창당 이후 정책연구소의 명칭을 진보정의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정의정책연구소 등으로 여러 차례 바꾸었다.

특히, 2017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한국 정치에서 정당 간 합당과 창당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정책연구소의 구성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18년 2월 19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이들 두 정당은 합당 이후에도 기존의 정책연구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2018년 10월 30일 바른미래연구원으로 통합했다.

한편,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반대한 국민의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탈당하여 2018년 2월 7일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면서 민주평화연구원이 설립되었고,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하여 2017년 10월 26일 민중당을 창당하고 민중정책연구원을 설립했다. 2017년 9월 4일 대한애국당(현재 우리공화당) 창당으로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2-1>에서처럼 2012년 이후 정당의 변화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활동실적을 보고한 정책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자유한국당 소속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당 소속 바른미래연구원, 민주평화당 소속 민주평화연구원, 정의당 소속 정의정책연구소, 민중당 소속 민중정책연구원, 대한애국당 소속 애국정책전략연구원 등 7개 정당 산하의 7개 연구소이다.

<표 2-1> 정책연구소의 변화 (2012-201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2008.9.4.)				민주연구원(2016.11.4.)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소 (1995.2.3.)	여의도연구원(2013.10.10.)					
바른미래당					국민정책연구원 (2016.3.9.)	바른미래 연구원 (2018.10.30.)	
					바른정책 연구소 (2017.4.7.)		
민주평화당						민주평화 연구원 (2018.3.15.)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2012.12.11.)			미래정치센터 (2015.8.24.)	정의정책연구소 (2017.11.17.)		
민중당						민중정책 연구원 (2018.1.12.)	
대한애국당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2018.12.1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정책연구소 현황 (<https://www.nec.go.kr/portal/bbs/list/B0000352.do?menuNo=200478>)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과 인력 등 기본적인 현황과 함께 1) 연구와 정책개발, 2)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실적, 3) 교육과 연수활동, 4) 정책홍보, 5) 자료발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활동과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활동실적을 보고한

7개의 정책연구소 가운데 대한애국당 소속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경우 2018년 12월 11일 설립되어 활동 기간 부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실적이 전무했다. 따라서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일부 분석에만 포함되었으며, 활동성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공화당이 아닌 대한애국당으로 서술한다.

1. 정책연구소의 조직

1) 설립 및 운영근거

2018년 활동실적을 보고한 7개의 정책연구소는 「정당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당헌에 중앙당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표 2-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7개의 정책연구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애국당은 별도의 당규없이 당헌에 근거하여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당규로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5개 정당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중당은 “정당연구소”와 관련된 당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중앙조직규정” 가운데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2-2> 정당정책연구소 관련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 규정

	당헌		당규
더불어민주당	[제50조] 정책연구소	(개정) 2019.7.1.	없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민주시민 및 차세대 정치지도자의 교육과 연수,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소의 장은 당대표가		

	<p>지명하여 연구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p>③ 연구소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④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p> <p>⑤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p>	
자유한국당	<p>[제46조] 정책연구소</p> <p>(개정) 2019.1.17.</p> <p>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p> <p>2005.06.30. 제정</p> <p>2018.02.02. 개정</p>
바른미래당	<p>[제6절] 정책연구원</p> <p>(제정) 2019.6.28</p> <p>제74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p> <p>제75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p> <p>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p> <p>②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p>③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p> <p>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중앙조직규정」</p> <p>2018.03.12. 제정</p> <p>2019.01.16. 개정</p>
민주평화당	<p>[제9장] 정책연구원</p> <p>(제정) 2018.2.6.</p> <p>제107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p>	<p>「중앙조직규정」</p> <p>2018.02.27. 제정</p>

	<p>제108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p> <p>① 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p> <p>②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p>③ 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당과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p> <p>④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p>	
정의당	<p>[제46조] 정책연구소</p> <p>(개정) 2017.10.21.</p> <p>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p> <p>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p> <p>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p> <p>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제11호</p> <p>「정책연구소」</p> <p>2012.11.09.</p> <p>제정</p> <p>2019.05.04.</p> <p>개정</p>
민중당	<p>[제45조] 정책연구소</p> <p>(제정) 2017.10.15.</p> <p>① 당의 정강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p> <p>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p> <p>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상임 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p>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제13호</p> <p>「정책연구소」</p> <p>2017.11.01.</p> <p>제정</p>
대한애국당	<p>[제50조] 정책연구소</p> <p>(개정) 2019.7.8.</p> <p>① 국가발전 및 당의 정강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p> <p>③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p> <p>④ 연구소의 구성·운영 및 연구소장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없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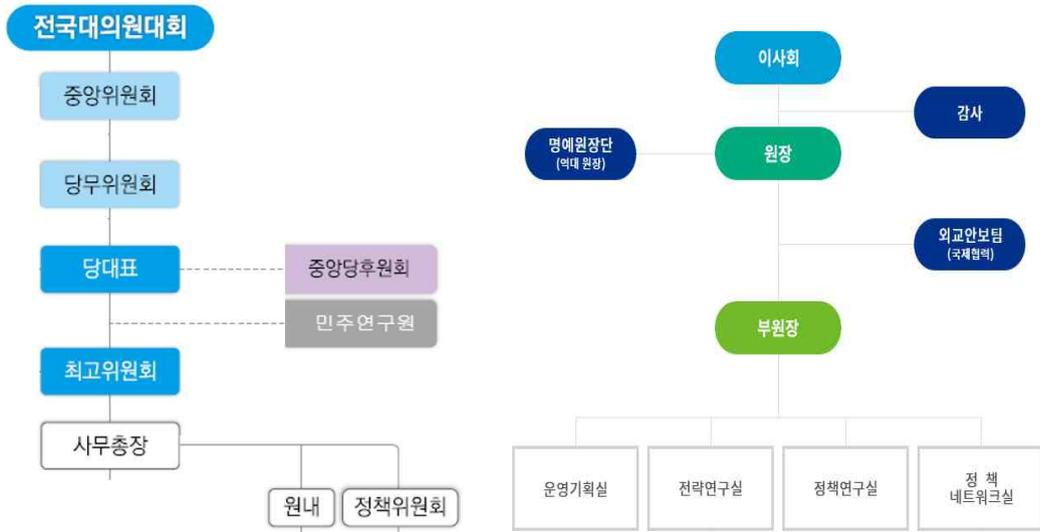
2) 조직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를 통해 정책연구소의 조직을 중앙당과의 관계와 정책연구소 자체 조직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했다. 당헌은 중앙당을 포함하여 정당조직 및 기구의 구성과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정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연구소와 중앙당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소 관련 당규를 통해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이해할 수 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소로서 전국대의원대회 산하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당 대표 산하 기관으로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2-1> 왼쪽 참조). 민주연구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6장 정책연구소(당헌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주연구원은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며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한다(당헌 제50조 1항).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당헌 제50조 제2항). 또한 연구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당헌 제50조 제3항)하는 등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원장은 당헌에 근거하여 전국대의원대회(제15조), 중앙위원회(제19조), 당무위원회(제22조), 최고위원회(제28조), 청년정책협의회(제52조)에 참석하며, 부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제15조), 중앙위원회(제19조), 사무직 당직자인사위원회(제41조), 정책조정회의 위원구성(제48조) 등에 참석하는 등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의 조직도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http://theminjoo.kr/group.do>);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idp.or.kr/about/organiChart.php>).

여의도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의 정책연구소로서 자유한국당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아래 사무총장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그림 2-2> 왼쪽 참고). 여의도연구원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당헌 제46조 1항),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있다(당헌 제46조 2항). 2018년 2월 2일 개정된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원장,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하는 3인 이내, 외부인사 중 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 등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제5조 1항). 이사장은 당 대표가 겸임하며(제5조 2항),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제6조 2항).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보다는 원장이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연구원의 연차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 감사결과, 기타 당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최고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2조 2항), 여론조사 결과는 사무총장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그림 2-2>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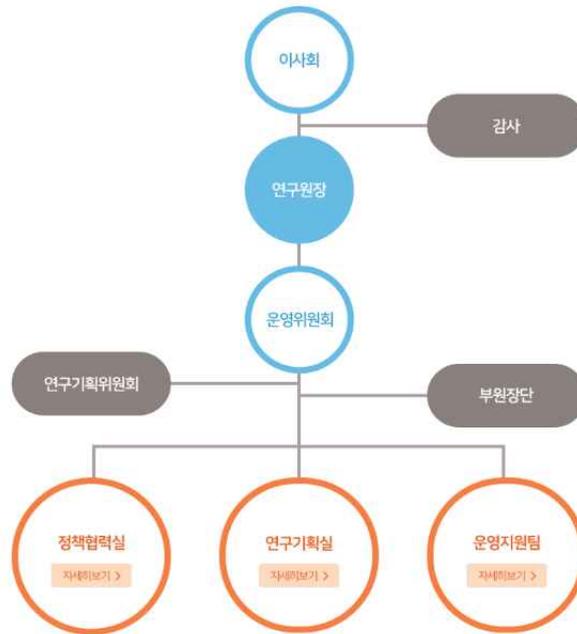
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http://www.libertykoreaparty.kr>);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ydi.or.kr>).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이후에도 기존의 정책연구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2018년 10월 30일 바른미래 연구원으로 통합되었다(<그림 2-3> 참고). 바른미래연구원은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당헌 제74조),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당헌 제75조 1항).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당헌 제75조 2항).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 바른미래 연구원 원장과 부원장 뿐만 아니라 연구위원과 연구원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당헌 제12조 2항), 당무위원회에는 원장과 부원장이 참여하는

등(당헌 제18조 2항) 정책연구소가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으며, 참여의 범위도 넓었다. 그러나 여전히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서 바른미래연구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바른미래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관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림 2-3> 바른미래연구원의 조직도



출처: 바른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brmrins.or.kr/html/15>).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반대한 국민의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탈당하여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면서 2018년 3월 15일 민주평화연구원이 설립되었다(<그림 2-4> 참고). 민주평화연구원은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연구를 위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당헌 107조).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당헌 제108조 2항).

민주평화연구원 역시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원장과 부원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규정되어 있다.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당원대표자대회에 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참여하도록 되어있으며(당헌 제12조 3항), 원장은 당무위원회(당헌 제23조 2항)와 최고위원회(당헌 제35조 2항), 부원장은 중앙위원회(당헌 제18조 3항)와 정책조정회의(당헌 제90조 2항)에 각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조직도에서 민주평화연구원의 지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민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원의 구성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림 2-4> 민주평화당과 민주평화연구원의 조직도



출처: 민주평화당 홈페이지(<http://peaceparty.or.kr/org.php>); 민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http://idp.re.kr/bbs/content.php?co_id=organization).

정의정책연구소는 정의당의 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당헌 제46조 1항),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당헌 제46조 2항). 정의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은 정의당의 <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정의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으며(당규 제11호의 제5조), 소장 및 부소장도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당규 제11호의 제11조 2항). 이러한 점에서 당 대표가 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을 맡고, 이사장(당 대표)가 연구원장을 지명하는 다른 정책연구소들과는 다르게 정의정책연구소에서 당 대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의정책연구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으로 구성되는 임원의 자격을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당규 제11호의 제8조). 다른 정책연구소들의 경우에는 당외 인사를 이사와 감사 등에 포함하고 있으나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에는 당원만이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당규 제11호의 제10조).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소장이 “당 대회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소가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당헌 제18조 2항).

<그림 2-5> 정의당의 조직도



출처: 정의당 홈페이지(<https://www.justice21.org/>)

민중당 역시 “당의 정강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민중정책연구원을 설립했다(당헌 제45조 1항). 민중정책연구원의 이사장은 상임 대표가 맡고, 연구소장은 상임 대표가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당헌 제45조 3항), 조직과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규 제13호 정책연구소 규정(2017.11.01. 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당헌 제45조 4항). 당규에서 정의정책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민중정책연구원 역시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로 구성되는 임원의 자격을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당규 제13호의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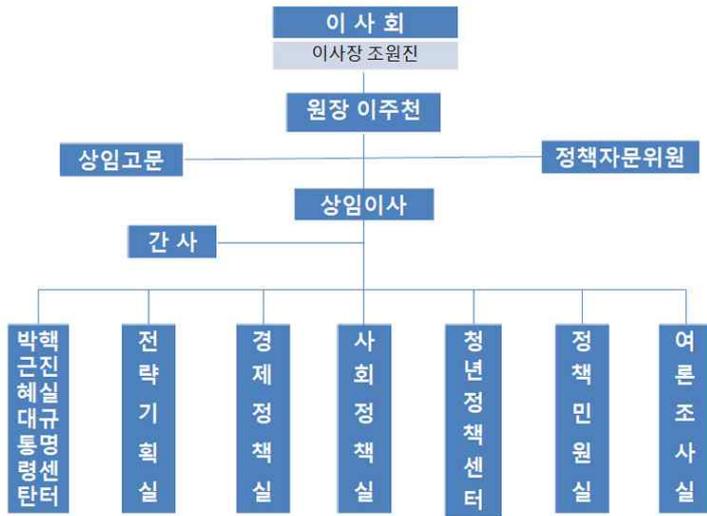
그러나 민중정책연구원의 경우 중앙당 조직에서 정책연구원의 지위와 연구원 조직에 관한 세부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민중당 홈페이지 <http://minjungparty.com>). 또한 당헌과 당규 모두에서 중앙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나타나지 않으며 연구원의 운영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승인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한애국당 역시 당헌을 통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다(당헌 제50조 1항). 또한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겸임하고, 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헌 제50조 3항).

최근 애국정책전략연구원 홈페이지(<http://ppsr.co.kr>) 개편 이후 <그림 2-7>에서 보는 것처럼 애국정책연구원의 조직도 등이 포함되었다.¹⁾ 그러나 현재까지 당헌 제50조 4항에 규정된 연구소의 구성·운영 및 연구소장 임기 등과 관련된 연구소의 정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헌과 당규 모두에서 중앙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1) 최근 개편된 우리공화당 홈페이지에 중앙당 조직에서 정책연구원의 지위를 보여주는 조직도가 포함되었다(http://ourrepublicanparty.kr/main/sub_menu/sub_01_org_chart6.php).

<그림 2-7>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조직도



출처: 애국정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http://ppsr.co.kr/?act=info.page&pcode=sub1_1)

3) 연구원

정책연구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진 양성 및 확충은 필수적이다. 2018년 정기보고에 따르면 전체 정책연구소의 연구 인력은 총 158명이며, 박사급 43명(27.2%), 석사급 52명(32.9%), 기타 63명(39.9%)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직원 수는 총 7명으로 연구인력 이외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정책연구소는 여의도연구원(1명), 민주평화연구원(3명), 정의정책연구소(2명), 애국정책전략연구원(1명) 등 4개 기관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자체고용의 형태였다.

<표 2-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책연구소별로 연구 인력의 규모와 구성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민주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22명(31.4%), 석사급 연구원 19명(27.1%), 기타 29명(41.4%)으로 총 70명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6명(11.3%), 석사급 연구원 18명(34.0%), 기타 29명(54.7%)으로 총 53명이었다. 반면, 바른미래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8명

(53.3%), 석사급 연구원 6명(40.0%), 기타 1명(6.7%) 등 총 15명, 민주평화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3명(75.0%), 석사급 연구원 1명(25.0%) 등 4명, 정의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원 2명(20.0%), 석사급 연구원 6명(60.0%), 기타 2명(20%) 등 10명, 민중정책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 1명(20.0%), 석사급 연구원 2명(40.0%), 기타 2명(40.0%)으로 5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으로 1명만을 고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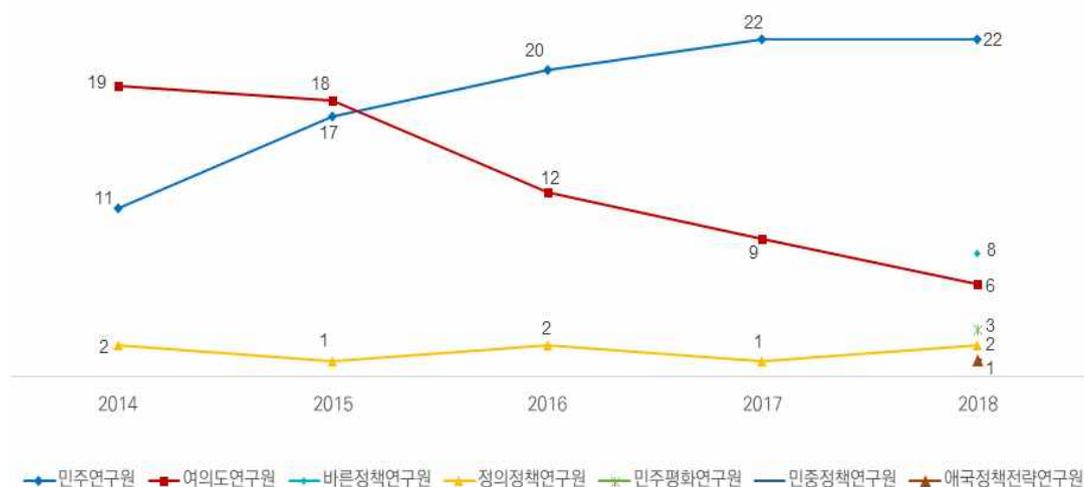
<표 2-3> 2018년 정책연구소 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

	연구원				직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자체 고용	외부 파견	합계
민주연구원	22 (31.4)	19 (27.1)	29 (41.4)	70 (100)	-	-	-
여의도연구원	6 (11.3)	18 (34.0)	29 (54.7)	53 (100)	1	-	1
바른미래연구원	8 (53.3)	6 (40.0)	1 (6.7)	15 (100)	-	-	0
민주평화연구원	3 (75.0)	1 (25.0)	-	4 (100)	3	-	3
정의정책연구소	2 (20.0)	6 (60.0)	2 (20.0)	10 (100)	2	-	2
민중정책연구원	1 (20.0)	2 (40.0)	2 (40.0)	5 (100)	-	-	0
애국정책전략 연구원	1 (100.0)	-	-	1 (100)	1	-	1
합계	43 (27.2)	52 (32.9)	63 (39.9)	158 (100)	7	0	7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

다음으로 <그림 2-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난 5년 간 각 정책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변화했다. 2018년 정기보고에서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가장 많았던 민주연구원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2014년 11명에 불과하던 것에서 2015년 17명, 2016년 20명, 2017년 2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도 22명을 유지했다. 반면, 2014년 박사급 연구원의 수가 가장 많았던 여의도연구원은 2014년 19명에서 2015년 18명, 2016년 12명, 2017년 9명, 2018년 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 수의 변화는 2016년 제20대 총선과 탄핵 이후 분당과 합당 등을 거치면서 원내의석수 변화에 따른 정당보조금 총액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한편,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의 수에 큰 변화가 없이 1~2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8> 2014-2018년 정책연구소 박사급 연구인력 수 변화(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4) 재정

정책연구소는 수입의 대부분을 소속 정당으로부터 배분받는 정당보조금으로 충당해왔다. 또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30을 정책연구소에 배분하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책연구소의 재정에도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2018년 정기보고에서 각 정당연구소의 재정수입 규모는 소속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정당연구소의 수입 중 정당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통적으로 높았다(<표 2-4> 참고). 정책연구소 가운데 애국정책전략연구원(100%)은 정당보조금만으로 운영되었으며, 바른미래연구원(99.99%), 민주평화연구원(99.98%), 민중정책연구원(99.2%), 민주연구원(95.6%) 등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여의도연구원(64.3%)과 정의정책연구소(78.1%)의 경우 정책연구소의 수입에서 정당보조금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여의도연구원에서 기타 수입의 비중이 2,323,279천원(24.5%)으로 가장 높았다.

2018년 정기보고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의 지출 규모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지출이 가장 많았던 정책연구소는 6,430,155천원을 지출한 여의도연구원이었으며, 민주연구원(5,720,804천원), 정의정책연구소(840,585천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책연구소 수입 대비 지출비율은 민주연구원(95.2%), 정의정책연구소(82.0%), 여의도연구원(67.8%), 민주평화연구원(63.5%), 민중정책연구원(53.7%) 등의 순이었으며, 통합이 늦어진 바른미래연구원(9.2%)과 설립이 늦어진 애국정책전략연구원(10%) 등은 일부만을 지출하는데 머물렀다.

<표 2-4> 2018년 정책연구소 활동경비(단위: 천원, %)

	수입				지출	잔액
	정당 지원금	기타 수입	전년 이월금	계		
민주연구원	5,744,836 (95.6)	66,429 (1.1)	196,354 (3.3)	6,007,620 (100)	5,720,804 (95.2)	286,815 (4.8)
여의도연구원	6,097,397 (64.3)	2,323,279 (24.5)	1,065,453 (11.2)	9,486,130 (100)	6,430,155 (67.8)	3,055,974 (32.2)
바른미래연구원	3,427,044 (99.99)	82 (0.01)	0 (0.0)	3,427,126 (100)	314,423 (9.2)	3,113,703 (90.8)
민주평화연구원	716,246 (99.98)	118 (0.02)	0 (0.0)	716,364 (100)	454,914 (63.5)	261,450 (36.5)
정의정책연구원	800,651 (78.1)	66,866 (0.0)	225,002 (21.9)	1,026,721 (100)	840,585 (82.0)	185,135 (18.0)
민중정책연구원	196,740 (99.2)	1,597 (0.8)	0 (0.0)	198,337 (100)	106,594 (53.7)	91,742 (46.3)
애국정책전략 연구원	20,000 (100)	0 (0.0)	0 (0.0)	20,000 (100)	2,000 (10.0)	18,000 (9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

뿐만 아니라 <표 2-5>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8년 정당이 지원받은 보조금과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18년 정당에게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91,322,560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29,669,358천원(32.5%)을 지급받았으며,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27,415,087천원(30.0%), 바른미래당 20,236,400천원(22.2%), 정의당 5,370,599천원(5.9%), 민주평화당 5,066,830천원(5.5%), 민중당 594,670천원(0.7%), 대한애국당 57,891천원(0.1%)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배분·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보조금 중 정책연구소에 지급된 지원금의 비중은 정당별로 차이가 있었다. 경상보조금을 기준으로 자유한국당은 45.7%, 민주당 43.3%, 민중당 38.8%, 대한애국당 34.5%, 바른미래당 33.5%, 정의당 30.1%, 민주평화당 30.0%(정당에서 지출한 정책연구소 법인등록 비용 등 포함)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2-5> 2018년 정당별 보조금과 정책연구소 지원금 (단위: 천원, %)

		지급 총액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 애국당
경상보 조금	1/4분기	10,640,876	3,186,407	3,236,528	2,911,724	622,252	658,570	18,952	6,443
	2/4분기	10,640,876	3,384,585	3,441,085	2,470,964	637,325	677,582	21,815	7,520
	3/4분기	10,640,876	3,354,209	3,325,899	2,429,484	628,978	662,060	233,322	6,924
	4/4분기	10,640,876	3,354,209	3,325,899	2,429,484	628,978	662,060	233,322	6,924
	총액	42,563,504	13,279,410	13,329,411	10,241,656	2,517,533	2,660,272	507,411	27,811
	비율	100	31.2	31.3	24.1	5.9	6.2	1.2	0.1
선거보 조금	총액	45,847,332	16,389,949	14,085,676	9,994,742	2,549,298	2,710,327	87,260	30,080
	비율	100	35.7	30.7	21.8	5.6	5.9	0.2	0.1
총액	총액	88,410,836	29,669,359	27,415,087	20,236,398	5,066,831	5,370,599	594,671	57,891
	비율	100	33.5	31.0	22.9	5.7	6.1	0.7	0.1
정책 연구소 지원금	총액	17,002,915	5,744,836	6,097,397	3,427,045	716,246	800,651	196,740	20,000
	경상 보조금 중 비율	39.9	43.3	45.7	33.5	28.5	30.1	38.8	71.9
	총액 중 비율	19.2	19.4	22.2	16.9	14.1	14.9	33.1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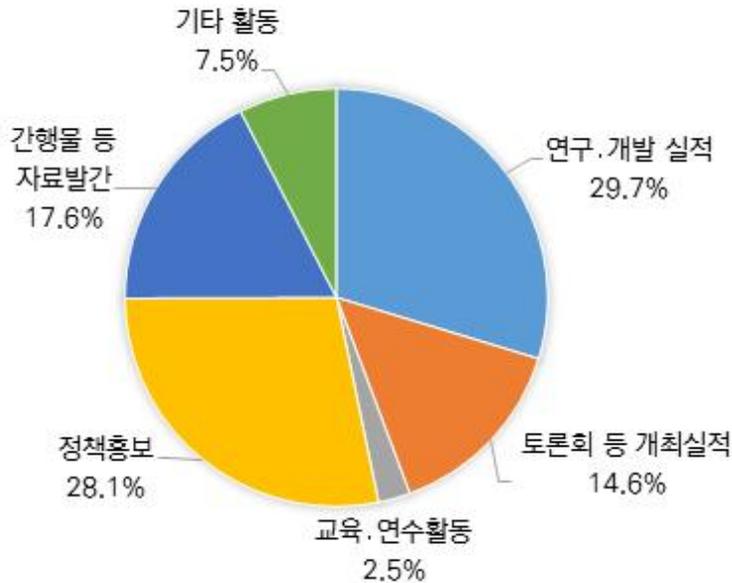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합한 수치임.

2. 2018년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2018년 활동실적을 보고한 6개 정책연구소를 대상으로 전체 활동형태별 실적을 분석했다.²⁾ <그림 2-9>에 나타난 것처럼 정책연구소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연구·개발(29.7%)이었으며, 다음으로 정책홍보(28.1%), 간행물 등 자료발간(17.6%), 토론회 등 개최(14.6%), 교육·연수활동(2.5%) 등의 순서였다.

<그림 2-9> 2018년 정책연구소 활동형태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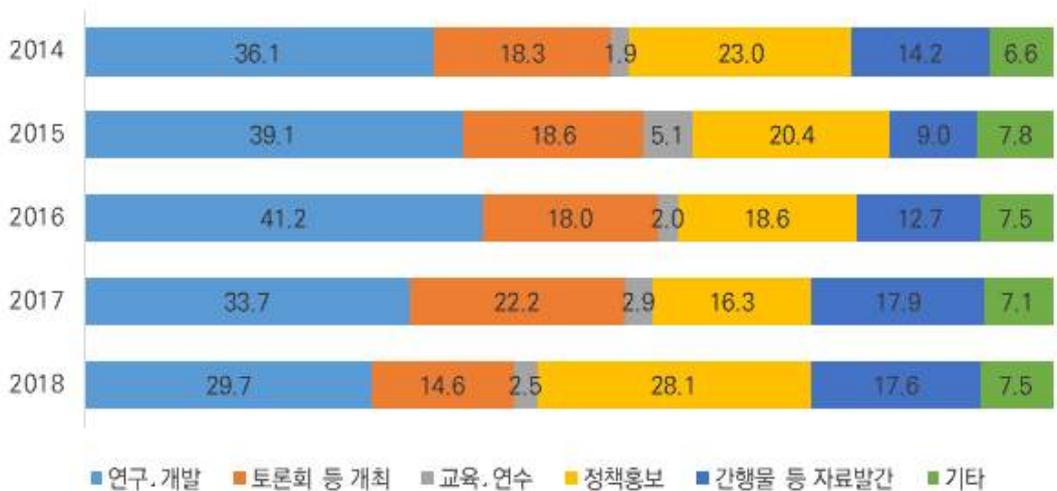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

<그림 2-10>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과 그 비중은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다. 최근 5년간 정책연구소의 활동 가운데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구·개발 활동이었다. 그러나 그 비중은 2014년 36.1%에서 2016년 41.2%까지 증가했으나,

2) 대한애국당 소속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경우 2018년 12월 11일 법인 설립으로 인한 활동기간 부족으로 활동실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2017년 33.7%로 감소했고 2018년에는 29.7%로 더욱 감소하여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간행물 등 자료발간 실적은 비중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활동형태였다. 2014년 14.2% 수준에서 2015년 9.0%까지 감소하였으나, 2017년 17.9%, 2018년 17.6%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정책홍보 역시 2014년 23.0%에서 2015년 20.4%, 2016년 18.6%, 2017년 16.3%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 28.1%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반면 토론회 등 개최실적은 2014년 18.3%, 2015년 18.6%, 2016년 18.0%, 2017년 22.2%, 2018년 14.6%로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교육·연수 활동 역시 2014년 1.9%, 2015년 5.1%, 2016년 2.0%, 2017년 2.9%, 2018년 2.5% 등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도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실적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2014~2018년 정책연구소의 활동형태별 실적 변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그러나 <표 2-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은 정책연구소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연구원이 639건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의도연구원 418건, 정의정책연구소 250건, 민중정책연구원 231건, 민주평화연구원 59건, 바른미래연구원

31건 등의 순이었다. 정의정책연구원과 민중정책연구원의 경우 예산 규모와 연구인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활동 실적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개별 정책연구소의 활동유형을 분류해보면 민주연구원은 활동실적 중 정책·홍보가 193건(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 122건(19.1%), 토론회 등 개최 118건(18.5%), 간행물 등 자료 발간 98건(15.3%), 교육·연수 11건(1.7%) 등의 순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연구·개발 162건(38.8%), 정책홍보 127건(30.4%), 간행물 등 자료발간 60건(14.4%), 토론회 등 개최 51건(12.2%), 교육·연수 4건(1.0%) 등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연구·개발 12건(38.7%), 토론회 등 개최 9건(29.0%), 교육·연수 3건(9.7%), 정책홍보 3건(9.7%), 간행물 등 자료 발간 3건(9.7%) 등의 활동을 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토론회 등 개최 27건(45.8%), 간행물 등 자료 발간 18건(30.5%), 정책홍보 14건(23.7%)에 집중하고 연구·개발 및 교육·연수와 관련된 활동은 전무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연구·개발이 130건(52.0%)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행물 등 자료발간 43건(17.2%), 정책홍보 32건(12.8%), 토론회 등 개최 22건(8.8%), 교육·연수 13건(5.2%) 등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중정책연구원은 정책홍보 89건(38.5%), 간행물 등 자료발간 64건(27.7%), 연구·개발 58건(25.1%), 토론회 등 개최 11건(4.8%), 교육·연수 9건(3.9%)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형태에 따라 분석해보면, 연구·개발활동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 연구소는 정의정책연구소로 52.0%(130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의도 연구원 38.8%(162건), 바른미래연구원 38.7%(12건), 민중정책연구원 25.1%(58건), 민주연구원 19.1%(122건)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민주평화연구원의 경우 2018년 한해 동안 연구·개발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둘째, 토론회 등 활동 비중은 민주평화연구원이 45.8%(27건)로 가장 높았으며, 바른미래연구원 29.0%(9건), 민주연구원 18.5%(118건), 여의도 연구원 12.2%(51건), 정의정책연구소 8.8%(22건), 민중정책연구원 4.8%(11건) 등의 순서였다.

셋째, 교육·연수 활동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연구소는 바른미래연구원으로 9.7%(3건)이었고, 정의정책연구소 5.2%(13건), 민중정책연구원 3.9%(9건), 민주연구원 1.7%(11건), 여의도연구원 1.0%(4건) 등의 순이었으며, 민주평화연구원의 경우 교육·연수 활동실적은 전무했다.

넷째, 정책홍보 활동의 비중은 민중정책연구원이 38.5%(89건)으로 가장 높았고, 여의도연구원 30.4%(127건), 민주연구원 30.2%(193건), 민주평화연구원 23.7%(14건), 정의정책연구소 12.8%(32건), 바른미래연구원 9.7%(3건)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료발간 유형에서 활동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연구소는 민주평화연구원 30.5%(18건)이었다. 다음으로 민중정책연구원 27.7%(64건)이었으며, 정의정책연구소 17.2%(43건), 민주연구원 15.3%(98건), 여의도연구원 14.4%(60건), 바른미래연구원 9.7%(3건)의 순이었다.

<표 2-6> 2018년 정책연구소별 활동형태별 실적(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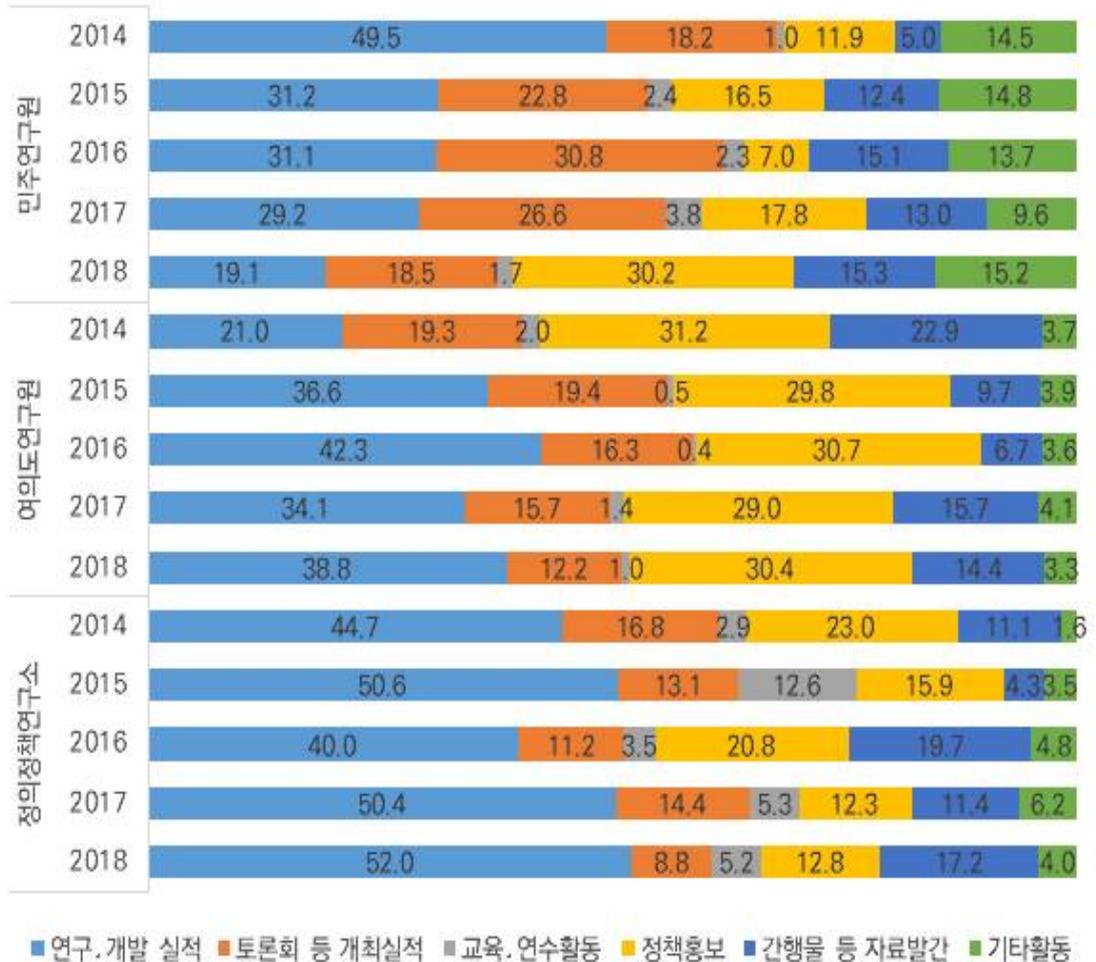
	연구·개발	토론회 등	교육연수 활동	정책 홍보	자료 발간	기타	계
민주연구원	122 (19.1)	118 (18.5)	11 (1.7)	193 (30.2)	98 (15.3)	97 (15.2)	639
여의도연구원	162 (38.8)	51 (12.2)	4 (1.0)	127 (30.4)	60 (14.4)	14 (3.3)	418
바른미래연구원	12 (38.7)	9 (29.0)	3 (9.7)	3 (9.7)	3 (9.7)	1 (3.2)	31
민주평화연구원	0 (0.0)	27 (45.8)	0 (0.0)	14 (23.7)	18 (30.5)	0 (0.0)	59
정의정책연구소	130 (52.0)	22 (8.8)	13 (5.2)	32 (12.8)	43 (17.2)	10 (4.0)	250
민중정책연구원	58 (25.1)	11 (4.8)	9 (3.9)	89 (38.5)	64 (27.7)	0 (0.0)	231
합계	484 (29.7)	238 (14.6)	40 (2.5)	458 (28.1)	286 (17.6)	122 (7.5)	1,628

출처: 각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2018년 정기보고>에서 작성.

<그림 2-1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난 5년간 유지된 정책연구소들의 경우, 활동형태에서 정책연구소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민주연구원의 경우 정책홍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연구·개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책홍보의 경우 2014년 11.9%에서 2017년 17.8%와 2018년 30.2%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연구·개발은 2014년 49.5%에서 2015년 31.2%, 2016년 31.1%, 2017년 29.2%, 2018년 19.1%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 등 개최 비중은 2014년 18.2%에서 2015년 22.8%, 2016년 30.8%로 증가하다가 2017년 26.6%, 2018년 18.5% 등 다시 감소했으며, 교육·연수활동 역시 2014년 1.0%에서 2015년 2.4%, 2016년 2.3%, 2017년 3.8%로 증가하다 2018년 다시금 1.7%로 감소했다. 간행물 등 자료발간의 비중은 2014년 5.0%를 제외하고 2015년 12.4% 2016년 15.1%, 2017년 13.0%, 2018년 15.3%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2014년을 제외하고 연구·개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책홍보가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비중은 다소 간의 변화가 있으나 2015년 36.6%, 2016년 43.3%, 2017년 34.1%, 2018년 38.8% 등으로 여의도연구원의 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 홍보는 2014년 31.2%, 2015년 29.8%, 2016년 30.7%, 2017년 29.0%, 2018년 30.4%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 등 개최실적은 2014년 19.3%, 2015년 19.4%에서 2016년 16.3%, 2017년 15.7%, 2018년 12.2%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교육·연수 활동 역시 2014년 2.0%, 2015년 0.5%, 2016년 0.4%, 2017년 1.4%, 2018년 1.0%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간행물 등 자료발간의 경우 2014년 22.9%에서 2018년 11.4%로 상당히 감소했다.

<그림 2-11> 2014-2018년 정책연구소별 활동형태 비중 변화(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지난 5년간의 활동실적에서 연구·개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0.0%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실적이 5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연수 활동의 비중은 2015년 12.6%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3.5%, 2017년 5.3%, 2018년 5.2%로 감소하였으나 다른 정책 연구소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토론회

등 개최 비중은 2017년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2014년 16.8%에서 2015년 13.1%, 2016년 11.2%, 2018년 8.8%로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유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반하여 연구개발, 토론회 개최 등, 교육·연수, 정책홍보, 자료발간 등의 순으로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활동실적과 함께 지난 5년간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과의 비교를 통해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개발 활동실적

2018년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실적을 수행 주체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표 2-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전체 485건의 연구·개발 활동실적 가운데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실적은 431건(88.9%), 외부용역 40건(8.2%), 자체와 외부의 공동실적 14건(2.9%)이었다. 정책연구소 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개발 실적은 정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었으며, 일부만이 외부용역 또는 공동으로 진행했다.

민주연구원은 122건의 연구·개발 활동 가운데 자체 연구·개발이 117건(95.9%), 외부 의뢰 2건(1.6%), 자체·외부(공동) 3건(2.5%)로 나타났다. 여의도 연구원은 162건의 연구·개발 활동 가운데 자체 153건(94.4%), 외부 2건(1.2%), 자체·외부(공동) 7건(4.3%)였다. 반면, 바른미래연구원은 12건의 연구·개발활동이 모두 자체적으로 집행한 성과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130건 중 110건(84.6%)을 자체적으로 수행했고, 외부용역 17건(13.1%), 자체·외부(공동) 3건(2.3%)이었다. 민중정책연구원은 전체 59건 가운데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개발 실적이 39건(66.1%)으로 가장 낮았으며, 외부용역 19건(32.2%), 자체·외부(공동) 1건(1.7%) 등으로 나타났다.

<표 2-7> 2018년 정책연구소별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단위: 건, %)

	자체	외부	자체외부(공동)	계
민주연구원	117 (95.9)	2 (1.6)	3 (2.5)	122 (100.0)
여의도연구원	153 (94.4)	2 (1.2)	7 (4.3)	162 (100.0)
바른미래연구원	12 (100.0)	0 (0.0)	0 (0.0)	12 (100.0)
민주평화연구원	-	-	-	-
정의정책연구소	110 (84.6)	17 (13.1)	3 (2.3)	130 (100.0)
민중정책연구원	39 (66.1)	19 (32.2)	1 (1.7)	59 (100.0)
합계	431 (88.9)	40 (8.2)	14 (2.9)	485 (100.0)

출처: 2018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정기보고

* 외부는 외부용역, 외부공동, 외부전문가 등, 자체·외부(공동)은 외부공동 등으로 표기된 연구·개발 실적의 수를 합산함. 이외의 나머지는 ‘자체’로 분류.

** 민주연구원의 경우 자체, 외부전문가 이외에 단독, 공동, 문헌연구(분석) 등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보고서를 검색하여 민주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작성한 경우 자체, 민주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외부전문가가 공동으로 집필한 경우 자체·외부(공동)으로 재분류하였음.

<표 2-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8년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책연구소의 전체 연구·개발 활동실적은 2014년 345건, 2015년 483건, 2016년 545건, 2017년 5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485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는 정책연구소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 감소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연구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른 연구소 및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연구와 연구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체연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외부용역의 수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라고 하겠다.

<표 2-8> 2014~2018년 연구·개발 활동실적 주체(단위: 건,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체	298 (86.4)	422 (87.4)	467 (85.7)	536 (91.0)	431 (88.9)
외부용역	23 (6.7)	23 (4.8)	38 (7.0)	41 (7.0)	40 (8.2)
자체·외부 (공동)	24 (7.0)	38 (7.9)	40 (7.3)	12 (2.0)	14 (2.9)
계	345 (100.0)	483 (100.0)	545 (100.0)	589 (100.0)	485 (10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정책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주체의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추진 기간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정책연구소가 단기 과제에 치중하는 것은 정당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는 거리가 먼 현안이나 이슈와 관련된 검토를 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책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2018년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개발 485건 가운데 대부분이 3개월 이하 단기과제였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구·개발은 37건(7.6%)에 불과했다.

정책연구소별로는 민주연구원에서 3개월 이하 단기 연구·개발 활동이 112건(91.8%)였고, 3개월 이상 중장기 연구·개발 활동은 10건(8.2%)에 불과했다. 단기 연구개발 활동실적 중 1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이 78건(6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개월 이하 13건(10.7%), 3개월 이하 21건(17.2%)였다. 4개월 이하 4건(3.3%), 5개월 이하 2건(1.6%), 6개월 이하 1건(0.8%)이었다. 정책연구소들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연구원에서 6~12개월 기간의 중장기 연구과제가 3건(2.5%)가 포함되어 있었다.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추진된 연구·개발 실적 3건은 민주당의 전략적 방향과 관련된 연구주제였다. 1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민주연구원 자체에서 수행한 “저비용사회” 연구와 동일한 주제를 1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자체·외부 공동으로 수행했다.

또한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했다.

여의도연구원의 연구·개발 활동실적은 3개월 이하 단기 연구·개발 활동이 158건(97.5%)이었으며, 이 가운데 특히 1개월 이하 단기 연구·개발에 141건(87.0%)이 집중되었다. 이외에 2개월 이하 14건(8.6%), 3개월 이하 3건(1.9%)이었다. 3개월 이상 중장기 연구·개발은 4건(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과 민중정책연구원은 단기 연구·개발 활동에 더욱 집중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이 수행한 12건의 연구·개발 활동은 1개월 이하의 단기 사업이었으며, 민중정책연구원 역시 1개월 이하 41건(69.5%), 2개월 이하 18건(30.5%)로 단기 연구·개발 활동에 치중했다.

반면,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중장기 연구·개발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정책연구소들과 마찬가지로 정의정책연구소 역시 1개월 이하 단기 연구·개발 활동이 93건(71.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정책연구소는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연구·개발 활동 역시 4개월 이하 11건(8.5%), 5개월 이하 8건(6.2%), 6개월 이하 4건(3.1%) 등 23건(17.7%)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2-9> 2018년 연구·개발 활동실적의 추진기간별 분류(단위: 건, %)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4개월 이하	5개월 이하	6개월 이하	6~12 개월	12개월 이상	계
민주연구원	78 (63.9)	13 (10.7)	21 (17.2)	4 (3.3)	2 (1.6)	1 (0.8)	3 (2.5)	- -	122 (100)
여의도연구원	141 (87.0)	14 (8.6)	3 (1.9)	4 (2.5)	-	-	-	-	162 (100)
바른미래연구원	12 (100)	-	-	-	-	-	-	-	12 (100)
민주평화연구원	-	-	-	-	-	-	-	-	-
정의정책연구소	93 (71.5)	7 (5.4)	7 (5.4)	11 (8.5)	8 (6.2)	4 (3.1)	-	-	130 (100)
민중정책연구원	41 (69.5)	18 (30.5)	-	-	-	-	-	-	59 (100)
합계	365 (75.3)	52 (10.7)	31 (6.4)	19 (3.9)	10 (2.1)	5 (1.0)	3 (0.6)	-	485 (1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에서 작성.

이상의 2018년 연구·개발 활동실적을 최근 5년간의 연구·개발 활동 추이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표 2-10>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정책연구소에서 단기 연구·개발 활동 실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연구원의 경우 단기 연구·개발의 비중이 90% 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중장기 연구·개발 활동이 미미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의정책연구소 역시 중장기 연구·개발 활동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의 경우 2014년 이후로 오히려 단기 연구·개발 활동의 비중이 2014년 66건(76.7%), 2015년 115건(82.1%), 2016년 163건(85.8%), 2017년 128건(90.8%), 2018년 158건(97.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표 2-10> 2014-2018년 추진기간별 연구·개발활동 실적 변화(단위: 건, %)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비율								
민주 연구원	단기	140	93.3	137	95.1	99	92.5	148	91.9	112	91.8
	중장기	10	6.7	7	4.9	8	7.5	13	8.1	10	8.2
	소계	150	100	144	100	107	100	161	100	122	100
여의도 연구원	단기	66	76.7	115	82.1	163	85.8	128	90.8	158	97.5
	중장기	20	23.3	25	17.9	27	14.2	13	9.2	4	2.5
	소계	86	100	140	100	190	100	141	100	162	100
바른미래 연구원	단기	-	-	-	-	-	-	-	-	12	100
	중장기	-	-	-	-	-	-	-	-	0	0
	소계	-	-	-	-	-	-	-	-	12	100
민주평화 연구원	단기	-	-	-	-	-	-	-	-	-	-
	중장기	-	-	-	-	-	-	-	-	-	-
	소계	-	-	-	-	-	-	-	-	-	-
정의정책 연구소	단기	105	96.3	188	94.5	119	79.3	152	88.4	107	82.3
	중장기	4	3.7	11	5.5	31	20.7	20	11.6	23	17.7
	소계	109	100	199	100	150	100	172	100	130	100
민중정책 연구원	단기	-	-	-	-	-	-	-	-	59	100
	중장기	-	-	-	-	-	-	-	-	0	0.0
	소계	-	-	-	-	-	-	-	-	59	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 단기는 3개월 이하를, 중장기는 3개월 초과 기간 동안 추진된 활동실적임

2) 토론회 개최 등 활동 실적

2018년 정책연구소의 전체 활동실적 가운데 토론회 등 개최 활동 실적은 14.6%를 차지했다.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치현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당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중요한 활동이다. <표 2-1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8년 전체 정책연구소들이 238건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활동은 간담회(자문회의)로 109건(45.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토론회 58건(24.4%), 세미나 31건(13.0%), 토크콘서트 등을 포함한 기타활동실적 19건(8.0%), 여론조사 12건(5.0%), 포럼 9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에서도 정책연구소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민주연구원이 토론회 등 개최 실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의도연구원 51건, 민주평화연구원 27건, 정의정책연구소 22건, 민중정책연구원 11건, 바른미래연구원 9건 등의 순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연구원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활동실적은 간담회(자문회의)로 71건(60.2%)였으며, 다음으로 토론회 24건(20.3%), 기타 13건(11.0%), 포럼 7건(5.9%), 세미나 3건(2.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간담회(자문회의)가 26건(51.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세미나 13건(25.5%), 토론회 10건(19.6%), 기타 2건(3.9%) 등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의 경우 여론조사가 5건(5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토론회, 간담회, 포럼, 기타에서 각각 1건을 개최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토론회가 9건(3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세미나 8건(29.6%), 여론조사 7건(25.9%), 간담회 2건(7.4%), 기타 1건(3.7%)의 순서였다. 정의정책연구소는 토론회가 12건(5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간담회 5건(22.7%), 세미나 4건(18.2%), 포럼 1건(4.5%) 등을 개최했다. 민중정책연구원은 간담회(자문회의)가 4건(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세미나 3건(27.3%), 토론회와 기타를 각각 2건(18.2%)씩 개최했다.

<표 2-11> 2018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 분류(단위: 건, %)

	토론회	간담회	포럼	세미나	여론조사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24 (20.3)	71 (60.2)	7 (5.9)	3 (2.5)	- -	13 (11.0)	118 (100.0)
여의도연구원	10 (19.6)	26 (51.0)	- -	13 (25.5)	- -	2 (3.9)	51 (100.0)
바른미래 연구원	1 (11.1)	1 (11.1)	1 (11.1)	0 0.0	5 (55.6)	1 (11.1)	9 (100.0)
민주평화 연구원	9 (33.3)	2 (7.4)	- -	8 (29.6)	7 (25.9)	1 (3.7)	27 (100.0)
정의정책 연구소	12 (54.5)	5 (22.7)	1 (4.5)	4 (18.2)	- -	- -	22 (100.0)
민중정책 연구원	2 (18.2)	4 (36.4)	- -	3 (27.3)	- -	2 (18.2)	11 (100.0)
합계	58 (24.4)	109 (45.8)	9 (3.8)	31 (13.0)	12 (5.0)	19 (8.0)	238 (10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에서 작성.

* 정책연구소가 구분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기타에 토크콘서트 등을 포함함

2018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을 지난 5년간의 추이와 비교해보면 정책연구소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4년 371건에서 2015년 384건, 2016년 41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2017년 360건으로 증가하는 듯 했으나 다시 2018년 238건으로 감소했다.

또한 <표 2-12>에서 토론회 개최 등 활동 실적의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정책연구소의 토론회 개최 등 활동 실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활동은 여론조사로 226건(60.9%)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5년에도 지속되어 여론조사가 169건(44.0%)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1건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2017년 64건(17.8%)로 보고되었고 2018년에 다시 12건(5.0%)으로 감소했다. 반면, 간담회(자문회의)는

2014년 26건(7.0%)에 불과했던 수준에서 2015년 50건(13.0%), 2016년 11건(26.8%), 2017년 143건(39.7%), 2018년 109건(45.8%)으로 계속해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토론회 역시 2014년 31건(8.4%)과 비교하여 2015년 84건(21.9%), 2017년 90건(25.0%), 2018년 58건(24.4%)으로 점차 개최건수와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럼은 2014년 22건(5.9%)와 비교해 2017년 14건(3.9%), 2018년 9건(3.8%) 등으로 감소했다. 세미나는 2014년 62건(16.7%), 2015년 52건(13.5%), 2017년 32건(8.9%), 2018년 31건(13.0%) 등으로 보고되었다.

<표 2-12> 2014~2018년 토론회 개최 등 활동실적(단위: 건, %)

	2014	2015	2016	2017	2018
토론회	31 (8.4)	84 (21.9)	11 (26.8)	90 (25.0)	58 (24.4)
간담회 (자문회의)	26 (7.0)	50 (13.0)	11 (26.8)	143 (39.7)	109 (45.8)
포럼	22 (5.9)	27 (7.0)	9 (22.0)	14 (3.9)	9 (3.8)
세미나	62 (16.7)	52 (13.5)	8 (19.5)	32 (8.9)	31 (13.0)
여론조사	226 (60.9)	169 (44.0)	- -	64 (17.8)	12 (5.0)
기타	4 (1.1)	2 (0.5)	2 (4.9)	17 (4.7)	19 (8.0)
합계	371	384	41	360	23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3) 교육·연수 활동실적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정책의 연구개발 활동 뿐만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과 공직선거 후보자를 육성하는 등의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2018년 전체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교육·연수활동은 총 40건(2.5%)으로 정책연구소의 활동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기보고에서는 정책연구소의 교육·연수 활동의 대상자를 당직자, 당원, 청년/대학생, 시민, 기타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8년의 경우 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활동과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활동이 각 16건(4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8건(20%)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 별로 2018년 교육·연수 활동실적을 구분해보면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2-1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주연구원은 총 11건의 교육·연수활동 가운데 당원 대상 교육·연수 활동이 6건(54.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당직자 대상 2건(18.2%) 등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3건의 교육·연수 활동 가운데 당직자와 당원 대상 교육·연수 활동이 각 1건(33.3%), 민중정책연구원은 9건 가운데 당직자 대상 5건(55.6%), 당원 대상 3건(33.3%)이 포함되었으며, 정의정책연구소(13건)는 당원(7건, 53.8%)과 당직자(6건, 46.2%) 대상의 교육·연수 활동에민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의도 연구원은 4건의 교육·연수 활동실적에서 당원 대상 교육·연수가 1건(25.0%)에 불과했다.

<표 2-13> 2018년 대상별 교육·연수 활동실적(단위: 건, %)

	당직자	당원	청년/대학생	시민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2 (18.2)	6 (54.5)	- -	- -	3 (27.3)	11 (100.0)
여의도연구원	1 (25.0)	- -	- -	- -	3 (75.0)	4 (100.0)
바른미래연구원	1 (33.3)	1 (33.3)	- -	- -	1 (33.3)	3 (100.0)
민주평화연구원	- -	- -	- -	- -	- -	- -
정의정책연구소	7 (53.8)	6 (46.2)	- -	- -	- -	13 (100.0)
민중정책연구원	5 (55.6)	3 (33.3)	- -	- -	1 (11.1)	9 (100.0)
합계	16 (40.0)	16 (40.0)	- -	- -	8 (20.0)	40 (10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에서 작성.

* 당직자 대상연수에 연구소 자체 교육연수 포함됨.

<표 2-14>에서 2018년 정책연구소의 교육·연수 활동 실적을 지난 5년간의 추이와 비교해보면 교육·연수 활동의 대상에 있어 당직자와 당원에 집중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당원 대상 교육·연수 활동은 2014년 3건(4.5%)에 불과하던 것에서 2017년 18건(34.6%), 2018년 16건(40.0%)으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당직자 대상 교육·연수 활동 역시 2014년 8건(11.9%)에서 2015년 9건(14.3%), 2017년 12건(23.1%), 2018년 16건(40.0%)으로 활동 건수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청년/대학생 대상 교육·연수 활동은 2014년 5건(7.5%)였던 것에서 2015년 1건(1.6%), 2017년 3건(5.8%)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 대상 교육·연수 활동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이거나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 2-14> 2014~2018년 대상별 교육·연수 활동실적(단위: 건, %)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직자	8 (11.9)	9 (14.3)	16 (61.5)	12 (23.1)	16 (40.0)
당원	3 (4.5)	2 (3.2)	1 (3.8)	18 (34.6)	16 (40.0)
청년/대학생	5 (7.5)	1 (1.6)	- -	3 (5.8)	- -
시민	- -	- -	- -	4 (7.7)	- -
기타	51 (76.1)	51 (81.0)	9 (34.6)	15 (28.8)	8 (20.0)
합계	67	63	26	52	4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각년도).

4) 정책홍보 활동실적

정책연구소의 정책홍보 활동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 전체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중 정책홍보 활동 실적은 28.1%로 연구개발 실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정기보고에서는 정책연구소 별로 정책홍보 건수와 방법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정책홍보 건수에서 민주연구원이 193건으로 가장 많은 홍보활동을 했으며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이 127건, 민중정책연구원 89건으로 보고했다. 반면, 정의정책연구원(32건), 민주평화연구원(14건), 바른미래연구원(3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홍보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방법은 사이트 게재였다. SNS를 포함한 사이트 게재는 319건(69.7%)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이트 게재와 보도자료 배포는 98건(21.4%)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보도자료 배포 16건(3.5%), 보고서 포함 책자배포 13건(2.8%), 기타 12건(2.6%)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별로는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이 SNS를 포함한 사이트 게재를 각각 183건(94.8%), 125건(98.4%)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다. 민중정책연구원은 사이트 게재와 보도자료를 함께 활용한 경우가 79건(8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도자료만 배포한 경우도 9건(10.1%)이 활용되었다. 반면,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에는 SNS를 포함한 사이트 게재와 보고서 포함 책자배포 각 11건(34.4%), 보도자료와 사이트 게재와 보도자료만 배포 각 5건(15.6%)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정책홍보활동을 동시에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2018년 정책연구소별 정책홍보 방법(단위: 건, %)

	사이트 게재 (+SNS)	사이트 게재 (+보도자료)	보도 자료	책자배포 (보고서)	기타	합계
민주연구원	183 (94.8)	- -	- -	1 (0.5)	9 (4.7)	193 (100.0)
여의도연구원	125 (98.4)	- -	- -	- -	2 (1.6)	127 (100.0)
바른미래연구원	- -	- -	2 (66.7)	- -	1 (33.3)	3 (100.0)
민주평화연구원	- -	14 (7.3)	- -	- -	- -	14 (100.0)
정의정책연구소	11 (34.4)	5 (15.6)	5 (15.6)	11 (34.4)	- -	32 (100.0)
민중정책연구원	- -	79 (88.8)	9 (10.1)	1 (1.1)	- -	89 (100.0)
합계	319 (69.7)	98 (21.4)	16 (3.5)	13 (2.8)	12 (2.6)	458 (10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서에서 작성.

* 뉴스레터 등은 보도자료, 이메일 배포 등은 기타로 분류함.

<표 2-1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8년 정책연구소의 정책홍보 활동을 지난 5년간의 추이와 비교해보면 온라인 시대에 맞게 점차 사이트 게재를

중심의 홍보방법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S를 포함한 사이트 게재를 통한 홍보활동의 비중은 2014년 160건(72.7%), 2015년 215건(85.0%)으로 증가하다 2016년 132건(53.7%)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2017년 172건(60.1%), 2018년 319건(69.7%)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보도자료와 사이트 게재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2014년 54건(24.5%), 2015년 34건(13.4%), 2016년 92건(37.4%), 2017년 69건(24.1%), 2018년 98건(21.4%)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보도자료와 보고서 포함 책자 등 오프라인을 통한 정책홍보 활동 방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표 2-16> 2014-2018년 정책홍보 방법 비교(단위: 건, %)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이트게재(+SNS)	160 (72.7)	215 (85.0)	132 (53.7)	172 (60.1)	319 (69.7)
사이트 게재+보도자료	54 (24.5)	34 (13.4)	92 (37.4)	69 (24.1)	98 (21.4)
보도자료	3 (1.4)	1 (0.4)	19 (7.7)	15 (5.2)	16 (3.5)
책자(보고서)	3 (1.4)	1 (0.4)	1 (0.4)	9 (3.1)	13 (2.8)
기타	- -	2 (0.8)	2 (0.8)	21 (7.3)	12 (2.6)
계	220	253	246	286	45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5)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

2018년 전체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중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 실적은 17.6%로 세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활동이었다. <표 2-1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8년 전체 285건의 자료발간 활동실적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고서로 104건(36.5%)이 발간되었다. 다음으로 자료집 70건(24.6%), 연구논문 60건(21.8%), 기타 41건(14.4%)였으며 기관지(책자)는 8건(2.8%)으로 가장 적게 발간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정책연구소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민주연구원은 총 98건의 자료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보고서 54건(5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료집 38건(38.8%), 기관지(책자) 4건(4.1%), 연구논문 2건(2.0%) 등을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연구원은 총 60건의 자료발간 활동 실적 가운데 보고서가 49건(81.7%)로 가장 많았으며, 자료집 10건(16.7%), 기타 1건(1.7%)이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2건의 자료발간 실적 가운데 보고서 1건, 자료집 1건을 발간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18건의 자료발간 활동을 보고했는데, 이 가운데 자료집이 15건(8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지(책자) 3건(16.7%)을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정책연구소의 경우 43건의 자료발간 활동실적 가운데 기타가 40건(93.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자료집 3건(7.0%)을 발간했다. 민중정책연구원은 64건의 자료발간 가운데 연구논문이 60건(9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료집 3건(4.7%), 기관지(책자) 1건(1.6%)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7> 2018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단위: 건, %)

	보고서	자료집	연구논문	기관지 (책자)	기타	계
민주연구원	54 (55.1)	38 (38.8)	2 (2.0)	4 (4.1)	- -	98 (100.0)
여의도연구원	49 (81.7)	10 (16.7)	- -	- -	1 (1.7)	60 (100.0)
바른미래연구원	1 (50.0)	1 (50.0)	- -	- -	- -	2 (100.0)
민주평화연구원	- -	15 (83.3)	- -	3 (16.7)	- -	18 (100.0)
정의정책연구소	- -	3 (7.0)	- -	- -	40 (93.0)	43 (100.0)
민중정책연구원	- -	3 (4.7)	60 (93.8)	1 (1.6)	- -	64 (100.0)
합계	104 (36.5)	70 (24.6)	62 (21.8)	8 (2.8)	41 (14.4)	285 (100.0)

출처: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정기보고에서 작성.

<표 2-1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18년 정책연구소의 자료발간 활동 실적을 지난 5년간의 추이와 비교해보면 2014년 131건, 2015년 111건, 2016년 159건, 2017년 288건, 2018년 285건으로 전반적으로 자료발간 활동실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보고서, 자료집, 연구논문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논문의 수가 2017년 이후 급증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표 2-18> 2014~2018년 간행물 등 자료발간 활동실적(단위: 건, %)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고서	58 (44.3)	29 (26.1)	94 (59.1)	108 (37.5)	104 (36.5)
자료집	47 (35.9)	48 (43.2)	49 (30.8)	50 (17.4)	70 (24.6)
연구논문	4 (3.1)	6 (5.4)	6 (3.8)	75 (26.0)	62 (21.8)
기관지 (책자)	8 (6.1)	11 (9.9)	10 (6.3)	21 (7.3)	8 (2.8)
기타	14 (10.7)	17 (15.3)	- -	34 (11.8)	41 (14.4)
계	131	111	159	288	28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Ⅲ.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서면 인터뷰 분석

제3장은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싱크탱크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정책연구소 운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른 국가의 싱크탱크가 정당과 직접적 관계에서 운영되는 사례와 정당과 간접적 관계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비교준거로 삼음으로써 한국 정책연구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싱크탱크와 정당과의 관계

싱크탱크(Think Tank)는 각 기관에 정책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외 이슈에 의견을 제공하여 일반 시민과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정책 정보에 근거하여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말한다(McGann 2018, 6). 2018년 현재 전 세계의 싱크탱크 분포를 살펴보면, 북유럽 26.2%, 북미지역 25.2%, 아시아 20.7%, 남미지역 12.5%, 아프리카 8.5%, 중유럽 6.1% 순으로 많다(McGann 2018, 36). 민주주의가 안정적이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싱크탱크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싱크탱크는 정당의 실질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 그러한 차이에는 제도적 차이, 기부 문화의 차이, 관료제 역할이나 정당의 역할이 싱크탱크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Stone et al. 1998).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요인은 정치사회적 조건이다(Stone and Denham 2004). 유럽의 싱크탱크는 정당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가 힘들지만 다원주의적 전통에 있는 미국의 경우 관료제가 개방적 특성을 보여 싱크탱크 활동영역도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견고한 정당체계, 조합주의적 정책결정, 폐쇄적 관료제 등을 갖는 유럽의 경우에는 싱크탱크가 활동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박경미 외 2018).

<표 3-1>은 국가별 싱크탱크의 유형과 활동 수준을 보여준다. 정부 소속, 공공부문, 시민사회의 정책연구기관으로 나누었을 때, 전 영역에

걸친 정책연구기관이 존재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독일은 정부, 공공부문, 시민사회 영역 모두에서 정책연구기관의 활동 수준이 활성화되어 있다. 독일의 정부소속 정책연구기관 중 독립감사기구, 공공부문의 정부자문위원회, 상설 독립 자문기구, 정당 산하의 싱크탱크, 시민사회의 연구중심 싱크탱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도 전반적으로 활동수준이 높은 정책연구기관이 있는 국가이다. 정부소속 정책연구기관의 활동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공공부문이나 시민사회 정책연구기관의 활동 수준도 높다. 미국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과 함께 정당 산하 싱크탱크가 없다는 특징이다. 이는 정부 소속 정책연구기관의 활성화 수준이 낮은 영국이 정당 산하 싱크탱크 수준이 상당히하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표 3-1> 국가별 싱크탱크의 특성과 수준

영역	싱크탱크 형태	활성화 수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정부소속 정책연구기관	입법지원기구	+++	-	++	+
	의회 위원회 보좌진	+++	+	++	+
	독립 감사기구	+++	++	+++	+
	중앙 정책평가기구	++	++	+	+
공공부문 정책연구기관	정부자문위원회	++	++	+++	++
	상설 독립 자문기구	+++	+++	+++	++
	정부 산하 싱크탱크	+++	+	++	++
	정당 산하 싱크탱크	-	++	+++	-
시민사회 정책연구기관	연구중심 싱크탱크	+++	+++	+++	+
	이념적 싱크탱크	+++	+++	++	+
	연구중심 NGO	++	++	++	-

출처: Weaver and Stares 2001; 모종린 2003, 456에서 재인용.

주: (-) 해당되는 유형의 기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 해당되는 기관이 수나 자원이 미약함. 조직상 변화 및 직원의 이동이 잦음. 10년 이상 되었거나 단 한번이라도 최상부 지도층 변화가 있었던 조직이 거의 없음. 조직의 생존 자체가 현실적 문제임; (++) 해당되는 기관 중 최소한 일부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치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을 인정받아 기반이 안정된 편이지만 이 형태를 띤 시민사회 기반 기관 중 상당 비율은 장기적 생존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정책에 대한 영향력 증거는 산발적이거나 분명치 않음; (+++) 해당 연구기관의 대부분이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 일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소 한번 이상의 성공적 리더십 변화를 경험하였음. 비록 특정 조직이 지명도, 접근성, 영향력을 잃었다고 해도 수차례의 정권 변화를 겪는 가운데도 현저한 역할 감소가 없었음.

이와 같이 정치제도의 조건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싱크탱크로서의 정책 연구기관 운영은 독일 유형과 미국 유형, 둘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법정기구로서 독일 싱크탱크는 시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기관으로 운영된다. 그에 반해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는 정치과정의 정책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조진만 2014; 박경미 외 2018).

먼저, 독일 유형은 정당이 설립한 재단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총 6개의 주요 정당이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소 또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정책연구소 또는 재단은 사회민주당(SPD)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k-Ebert-Stiftung), 자유민주당(FDP)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k-Naumann-Stiftung), 기독교민주당(CDU)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Konrad-Adenauer-Stiftung), 기독교사회연합(CSU)의 한스 자이델 재단 (Hans-Seidel-Stiftung), 좌파당 (Links partiei)의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Luxemburg-Stiftung), 녹색당 (Grünne)의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Boell-Stiftung)이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독일 사회의 여론형성과 정당의 정책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개의 독일 정당의 재단은 의회의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재정지원 수준이 결정된다. 사실상 독일은 정부의 재정, 결산 및 감사 등 재정 현황 공개를 선거에 관한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법률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공개 등에 관한 실질적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다. 다만 재정적 지원 수준은 연방의회 의결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당의 재단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국가 예산에서 지원된다. 지원금은 경제협력 및 발전부, 내무부, 환경부, 외무부가 나누어 책임진다.

그에 반해 미국은 정책적 비전 제공의 기능이 강조된다. 싱크탱크 역할이 강조되지만 정당 소속의 싱크탱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와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진보정책연구소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등은 정당과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기관으로 정치적 비전과 정책개발을 지원한다(McGann 2018, 136-137). 그러나 정당과 공식적으로 직접적 관계에 있는 싱크탱크는 거의 없다.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미국 싱크탱크는 기관마다 자금 조달방식에 차이가 있다. 의회 및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가 있으며, 정부 정부지원연구개발센터 등으로 지정받아 정부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그 비중은 적다. 대체로 싱크탱크의 재정은 개인 혹은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충당된다.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독일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 운영에서 정당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치제도상으로도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독일 유형과 유사하다. 정당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독일 유형과 유사하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독일의 정책연구소 또는 싱크탱크의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는 미국 정책연구소나 싱크탱크는 정당보다는 의회나 정부의 정책 프로젝트를 받기 때문에 정당과의 관계는 한국만큼 가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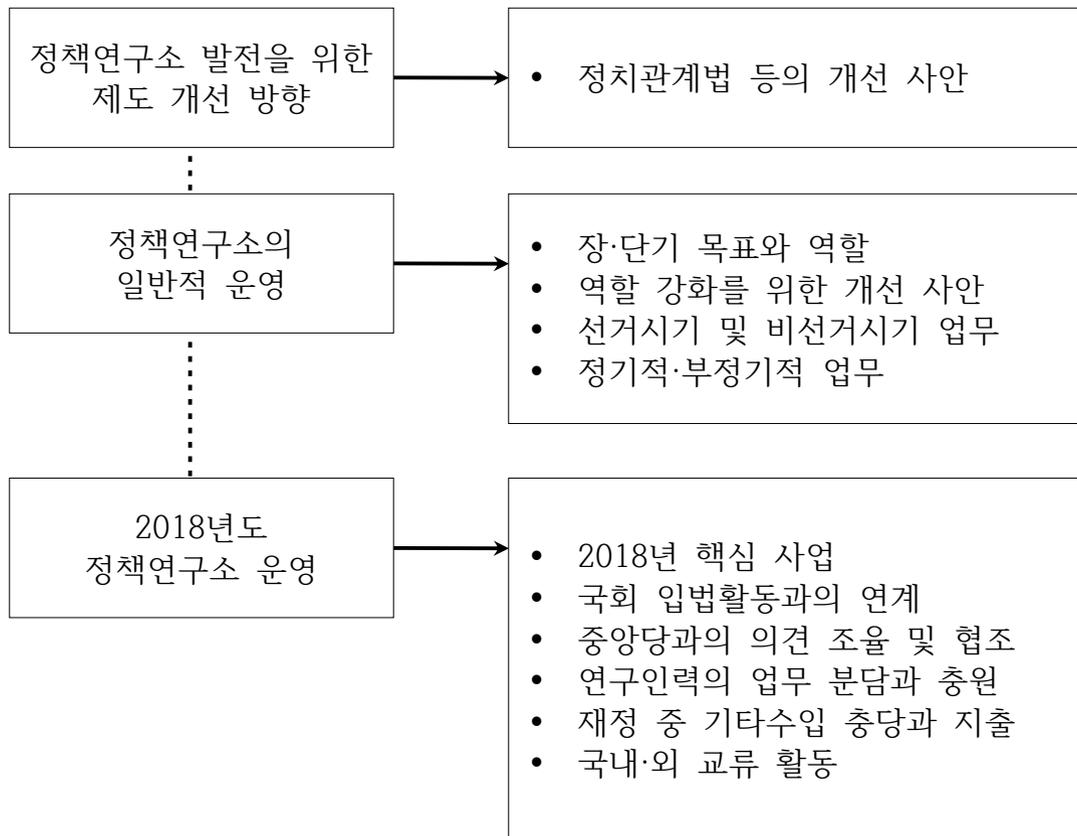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II장에서 분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연구소가 제출한 2018년 활동성과와는 별도로, 각 정책연구소가 2018년 한해 동안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치제도적 관점에서 독일 유형에 가까운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검토함으로써 각종 정치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독일 유형의 특성을 보이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진행된 정책 연구소별 서면 인터뷰를 다음 절에서 분석한다.

2. 정책연구소 서면 인터뷰 분석

정책연구소 서면 인터뷰는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다. 서면 인터뷰 질문은 <그림 3-1>과 같이 세 가지 주제에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이었다. 두 번째 주제는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으로, 정책연구소의 역할, 단기적, 장기적 목표에 관한 의견,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이유, 정책연구소의 업무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다. 세 번째는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은 2018년 정책연구소의 주요 정책의제와 국회의 입법활동과의 관계, 2018년 중점사업, 중앙당과의 의견조율의 방식, 연구인력의 역할과 충원방식, 활동경비 총당과 지출, 해외 정책연구소 등과의 국제적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림 3-1> 서면 인터뷰 대주제 및 질문항목



이상과 같이 구성된 정책연구소별 서면인터뷰에 답변한 직급별 인원 수는 <표 3-2>와 같다. 각 정책연구소별 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등 총 3명의 답변을 정책연구소에 요청하였으나 각 직급별 공식 또는 기타 정책연구소의 사정에 따라 응답한 직급 및 수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책연구소별 답변에 대한 분석 수준과 실질적인 운영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3-2> 서면 인터뷰 답변 현황

	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합계
민주연구원	-	-	1	1
여의도연구원	-	-	1	1
바른미래연구원	-	-	3	3
민주평화연구원	-	1	1	2
정의정책연구원	-	-	2*	2
민중정책연구원	1	1	1	3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	1*	1
합 계	1	2	10	13

* 정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명 중 1명은 연구기획실장이며,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명은 상근이사임.

1)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첫 번째 서면 인터뷰 주제는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질문은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이 중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각 정책연구소의 응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적인 답변은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정책 기조와 방향 설정에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장기적 정책개발과 정당의 담론 개발 및 연구, 그리고 선거시기 핵심의제 연구 개발의 측면에서 정당발전의 토대역할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 여의도 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여의도연구원이 자유한국당의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당의 위기때마다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의 새로운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는 등의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정당화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정당의 생산적, 실용적 정책개발에 기여한다는 바른미래연구원,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민주평화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가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 설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평가, 그리고 정당의 정책개발 및 연구를 촉진하여 선진화된 정당의 운영을 통한 정책정당으로의 발전 토대가 되고 있다는 애국정책전략연구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정책연구소 존립의 의미와 기능이 정당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있다는 의미이다. 2004년 개정 정치관계법에 따른 정책연구소 제도화가 정당의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정책연구소 운영에 주요 토대가 되는 정치관계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3>은 각 정책연구소가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에서 개정하여야 한다는 사안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책연구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책연구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의견은 정당과의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을 고려하면 정당법의 취지가 정책연구소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정당법 제 38조 제1항은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 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 법인 설치의 정당 자체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연구소 운영에서 재정과 인사의 실질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그로 인한 독자적인 중장기 비전과 정책을 연구·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그로 인해 정책연구소 활동의 효율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정책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공통적 의견은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가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정책연구소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정당에 지급되고 정당이 받은 경상보조금 30%를 정책연구소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책연구소는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당 중앙당 또는 지도부 결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하위부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책연구소의 답변은 정책연구소의 독립적 운영에 정당 결정이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3〉 정치관계법 개정의 방향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소의 재정 및 인사의 실질적 독립이 필요함
여의도연구원	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바른미래연구원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하며 시민 대상의 정치교육 제한을 개선하여야 함
민주평화연구원	재정 및 조직의 독립성 보장하여야 하며 순수연구비용과 학용연구비용계정을 넓혀 교육, 정책, 강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정의정책연구소	중양당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 30%를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출판, 대중교육, 후원회 설치 등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연구소 위상을 재설정하여야 함
민중정책연구원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 또는 정당의석수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소에 국고보조금 직접 지급,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간 차이 없이 국회 및 정부에 동등한 의사소통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애국정책전략연구원	비교섭단체에 대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당설립의 요건을 명시한 정당법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함

셋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정책연구소의 활동 중에는 각종 포럼과 강연회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책연구소의 정치교육은 대체적으로 당원이나 정책연구소 구성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중양당과 시·도당에서 운영하는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조직 등은 당원을 중심이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 기초 등을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기능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된 이견은 비교섭단체를 규정한 국회법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다. 의석 20석 이상을 갖는 정당에게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는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섭단체 지위는 재정적 차이만이 아니라 국회 운영권한 부여로 인해서 정당 영향력에 격차를 낳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중정책연구원과 애국정책전략연구소 등과 같이 국회 의석 수가 적거나 없는 정당과 정책연구소는 국회와 행정부 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섭단체 중심의 국고보조금 지급기준과 지원은 비교섭단체 정당에게는 정책경쟁을 위한 정보와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

두 번째 주제는 정책연구소의 일반적 운영에 관한 것이다.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2018년 한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정책연구소의 전반적 목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3-4>는 정책연구소의 장·단기적 목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장기적 목표는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정당의 정치적 목표에 부합하는 이념, 가치와 비전을 정립하는 것에 두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현실 정치에서 제기되는 현안에 대한 대응과 국민에 대한 대표성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정치적 의제 설정도 장기적 목표에 포함되어 있었다.

단기적 목표에서도 대체로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소들의 답변이 유사하였다. 차이는 정의정책연구소, 민중정책연구원, 애국정책전략연구원에서는 단기적 목표에 구체적인 현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민생정책 및 복지정책이 단기적 목표였으며 민중정책연구원은 노동정책 및 통일정책 마련이 단기적 의제였던 반면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박근혜대통령 석방운동이 단기적 목표였다.

<표 3-4> 정책연구소의 장·단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민주연구원	싱크탱크로서의 정책역량 및 의제확산 역량 제고	이슈 및 공론화 의제에 대한 대응
여의도 연구원	보수주의정당 이념가치 정립, 현안중심 정책 대응, 국민요구를 당 정책에 반영, 당 민주성·반응성 제고, 시민단체 등 교류 협력 통한 정치적 가교역할, 시민정치교육 활성화 및 교육정당 실현	국가와 당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당의 정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
바른미래 연구원	당의 비전과 정책 연구개발, 교육활동과 인재육성을 통한 국가와 당의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체제 수립	당 이념가치비전 정립, 국가 중장기발전 전략 연구, 당원·국민 정치의식 함양 교육, 소통 통한 현안중심 정책기초자료 생성·검증, 국제교류 통한 정치발전
민주평화 연구원	정책쟁점으로 발전을 위한 심층 연구, 정당 비전과 정책	현안 대응 및 세미나·토론회 및 연구 발표, 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
정의정책 연구소	저성장 국면의 한국경제 상황에서 민주적 복지국가의 가치비전·전략 수립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중견국기에 걸맞는 민생정책, 복지정책 마련
민중정책 연구원	정책연구 인력 전문성 강화, 중장기 정책 전략 강화 및 대안체제 프로젝트와 미래 대안체제 프로젝트, 국제적 정책협력 추진, 정책 기관지 발간	현안에 대한 대안 정책 개발, 노동정책 등 진보정책 의제 개발, 평화협정 및 통일 방안 마련, 정책아카데미 등 교육기능 강화, 당내외 정책연구 용역 시행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진보우파정당으로서 국가비전·전략 연구, 젊은인재영입 통한 청년보수 가치 정립, 안보교육을 통한 안보강국 자유민주주의 재건, 정치문화 선도와 정치발전과 국가발전 기여	박근혜대통령 불법탄핵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림, 무죄석방운동 및 지속적 투쟁

세 번째 질문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였다. <표 3-5>는 각 정책연구소가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정책연구소의 공통적 답변은 연구 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의 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정책연구소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성의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정책정당화에 기여하는 정책연구소의 발전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답변의 공통점은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이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에 제약을 두는 요인이라는 점이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정책연구소가 아닌 소속 정당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 경상보조금 중 30%를 정책연구소가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방식은 재정 지출의 권한을 정당이 갖기 때문에 정책연구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 운영에 제한을 두게 되는 부수적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정책연구소들이 동일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정당에 지급되는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현실적 대안도 제시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의 30%가 어렵다면 그 비율을 30%보다 낮추어서라도 정책연구소에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후원회 등을 허용하여 정책연구소의 독립적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사업을 통한 제한적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수정당 소속 정책연구소인 민중정책연구원과 애국정책전략 연구원의 공통적 의견은 국회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원내 의석이 적거나 없는 정당에게는 국회 안의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내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소수정당의 기능에 제약을 두는 동시에 소속 정책연구소의 활발한 사업 추진에도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5〉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자립과 자율성에 기초할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연구와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음. 정책연구소 국고보조금 지원의 현실적 지급 방안 필요. 정당보조금 30%를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15-20%로 현실화,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여의도 연구원	재정자립성 확보가 우선. 재정자립성 확보는 정당으로부터 자율성 확보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30%가 정책연구소 연구와 운영에 쓰인다면 연구 역량과 전문성 강화 가능. 국고보조금 30%을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거나 후원회 허용, 제한적 수익사업 허용이 필요함
바른미래 연구원	충분한 연구인력 확보, 외부전문가 네트워킹 강화, 다 정책연구소와 정책 교류 등 전문성 강화. 정당기준에 맞춰진 처우와 인력 제한 등의 어려움. 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독립성 강화. 정당과는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의 방법 개선 필요
민주평화 연구원	연구 지속과 정책 가치를 확대, 유권자 지지를 넓히기 위한 정치, 정책, 리더십 아카데미 설치가 필요. 지역분권이 가능하도록 정책성 활성화 이룰 수 있어야 함. 당무에서 벗어나 정당 정책 개발에 집중하도록 조직 독립성 필요
정의정책 연구소	조직적 독립성을 위한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 필요. 그에 걸맞게 국고 보조금 30%를 연구소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 및 부소장의 인사에 관련 지식인 및 전문가 인사가 적절히 조합이 필요함
민중정책 연구원	연구 전문성 강화와 재정 자립성 확보가 필요함. 일정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을 선발하려고 해도 인건비 지원이 충분치 않음. 교섭단체 위주에서 벗어나 비교섭단체 국고보조금 지급을 늘려야 함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20인미만 정당에게도 현실적 경상보조금 지원과 국회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관한 국회법 개정

네 번째 질문은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이다. 정책연구소가 정당 산하 기관이고 정당 정책개발 업무가 주요사업 중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선거와의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선거시기와 선거가 없는 시기의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선거시기와 선거가 없는 시기로 나누어 정책연구소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선거 시기의 업무에 관한 답변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선거 시기 업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첫째, 선거를 위한 정책 및 공약 개발 업무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나 지역별 현지 당원대상 교육이나 조사 등 여론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여론집약 업무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직접적 여론집약 방식 이외에 전문가 간담회 개최나 이들과 정당 및 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되는 이슈 개발업무에 참여하기도 한다.

둘째, 일부 정책연구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선거승리를 목적으로 정책연구소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선거과정 전반에서 정책연구소 연구진 참여는 중앙당과 지역구 수준에서 구체적인 정책개발 및 홍보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 규모가 적은 정당의 일부 지역구에는 구체적인 선거 공약 개발이나 홍보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외에 중앙당 파견 등을 통한 정책개발 업무의 연장선에서 정책연구소 연구진이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6> 선거시기 정책연구소의 주요 사업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정책수요조사 및 핵심 정책개발에 주력함. 지역이나 중앙당 파견을 통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여의도연구원	교수, 연구원, 시민운동가 등 분야별 ‘비전위원회’ 구성하고 의원과 정당 정책기구도 참여하여 정책개발작업. 분야별 비전위 연구성과를 집대성, 출판하여 정당 정책위 정책과 공약개발에 참고하도록 함. 정책이슈별 정당입장을 요약, 정리한 포지션페이퍼 발행, 후보에 배포
바른미래 연구원	선거전략공약 개발에 주력. 당원 대상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진행. 정책자문·정책제언을 받아 선거공약화, 지역별 선거환경 분석, 예비후보자용 선거기초데이터 정비. TF팀 구성 및 정책위원장 중심으로 정책공약개발본부에 편제, 선대본에 개별적 차출되기도 함
민주평화 연구원	선거자료, 기초정책데이터 분석. 선거전략 구상 및 대응방안 마련
정의정책 연구소	당원·국민·지역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 사업, 담론 개발 및 의제 설정 사업, 정책자문단 실천사업에 주력
민중정책 연구원	선거 정책공약 개발 및 후보자 교육, 외부 발표, 후보자 선거지원업무 진행. 사전 정책공약을 시·도당별 집중 교육 실시. 현지 선거지원을 위해 현지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하기도 함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약속을 담은 문서를 공개하여 메니페스토 운동 전개. 전국순회 정책토론회와 전문가간담회 등 통한 이슈개발 공약개발 자료 준비

선거가 없는 시기의 업무는 정책개발 업무가 주축을 이루었다. <표 3-7>과 같이 정책연구소는 정당의 주요 중장기 정책개발과 함께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방식으로는 정책연구소 연구진들이 추진한 연구내용을 보고서나 자료집 등의 형태로 발간하는 업무가 기본적 것이었다. 더 나아가 외부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해 현안 이외에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이외에 일부 정책연구소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정치학교 등을 여는 등 교육사업도 추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7> 선거가 없는 시기 정책연구소의 주요 업무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각 분야별 주요 의제 발굴 및 정책연구. 의원실 및 관련 단체와 함께 각종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여의도 연구원	정책연구활동 중심 운영. 정책연구소 내 공동연구(‘정부정책 평가’, ‘이슈브리프’, ‘현안보고’) 및 연구원별 개별연구 진행. 세미나 등을 통한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 진행 후 정부정책 적실성과 공과 평가 후 자료집 제작
바른미래연구원	당면 이슈 중심 ‘이슈페이퍼’ 작성·발송. 청년대상 6개월간 ‘청년정치학교’ 실시. 긴급정책현안 토론회·세미나 개최. 정책전문가 중심 ‘정책자문위원회’ 등 운영.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과 정책 마련.
민주평화연구원	정책기초 세미나와 교육 사업. 정당 정책개발 및 현안대응 전략 마련
정의정책연구소	중장기 의제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및 조사 사업, 토론회 개최, 포럼 운영, 전문가 네트워킹
민중정책연구원	‘정책과 논점’ 발간.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사업. 당내 정책교육사업. 주요사회단체와 ‘정책연대’사업. 정책당대회의 주요 정책박람회 주관(선거없는 홀수년). 정책아카데미 등 교육사업 주관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외교·안보·경제·교육 등 관련 전문가정책토론회 개최, 연구보고서·정책제안집 작성. 분야별 동향보고서 작성 및 토론회·포럼 통한 외부전문가네트워킹. 국가별 매니페스토 성공사례 분석 및 자체 매니페스토 연구개발

이와 같은 선거시기와 선거가 없는 시기의 정책연구소 업무 및 사업은 <표 3-8>의 정책연구소의 정기사업과 부정기사업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의 주요 사업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정책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슈에 대한 연구 분석이 중심을 이루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열린 형태의 정책아이디어 개발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정당의 정책적 향방에 대한 모색과정을 외부에 알리는 홍보의 기능도 하고 있었다.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예상치 못한 이슈가 돌발적으로 등장하였거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정책이슈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간담회, 여론조사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3-8> 정책연구소의 정기사업과 부정기사업

	정기사업	부정기사업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발간. ‘연구보고서’ 발간	각종 현안 및 당정책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여의도 연구원	이슈브리프 작성·발간. 세미나·토론회 개최 및 자료집 발행	현안보고, 여론포커스, 정책보고서 등 발간
바른미래 연구원	현안 이슈페이퍼 작성 및 당 활용 지원. 정책이슈 여론조사 실시. 정책간담회. 분야별 위원회. 정책홍보. 청년정치학교 운영	각종 현안에 대한 긴급대응 토론회·세미나 진행. 연구용역과제 수행. 당 지도부 요구에 따른 메시지 및 자료 작성
민주평화 연구원	정책개발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	지역강연 보조. 자료집 발간. 현안대응 및 여론조사
정의정책 연구소	월간 ‘정의와 대안’ 발간. 주간 여론조사 동향. 월례 여론조사. 연구과제 진행	특정 이슈 여론조사. 각종 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 이슈프리핑. 자체보고서 사업
민중정책 연구원	주간 ‘정책과 논점’ 발행. ‘선거 정책공약 수립’ ‘비교섭단체 상하반기 정책연구용역 집행. 정책현안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의제위원회’ 등 의제 중심의 각종 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당내외유관단위와 정책세미나. 당원교육을 위한 ‘정책아카데미’ 진행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2018년 12월 설립, 2019년 1월 개소하여 2018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3)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세 번째 서면 인터뷰 주제는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에 관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 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는 정책연구소의 연구성과가 정당의 정책 및 비전 제시 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시된 것이었다.

<표 3-9>는 정책연구소와 국회 입법활동과의 연계에 관한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국회 의석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정책연구소와의 연계가 낮아지며 의석이 적은 소수정당일수록 정책연구소와의 연계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바른미래연구원 등 국회 의석수가 많은 정당 정책연구소는 국회 원내정당에 대한 지원보다는 중앙당과 시도당 등과의 관련된 업무 및 사업이 많았다. 주로 정당의 비전과 정책 등을 마련하는 정책연구소의 사업이 단기적 입법활동과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정책이슈에 대해서는 원내정당과의 의사소통 속에서 정책연구소 업무가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소수정당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민주평화연구원이나 정의정책연구소, 민중정책연구원 등 원내정당 규모가 적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일부 이슈나 의제에 연관되어 원내정당의 입법활동과 연계된 사업 및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원내정당이 교섭단체인가 아닌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석 이상의 원내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여 정책전문위원 등과 같은 경상보조금을 지원받아 원내 입법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교섭단체는 그러한 지원조직이 없기 때문에 원내정당이 긴급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조직, 중앙당이나 정책연구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소수정당 소속 정책연구소는 사안에 따라서는 원내정당에 대한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석이 많은 정당에 비해 국회 입법활동과의 연계가 높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정책연구소가 정책개발 등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원내정당의 정책기능과는

분리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소수정당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3-9> 2018년 정책연구소의 주요 정책의제와 국회 입법활동과의 연계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소 활동목적은 정당 이념과 노선을 바탕으로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조사·연구하는데 있고 국회 입법활동과 직접적 연계가 연구소 활동의 중심이 아님
여의도연구원	정당의 정책연구에 대한 의존이 높으며 이로 인한 입법 활동 연계비율도 여당 때보다 높음. 그 이유는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지원이 원칙적으로 사라짐에 따라 당과 소속 의원들의 연구원 의존도가 높아짐
바른미래연구원	정책연구소의 주요 정책은 대체적으로 입법 영역과 무관하기 때문에 주로 당내 내부소통 및 대안 논의를 중심으로 의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음. 일부 의제에서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 정책의제 실현에 주력하였음
민주평화연구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법안 제출 지원.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화하고 언론 홍보 등 정책연구소와 국회 입법활동과 협력 및 연계율이 높은 편임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 아젠다 및 의제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입법화에 미치는 수준이 개별적으로 다름
민중정책연구원	국회 입법활동과 진보진영 정책적 대안 개발에 균형을 맞춤. 당 소속 의원이 적은데다 진보진영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의 현장성이 진보정당의 힘이기 때문임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8년 12월 설립, 2019년 1월 개소하여 2018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2018년 각 정책연구소의 핵심사업은 무엇이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었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표 3-10>과 같다. 각 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18년 핵심사업은 정당의 정책적 지향과 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민주연구원의 경우에는 포용국가의 정책 실현이 핵심 사업으로 이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면서 당내·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업무에 주력하였다. 포용국가는 정부가 지향하는 비전으로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구원도 그러한 방향의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연구원의 2018년 핵심 사업은 지방선거 승리와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이었다. 지방선거에 있었던 2018년 상반기에는 선거에 대비하여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정책 및 공약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모색 업무를 추진하였다. 특히 좌편향 종북 이념과 노선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안보정책, 민생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바른미래연구원의 경우, 청년인재 양성, 정당통합,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일자리 창출전략 사업이 주력하였다.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청년정치학교와 함께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 이슈에 대한 사업, 합당과 정당 정체성 모색 등 정당의 비전과 가치를 모색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아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대안 마련 업무도 포함되었다.

민주평화연구원의 2018년 핵심 사업은 주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이 있었다. 2018년 이후 국회 핵심의제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주평화연구원은 연동형 비례제의 특성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원내정당과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중장기적 비전과 대안 마련을 2018년 핵심 사업을 추진하였다. 탈신자유주의시대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와 함께 제21대 총선에 대비하여 담론을 개발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대안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2018년에 설립된 민중정책연구원과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정당의 비전과 전략 창출을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중정책연구원은

연구진 충원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분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애국정책 전략연구원은 정책연구소 구성이 2018년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0> 2018년 정책연구소 핵심 사업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포용국가의 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당내외 정책 토론회
여의도연구원	상반기는 지방선거 대비 비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공약 개발.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 종북 이념과 노선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안보정책, 민생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바른미래 연구원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정치학교 및 청년정책연구 위원회 구성. 양당 통합논리 개발. 당 정체성 및 정치 노선 연구.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방안. 4차산업혁명 산업전략과 일자리 대책 마련
민주평화 연구원	연동형 비례제 연구 및 홍보와 교육
정의정책 연구소	탈신자유주의 비전 및 정책 수립. 21대 총선 대비 담론 개발과 의제 설정 사업. 대안경제정책 수립 사업
민중정책 연구원	2018년도 설립되어 설립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정책연구 위원 충원 및 정책연구 역량 강화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2018년 12월 설립, 2019년 1월 개소하여 2018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각 정책연구소의 2018년 핵심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책연구소와 중앙당 사이의 의견 조율과 협조 등 의사결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까?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하였다. 앞서 질문한 국회 입법활동과의 연계 등과 함께 정책연구소 사업과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다.

<표 3-11>에서 정리된 의사결정의 공통점은 정책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의사소통을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점이며 차이는 정책연구소장 이외의 구성원이 중앙당 의사소통에 참여하는가에 있었다. 먼저 민주연구원의 업무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앙당과의 업무 협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었다. 대체로 정책연구소 주요 업무의 큰 틀은 최고 위원회와 연구원장 사이에서 논의되어 결정되며 그 이후에 정책연구소 연구 위원이 사안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업무 및 사업의 추진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였다.

여의도연구원은 주 2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보고하는 것을 정례화 하고 있다. 이 중 당대표가 겸임하는 정책연구소 이사장에 대한 당대표 보고가 가장 핵심적 소통채널이다. 당대표 보고는 비정기적이지만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건의와 지시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바른미래연구원은 주 1회 중앙당의 실국장연석회의에 담당 실장이 참여 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연구원 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정보가 교류되며 필요시 연구원 성과물을 제공, 당 활동에 반영되도록 한다. 민주평화연구원은 당 최고회의에 참여하여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 중앙당이 정책의제를 결정하고 정책연구소와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매주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역마다 강연을 지원하거나 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주간 업무조정회의가 주요 의사소통 채널이다. 업무조정 회의를 통해 중앙당과 정책연구소간에 정례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각 사업에 필요한 단위와 기획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연구보고서, 월례보고서를 공유하고 입법안에 반영되도록 한다. 민중정책연구원은 당과 연구소가 일체성을 갖도록 운영한다. 정책위의장이 겸임하는 정책연구소장이 대표단회의, 당무위, 중앙위에 참여하며, 대의원 대회에는 정책연구소 원장과 부원장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또한 정책실장은 당 기획조정회의에, 연구원 전원은 당직자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러한 성과물인 주간 ‘정책과 논점’ 등을 홈페이지와 SNS로 배포, 대표단 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포하는 과정을 거친다.

<표 3-11> 2018년 정책연구소의 중앙당과의 의견 조율 및 협조 방식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중앙당과의 업무 협조는 사안에 따라 이루어짐. 큰 틀은 최고위원회와 연구원장 간 논의되며 그 이후 연구위원의 해당 위원회 참여
여의도 연구원	주2회 최고위원회의 정례 개최 직접 보고. 당대표가 겸임하는 정책 연구소 이사장에게 하는 대표 보고가 가장 핵심적 소통채널. 당대표 보고는 비정기적이지만 빈번하며 건의와 지시가 교차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당 정책위와 정책 협의, ‘2018 지선 정책공약 개발단’ 운영 및 여의도연구원과 정책위가 같이 워크숍 개최, 정책수요와 대비활동을 진행
바른미래 연구원	주1회 중앙당 실국장연석회의에 담당 실장 참여. 연구원 활동현황을 중앙당과 정보 교류하며 필요시 연구원이 생산한 성과물을 제공, 당 활동에 반영되도록 함. 선거시기 선대본 파견 또는 정책실과 결합. 연구보고서 등 공보실, 조직국을 통해 배포
민주평화 연구원	당 최고회의 참여, 정책 방향 설명. 중앙당의 정책의제 결정과 이에 대한 논의 및 정책개발. 매주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지역마다 강연 지원 및 자료집 발간. 정기적 월례회의 및 사업보고
정의정책 연구소	주간 업무조정회의를 통해 중앙당과 연구소간 정례적 소통. 필요시 필요한 단위와 기획회의, 간담회 등 진행. 여론조사, 연구보고서, 월례보고서를 공유, 입법안 반영
민중정책 연구원	당과 연구소의 일체성 갖도록 운영. 정책위의장이 겸임하는 정책 연구소장이 대표단회의,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원장, 부원장 참여, 정기 업무보고 정책실장은 당 기획조정회의에, 연구원 전원은 당직자회의에 참석, 업무보고, 주간 정책과 논점 등을 홈페이지와 SNS로 배포, 대표단 교육 등 체계적 배포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2018년 12월 설립, 2019년 1월 개소하여 2018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중앙당과의 조율,협조 활동이 없었다

이번에는 2018년 연구인력 및 직원 현황 및 업무 분담 등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은 <표 3-12>와 같다.

민주연구원의 연구직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되었다. 연구직 채용은 전공에 따라 분야별 채용의 절차를 거치며 그에 따라 학력에 따른 업무 및 사업이 분담되지 않았다. 기타 연구보조 및 계약직은 분야에 따라 학사 혹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자격요건으로 채용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된 외부파견은 연구소 소속 인력이 당내 조직에 파견된 인원을 말한다. 여의도연구원은 업무 분담은 직급에 따라 다르며 각각 연구 및 사업의 체계적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각 실과 센터에는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 직급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채용요건은 학력과 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인력과 직원은 고용계약시 분리하여 고용되며 인사규정상 직원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은 1명으로 자체 고용한 인력이었다. 그러나 외부파견 인력은 없었다.

바른미래연구원 연구진도 학력별로 업무 및 사업을 명확히 분담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학력뿐만 아니라 경력 및 사회활동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치하기도 한다. 부서별 역할, 연구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개발 및 연구는 학력별로 배치되거나 전공분야에 따라 석사급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2018년에는 연구원으로 모두 채용되었으며 자체고용이나 외부 파견 직원은 없었다.

민주평화연구원도 업무 및 사업이 분담되어 운영되었다. 그 구성에서는 연구 및 실무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 부문은 분야별로 분담되었다. 그 채용과정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충원되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성별, 연령, 학력별 등 어떤 조건을 들어 구성원들의

업무 차별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연구소 재정 수준에 맞게 인원이 배정되었으며 파견과 상관없이 모두 연구소에서 채용하였다.

민중정책연구원은 재정여건상 업무 분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변하였다. 1명의 연구위원이 여러 분야를 맡았다. 그에 따라 업무 및 사업은 학력별 업무 분담보다는 주로 자질과 능력, 정책적 관심, 유권분야가 주요 기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분담이 이루어졌다. 직원들은 모두 자체 고용되었으며 연구소 채용 이전부터 당에서 정책분야를 맡았던 당원들을 채용하였다.

<표 3-12> 2018년 정책연구소의 연구인력 및 직원 현황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연구직은 석사 이상의 학력 기준으로 채용. 전공에 따라 분야별 채용이 이루어지며 학력에 따른 업무 및 사업 분담이 되지 않음. 기타 연구보조 및 계약직은 분야에 따라 학사 혹은 석사이상의 자격요건으로 채용함
여의도연구원	업무 분담은 직급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연구 및 사업의 체계적 분담함. 각 실과 센터별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 직급이 있음. 이에 대한 채용 요건은 학력과 경력 등 차이가 있음
바른미래연구원	학력별 업무 및 사업이 명확히 분담되지 않음. 업무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학력 뿐만 아니라 경력 및 사회활동에 따라 업무가 배치되기도 함. 다만, 부서별 역할, 연구 방향성 등 정책개발 및 연구가 학력별로 배치되거나 전공분야에 따라 석사급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민주평화연구원	업무 및 사업이 분담되었음. 연구 및 실무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 부문은 분야별로 분담되었음
정의정책연구소	성별, 연령, 학력별 등 어떤 조건을 들어 구성원들의 업무 차별이 없음
민중정책연구원	재정여건상 1명의 연구위원이 여러 분야를 맡고 있으며 업무분담이 어려움. 학력별 업무 구분보다는 주로 자질과 능력, 정책적 관심, 유권분야 위주로 업무 분담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8년 12월 설립, 2019년 1월 개소하여 2018년 연구인력 및 직원이 없었다

정책연구소 재정 부문에도 질문하였다. 특히 기타수입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표 3-13>은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총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총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른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공통적인 답변은 별도의 기타수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기타수입이 있는 정책연구소의 공통된 답변은 기타수입은 예금이자 및 세금환급금 등이었으며 이들의 지출방식과 항목은 정당지원금과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연구소 기타수입액의 차이는 정당보조금 금액이 많은 정책연구소는 예금이자 등의 금액이 클 것이고 그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금액 이외의 재정적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13> 2018년 정책연구소 활동경비 중 기타수입의 총당 및 지출 방식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기타수입은 세금환급금, 예금이자 등이었음. 정당지원금과 활동경비의 지출방식과 항목은 동일함
여의도연구원	기타수입은 입출금 통장의 이자 이외에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수입이 없음
바른미래연구원	기타수입은 정당지원금과 전년이월금에 대한 이자수입임. 정당지원금과 동일한 항목과 방식으로 지출함
민주평화연구원	모름
정의정책연구소	기타수입은 이자이며 지출방식에는 차이가 없음
민중정책연구원	기타수입 없었음
애국정책 전략연구원	2018년 12월 설립, 2019년 1월 개소하여 2018년 기타수입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표 3-14>와 같이 정당 정책연구소의 교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한해 정책연구소의 네트워킹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질문하였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기 때문에 각 정책연구소들은 지방선거 준비에 주력하는 활동을 하여, 교류 및 해외 네트워킹 등의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일부 정책연구소들은 다른 정당의 정책연구소 및 해외 싱크탱크 및 정책연구소와의 교류를 진행하거나 추진하였다.

민주연구원은 중국 당교 등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그 방안을 협의하는 등 네트워킹 활동을 하였다. 또한 미국 랜드연구소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와의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여의도연구원은 2018년 지방선거로 인해 외부와의 교류 업무가 활발하지 않았다. 네트워킹 활동은 여의도연구원장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 활동은 한반도선진화재단 및 주요 중도보수성향의 싱크탱크와 정책연구기관을 순방하여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등 유관 학술단체 세미나 등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바른미래연구원은 2018년에는 국내·외 정책연구소와 교류활동은 없었다. 2019년 들어 국회미래연구원 제안으로 정당 정책연구소 등과 정책연구네트워크 구성 후 협력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정책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다른 정책연구소와 비정기적인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 이외에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민중정책연구원의 2018년 주요 교류활동은 북한 조선사민당 산하 연구소와 교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심양에서 만나 교류를 협의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진행하지 못 하였다.

<표 3-14> 2018년 국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응답내용
민주연구원	중국 당교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방문 및 협의. 미국 랜드연구소 초청 간담회 개최. 정책개발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와의 정책간담회 실시 및 정책과제 논의
여의도연구원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외부 연구소와의 교류는 없었음. 다만 여의도연구원장이 한반도선진화재단 및 주요 중도보수성향의 싱크탱크와 정책연구기관 순방,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협의.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등 유관 학술단체 세미나 등 지속 참여
바른미래연구원	2018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 2019년 들어 국회미래연구원 제안으로 정당 정책연구소 등과 정책연구네트워크 구성 후 협력활동 중
민주평화연구원	-
정의정책연구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다른 정책연구소와 비정기적인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여하였음.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됨
민중정책연구원	북한 조선사민당 산하 연구소와 교류하기로 협의되었으나 남북관계 담보로 진행하지 못함
애국정책전략연구원	2018년 12월 설립, 2019년 1월 개소하여 2018년에는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네트워크가 없었음

IV. 정책 제언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정당 산하의 정책연구소는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제도화된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당과의 활발한 정책적 연계가 이루어졌을 때 정당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정당을 유권자가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활동을 선거시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슈에 대응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정당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중앙당 인력과 국회 보좌진만이 아니라 정책연구소의 활동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연구는 정책연구소를 활용한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 정당의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소와의 적극적 의사소통과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된 정책연구소의 법적 지위는 그 정당 산하 기관이지만 그 업무와 사업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정책연구소가 정당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조직이지만 그것 자체가 당무와 직접적 관련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연구소가 학술적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비전과 가치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연구소의 활동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정당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에게 제공하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법적 취지는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한다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정당에게 주고 그 중 30%를 정책연구소가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정당과 정책연구소와의 정책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정책적 연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과 의사결정이 정당 중심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한다는 데 있다. 거의 대부분의 정당이 정책연구소장을 당대표 또는 당대표의 의사에 따라 임명된다. 이는 정책연구소가 정당 소속임을 의미

하는 것이지만 그 의사결정 자체가 종속됨을 의미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소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지출방식을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하여 재정적 독립을 기반으로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 정당 보조금 배분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연구소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조건들에 부합되었을 때 지급된다. 그 중 정치자금법이 그 지급 기준을 명확히 언급한 정치관계법이다. 정치자금법 제27조는 보조금(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해당 금액의 50%를 균등 분배, 비교섭단체 중 5석 이상의 정당에게 해당 금액의 5%를, 5석 미만의 정당에게 해당 금액의 2%를 배분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국고보조금 지급의 근거는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의 반을 동등하게 지급하는 동시에, 비교섭단체 중 5석 이상을 갖는 정당은 국고보조금의 5%를, 그리고 2석 미만의 비교섭단체는 국고보조금의 2%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별 차등 지급은 국회법에 근거한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의석 수가 적은 비교섭단체 정당보다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배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회법 제33조에 명시된 20석이라는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적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당에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이 유권자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면, 국고보조금의 지급 기준 역시 유권자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한 정당이 선거에서 유권자로부터 받은 지지율이 30%이고 의석 수가 국회 20%라면, 국고보조금을 제공하는 한 그러한 기준에서 지급되어야 공정한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활성화가 정책정당화를 향하여 있고 그것이 정책연구소의 역할이라면 적어도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정당정책연구소는 정책 비전과 가치를 연구 개발하여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정당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설립취지를 고려해야한다. 인물이나 파벌 등 지역 연고를

중심으로 한 정쟁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 정당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정책정당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기간과 비선거기간의 정책연구소의 업무에는 차이보다는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독일의 정책연구소는 재정의 90% 이상을 정부의 국고로 충당되지만 그 지급은 정당이 아니라 정책연구소에 직접 지급되어 정당 재정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자율성은 정당정책연구소가 어느 한쪽의 당파적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익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정당정책연구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정책연구소 구성원은 선거기간에 불가피하게 정당 선거운동에 동원되거나 파견형태로 차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정책연구소 본연의 업무인 정책개발 보다는 중앙당이나 주요 정치인가 지시하는 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여론조사나 선거구 분석 등에 주력한 나머지, 정책개발 업무의 연속성보다는 단기적 사업에 몰입하게 된다.

넷째, 정당의 역할과 기능 중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시민정치교육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당은 유권자에게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연구소의 활동에서 교육연수 관련 활동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실적도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이었다. 정책연구소는 특정 정당 소속의 기관으로서 특정 정파만의 이익을 대변 하기도 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되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고 지지자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당의지지 기반을 공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많은 정당 관련 정책연구소 및 싱크탱크는 정책산실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정치교육의 기능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또 다른 민주주의 교육의 공적 재화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당의 정책연구소도 시민정치교육 기능을 허용하여 차세대 인재 발굴과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당이나 정책연구소가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공개되고 알려지게 되어 정당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으로 정책연구소가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연구소가 정책개발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제도적 개선과 발전은 정책전문기관으로서 연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책연구소 스스로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책개발비의 절대적 증가를 넘어서 연구 및 정책개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구성과의 양적 증가가 반드시 정책연구소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연구소가 독립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진의 확충과 정책연구소의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다원화·다변화 하는 현실에서 자체 연구인력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 연구소, 싱크탱크 등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와 같은 단기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연구자로서 정당의 중장기적 비전 또는 정책을 연구하여 정책연구소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며 정치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록 1> 201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에 관한 서면 인터뷰

정책연구소의 구체적인 연간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3개의 대주제 아래 총 10개의 항목에 관한 서면 인터뷰는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서면 인터뷰 대상은 정책연구소장, 부소장과 연구위원으로 진행되었으나 각 정책연구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답변한 직급과 인원수에 차이가 있다.

<표> 서면 인터뷰 답변 현황

	소장	부소장	연구위원	합계
민주연구원	-	-	1	1
여의도연구원	-	-	1	1
바른미래연구원	-	-	3	3
민주평화연구원	-	1	1	2
정의정책연구원	-	-	2*	2
민중정책연구원	1	1	1	3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	1*	1
합 계	1	2	10	13

* 정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명 중 1명은 연구기획실장이며, 애국정책전략연구원 1명은 상근이사임.

서면 인터뷰 질문지와 각 정책연구소의 답변은 <표>에게 게시된 정책연구소 순서로 별도의 수정 없이 답변 그대로 게재되었다.

「201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를 위한 조사

한국정당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1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 운영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락을 드립니다. 설문에 대한 귀 정책연구소의 의견은 「2018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 실적 분석 연구」 용역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31일

* 다음의 10개 항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정책연구소의 서면 인터뷰 내용은 정책연구소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편집 없이 그대로 게재됩니다.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까?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 었습니까?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다까?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 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른지?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1> 민주연구원 서면 인터뷰 [총 1명]

*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장기적 정책개발과 정당의 담론개발 및 연구, 그리고 선거시기 핵심 의제 연구개발의 측면에서 정당발전의 토대역할을 한다고 판단함. 재정 및 인사의 실질적 독립이 필요함.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적 목표: 이슈 및 공론화 의제에 대한 대응
 - 장기적 목표: 싱크탱크로서의 정책역량 및 의제확산 역량 제고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급하신 3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자립과 자율성에 기초할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연구와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음.
 - 현재 정당연구소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정당보조금의 30%를 정당연구소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힘들다면 15~20%로 현실화해서 정당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선거시기: 공식적인 선거운동시기에는 지역파견이나 중앙당 파견을 통해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 정책수요조사 및 핵심정책 개발에 주력함
- 선거없는 시기: 각 분야별로 주요 의제발굴 및 정책연구. 의원실 및 관련단체와 함께 각종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적 사업은 ‘이슈브리핑’, ‘연구보고서’, 부정기적으로는 각종 현안 및 당정책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까?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8년 주요의제는 ‘포용국가 실현방안’이었음. 연구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포용노선 - 역량중심 프레임>, <대한민국 중심 정당의 혁신적 포용노선 - 더불어 민주당의 길>, <혁신적 포용의 비전과 어젠다-새 100년의 꿈, 진정한 광복 2045> 등 3권 연구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음
- 정책연구소의 활동목적은 해당 정당의 이념과 노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주요 아젠다와 국정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조사, 연구하는데 있음. 국회 입법활동과 직접적인 연계가 연구소 활동의 중점은 아님(정관상 민주연구원 주요 사업: 1.더불어민주당 이념과 노선 및 그에 관한 정책연구, 2. 한국 사회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연구, 3. 정책노선에 입각한 인재 양성 및 교육, 4. 당 전략기획위원회, 당 정책위원회 등과의 공동 연구 수행 등)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5번과 동일. 포용국가의 정책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와 당내외 정책토론회를 핵심사업으로 진행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중앙당과의 업무협조는 사안에 따라 이루어짐. 큰 틀에서는 최고위원회와 연구원장 간 논의되고, 이후 TF나 연구위원의 해당 위원회 참여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연구직의 경우, 학력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어있지 않음. 연구위원은 전공에 따라 해당분야에 채용됨. 연구위원은 석사이상이 채용기준임. 기타 연구보조 혹은 계약직은 분야에 따라 학사 혹은 석사이상이 자격 요건
 -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외부파견은 연구소 소속으로 당내 조직에 파견한 인원을 말함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릅니까?
- 기타수입은 세금환급금, 예금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지원금과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동일.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당교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방문 및 협의, 랜드연구소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정책개발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한국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등)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정책과제를 논의한 바 있음

<부록 1-2> 여의도연구원 서면 인터뷰 [총 1명]

*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든 정책연구소들은 당과 일정한 연관성을 맺고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 운영 및 활동에 있어 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 이에 정당법을 개정하든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확보·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함
 - 여의도연구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과 향후 정책연구소로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2004.3.12.)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은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의무 설립을 하도록 입법화 되었음
 - 그에 따라 1995.2월 출범한 한국 최초의 정당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국고지원을 받는 정당정책연구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음
 -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보수정당으로서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한 보수혁명을 지켜 보면서 싱크탱크의 위력과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
 - 둘째, 개혁이란 국정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민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압축적인 성장과정에서 강화된 관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스스로 견제하고자 했었음

- 이후 여의도연구원은 박세일 등 여러 원장을 거치면서 당의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면서 성장 발전해 왔음
- 특히, 당의 위기시마다 비전위원회를 통해 당의 새로운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는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의 정책정당화에 나름대로 이바지했다고 평가 가능
-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는 공통적으로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하여 독자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정책을 연구개발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법적 제약 등으로 인해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당법과 정치관계법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바탕 위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함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의도연구원의 ‘단기 목표’는 자유한국당의 당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와 제3조(연구소의 사업)에 명시되어 있음
 - 목적: 정책연구소는 국가와 당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 ①국가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②당의 이념과 가치 정립, ③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 ④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⑤청년 지도자 양성, ⑥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지식네트워크 구축, ⑦각 위원회 활동 지원, ⑧정책현안 여론조사 활동 등
 - 여의도연구원의 ‘장기 목표’는 5대 사명과 기능으로 압축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보수주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이념과 가치를 정립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을 ‘이념·가치 정당’으로 견인
 - 둘째, 자유한국당 정책기구가 현안 중심의 정책적 대응에 중점을 둔다면, 여의도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및 전략’ 연구로 특화

- 셋째, 여론조사, 뉴미디어 분석 등을 통해 파악된 국민의 요구를 당 정책에 반영하여 당의 민주성과 반응성을 제고하고, 당이 민심과 거리가 있을 경우 경보(alarm) 기능 수행 및 당의 노선과 정책 변화를 선도
 - 넷째, 국내외 정책연구소와 시민단체 등과의 활성화된 교류협력을 통해 정책생태계의 정책적 논의를 정치권으로 수렴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의 품질 향상 도모
 - 다섯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에 기반한 시민정치교육을 활성화 하고, 청년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교육정당’의 이상을 실현
 - 이에, 현 시점에서 여의도연구원의 당면 목표와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구원 변화: 여의도연구원의 현재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 국내외 정책연구소에 대한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 여의도연구원의 혁신과제와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직제 개편·운영 혁신·인력 확충 등 전 방위에 걸쳐 과감한 일대 혁신을 추진
 - 둘째, 당의 변화 지원 : 당의 낡은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책과 노선을 재정립하며, 정치행태와 관행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
 - 셋째, 정책혁신 선도: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는 등 당의 정책혁신을 선도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정책연구소의 역량 강화는 △연구 /전문성 강화,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 등이며, 이중 가장 시급한 사항은 재정 자립성 확립이라고 판단
 - 재정 자립성의 확보된다면,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으며, 정당보조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정당정책연구소의 연구와 운영을 위해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연구 역량과 전문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현실은 정책연구소에 쓰여야 할 비용이 당의 운영을 위해 전용된다거나 하는 등 100% 정책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 그리고 재정 자립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현재 정책연구소는 여타의 수익 사업 없이 운영의 100%를 당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 이것이 재정 자립도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
 - 독일과 미국 사례를 보면, 독일 정당연구소의 경우 1년 예산이 1500억원에 가깝고(90%가 국고보조), 미국의 헤리티지나 브루킹스는 정당의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독지가들의 출연으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재정으로 운영
 -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정당연구소는 독일과 미국의 정책연구소의 정책생산능력과 탄탄한 인력구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당을 거치지 않고 정당연구소로 직접 지원하거나 동시에 정당연구소도 fund raising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함
 - 즉, 제한적 수입 사업(출판물 유상 판매, 교육비 징수, 외부 연구용역 수주 등)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다만, 그것이 시민교육 및 당원교육, 그리고 정책 연구개발 등에 한정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이 필요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떤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선거가 있는 시기’의 업무/사업은 다음과 같음.
 - 선거가 임박하면 여의도연구원은 당에 앞서 선도적으로 교수, 연구원, 시민운동가 등을 망라하여 분야별로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원과 당의 정책기구도 참여시켜 정책의 연구개발 작업을 수행
 - 비전위를 통한 연구성과는 분야별(경제, 산업통상, 정치행정, 교육, 과학기술, 소상공인, 보건복지, 통일외교, 환경노동, 에너지, 문화체육관광, 여성청소년)로 집대성하고, 출판하여 당 정책위의 정책과 공약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
 -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 전 여의도연구원에서

<비전위원회>가 조직 구성되어 1차로 정책 개발 작업을 진행했고, 그와 동시에 당 정책위가 주도하여 공약개발단 구성하였음. 여기에 여의도연구원 연구원들이 분야별로 직접 참여하여 국회의원, 당의 정책기구와 정책 및 공약개발을 위해 협업을 진행

- 이와 함께, 선거 운동 전 정책과 공약 개발 이외에 선거가 임박했을 당시의 주요 업무와 활동으로는 정책이슈별로 당의 입장을 요약 정리한 포지션페이퍼를 발행하고, 또한 후보들에게 배부하는 각종 정책참고 자료의 작성에 기여하고 있음

○ ‘선거가 없는 시기’의 업무/사업은 다음과 같음.

- 선거가 없는 시기의 정책연구활동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음. 즉, 연구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동연구와 연구원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개별연구로 구분됨
-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해온 대표적인 공동연구로는 ‘정부정책 평가’와 ‘이슈브리프’, ‘현안 보고’ 등이 있으며, 연구원들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하여, 전문분야별로 정부정책의 적실성과 공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자료집으로 제작함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체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연구원의 사업에는 보고서 작성·발간과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이 있음
 - 여의도연구원 구성원들의 연구성과는 종류별로 대별(大別)하면 정기간행물 형식의 이슈브리프, 보고서 양식의 현안보고, 외부기고자가 기고하는 여연포커스, 출판물 형식의 정책보고서 4종으로 구별
 - 이와 함께, 외부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개최되는 정책세미나와 간담회, 그리고 좀더 큰 규모의 국민대토론회 등도 있음. 이들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후에는 거기서 발표한 내용들인 발제문과 토론문 등을 엮어 자료집 형태로 <세미나 자료집>을 발행
- 정기적 사업에는 출판물로 <이슈브리프> 발간이 있음
 - <이슈브리프>는 여의도연구원의 대표적인 정기적 사업으로 주간 내지 격주 간격으로 발행되며, 외부 기고자의 원고를 수록하기도

하나 대부분 여의도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직접 집필

- 매호마다 10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3~4편 내외의 브리프(brief)가 수록되고, 최고위원에서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당원들 대상으로 배부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됨
- 부정기적 사업에는 현안보고, 정책보고서 발간 등이 있음
 - <현안보고>, <여연포커스>, <정책보고서>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대표적인 여의도연구원의 발간물
 - 우선 <현안보고>는 소속 연구원들이 집필하는 가장 보편적인 연구 결과물 양식으로 매번 발생하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담고 있는 20페이지 이내의 정책보고서로서, 주로 당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및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
 - <여연포커스>는 정책현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심층적 분석결과와 제안이 필요한 경우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발행하며 통상 출판되어 국회의원 들에게 배부
 - <정책보고서>는 외부 용역, 내부 집필, 연구원 내외 정책전문가의 협업 등 다양한 집필진에 의한 장기간의 연구성과를 도서 형태로 발행하며 페이지 수에 제한이 없음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에 여의도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연구와 정책의제별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지방선거 대비 정책공약 개발: 일차로 비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지방 선거에 대비한 분야별(경제 전반, 산업 통상, 통일/외교/국방, 정치행정/지방자치, 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청년정책, 과학기술, 방송통신/SNS, 환경/노동, 에너지정책, 중소기업인 정책) 정책을 개발하고, 그를 바탕으로 당 정책위와의 협력 하에 지방선거 대비 공약으로 구체화해 대국민 홍보 작업을 진행

- ②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과 1년 6개월 간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 그리고 좌편향되고 종북화된 이념과 노선 등에 대한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
 - ③ 자유한국당의 대안을 마련: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의 비판적 평가를 기반으로 “아이노믹스”라는 당의 경제정책을 구상했고, 대북통일(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기반으로 “PI(peace initiatives)”라는 안보통일정책을 개발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대체할 “I-politics”를 당과의 협의 하에 개발, 발표
 - ④ 보수정권 9년의 재평가를 통한 대안 모색: 지난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정권의 집권기간을 회고하며 그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연구개발에 대한 시사점 발견하는 후속 보고서를 발간
 - ⑤ 분야별 포지션 페이퍼 및 현안보고서 작성: 경제, 통상, 외교안보, 대북통일,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립하고 민주당과의 입장을 비교분석하는 보고서 작성
 - ⑥ 한반도 핵위기와 대응전략 마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그에 대비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 관련 논란을 우리당의 입장에 맞게 재정립하고, 외교안보 사안으로서 북핵도발에 따른 미국, 중국, UN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
-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의 연구물에 대한 의존이 높으며, 이로 인한 입법활동의 연계비율도 여당 때보다 높은 상황
- 자유한국당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야당이 되면서, 우리당에 대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지원이 원칙적으로 사라짐에 따라, 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연구원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음
 - 여의도연구원의 정책연구개발 활동이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반영되는 비중이 큰 분야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쇼에 입각한 대북통일정책 및 북한이 도발한 핵위기로 긴장도가 커진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분야,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문제점으로 인해 경제지표를 면밀히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경제분야 등임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2018년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라서, 전반기에는 주로 외부전문가와 <비전위원회>를 구성해 협업을 통한 정책개발 활동을 진행하였음
 - 지방 선거에 대비한 분야별 정책공약 개발 작업을 진행. 비전위원회는 총 13개 분야로 나누었고, 세부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경제 전반, 산업통상, 통일/외교/국방, 정치행정/지방자치, 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청년정책, 과학기술, 방송통신/SNS, 환경/노동, 에너지정책, 중소기업인 정책 등
 - 이들 분야에서 일차적으로 기초작업인 분야별 정책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 정책위의와의 협력 하에 구체적 공약으로 생산해, 책자로 발간
 - 문재인 정부 2년여 동안 좌편향되고 중복화된 이념과 노선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안보정책, 그리고 민생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포용성장 등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당의 경제정책인 “아이노믹스”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홍보
 - 문정권의 대북통일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문제점과 ‘김정은 바라기’, 그리고 굴종적이고 비굴한 평화를 고발하고, 우리당의 한미동맹과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당당한 평화정책인 “PI(peace initiatives)”를 개발
 -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좌파정책과 反민생정책을 대체할 우리당의 정책인 “I-politics”를 당과의 협의 하에 개발, 발표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여의도연구원은 당 지도부(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 등) 직보 내지는 현안 보고, 정책위의와의 정책 협의, 국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거나 간사 등 국회의원과의 협의 등 중앙당과 당소속 국회의원과의 다양한 소통 및 채널을 유지·활용하고 있음
 - 다양한 소통 채널 가운데 당지도부, 즉 최고위원회의 보고는 최고위원회의가 주 2회 정례적으로 개최됨으로 정기적 성격을 갖는 소통 채널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종의 현안보고서나 이슈브리프 배부, 원장 발언 등을 통해 정책사안에 대한 여의도연구원의 분석결과와 대응방안을 보고

-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을 겸임하는 당 대표 보고는 여의도연구원으로서는 중앙당과의 가장 핵심적인 소통채널이며, 여연 현안보고의 가장 비중있는 독자 역시 '당 대표'임. 이에 당 대표 보고는 비정기적이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며, 당 대표와 여연과의 관계는 건의와 지시가 교차하는 쌍방적인 관계임
- 정책위와의 정책 협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치루기 위해, '2018 지선 정책공약 개발단' 등에 참여하여 분야별 정책개발을 진행 했고, 또한 정기국회 전 여의도연구원과 정책위가 워크숍을 개최해 2018년 국회에서 제기될 정책 수요와 그에 대한 대비활동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양자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예상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여의도연구원은 이사장님과 원장님 이하 6실 2센터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6실에는 경제정책실, 사회정책실, 전략기획실, 연구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 그리고 여론조사실 등이 있고, 2센터에는 안보통일센터, 청년정책센터 등이 있음
 - 각 실과 센터별로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의 직급이 있고, 각각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①수석연구위원은 박사취득 후 연구경력 10년 이상 및 동일한 경력의 소유자, ②연구위원은 박사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 및 동일한 경력의 소유자, ③선임연구원은 석사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및 동일한 경력의 소유자, ④연구원은 석사취득 및 취득 예정자 등의 경력 소유자 등
 - 업무는 각각의 직급에 따라 고르게 배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구

및 사업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중

-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 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연구인력과 직원은 인사규정의 직렬 구분에 따라 고용계약시 분리하여 고용하고 있음. 인사규정상 직원에 해당하는 연구원 인력은 1명으로 정관 및 인사규정상 임용기준에 따라 자체 고용한 인력임. 별도의 외부 파견 인력은 없음.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는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른가요?
 - 여의도연구원의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과 전년이월금이 전부이므로,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 즉, 통상적인 입출금 통장과 은행 이자 외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연구원 이전으로 회계상 발생) 등 회계상 기입을 위한 항목으로 활동경비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수입은 전혀 없음. 따라서 별도의 지출방식이나 항목 역시도 존재하지 않음.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에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거인 지방선거가 있었던 바, 외부 연구소와의 교류는 없었음
 -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정책 및 공약개발 등 당 내부의 정책연구개발 소요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정책 연구소나 국내외 정책연구소 등과의 교류협력이나 기타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어려웠음
 - 특히, 지방선거가 우리당의 패배로 끝이 나면서 하반기에는 당내에 분란과 논란을 추스르면서 가기 위해 새로운 비대위 지도부가 출범하고 그에 발맞춘 연구원 체제도 변화에 발맞춰 가동되던 시기
 -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주요한 중도보수성향의

- 싱크탱크와 정책연구기관을 순방하며 변화된 정치상황 하에서 여의도
연구원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협의
- 이와 함께 정당학회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등 유관 학술단체의 세미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최근 학술 이슈들의 트렌드를 배우고 익힘

<부록 1-3> 바른미래연구원 서면 인터뷰 [총 3명]

* 바른미래연구원 연구위원1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정당법」에 의하면, 정책연구소는 일반국민 대상 정치 및 민주 시민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됨. 또한 현행법 상 정책연구소가 외부로부터의 후원금 모집이 불가한데 이 또한 개정이 요구됨.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른미래연구원의 장기적 목표는 당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교육 활동과 인재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단기적 목표로는 △당의 이념, 가치 및 비전 정립에 관한 연구,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당원 및 국민 대상 정치의식 함양 교육,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 정책 기초자료 생성 및 검증, △타 정당 및 정책연구기관과의 국제교류를 통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 정책연구소는 무엇보다도 연구/전문성 강화를 통해 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충분한 자체 연구인력 확보, 둘째 외부 정책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킹 형성, 셋째 타 정당 연구소와의 정책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서는 정당 정책연구소가 단순히 중앙당 조직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직의 독립성 유지도 동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됨.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떤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당의 선거전략 및 선거공약 개발 활동을 진행함. 이를 위해 지방선거에 필요한 정책공약 개발을 위해 당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기도 함. 또한 해당 정책 전문가들에게 정책자문과 정책제언을 받아 선거공약화 하는 노력을 기울임. 선거 즈음에는 각 지역별 선거환경 분석 및 예비후보자용 선거 기초데이터 정비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당면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연구자들이 ‘이슈페이퍼’ 작성 및 발송,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청년정치학교’ 실시, 주요하고 긴급한 정책현안에 대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정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 입니까?
 - 정기적 사업으로는 정책이슈 여론조사, 이슈페이퍼 생산, 청년정치학교 운영, 반연간지 발간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음. 부정기적 사업으로는 정책현안 관련 긴급세미나, 각종 현안 관련 연구용역 수행 등을 진행하고 있음.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8년 바른미래연구원의 주요 정책의제는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과 전략 개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이라고 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입법 영역과 무관하기에 당내 주요 의사결정자들과의 내부소통 및 대안논의를 중심으로 의제 활성화를 위해 주력함. 후자의 경우 국회 내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 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국회 입법을 위해 타정당과의 정책연대 및 대 국민홍보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벌여옴.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 었습니까?

- 청년인재양성을 위해 제3기 청년정치학교를 6개월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해 왔고 청년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정책 개발 노력을 지속해 옴. 또한 본 연구원에서는 ARS를 활용한 월2회 정책수요 관련 정기여론 조사를 실시해 각종 언론사와 당 내 주요 관계자들에 제공해 국민들의 여론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옴.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 협조를 진행하셨습니까?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본 연구원은 중앙당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주1회 진행되고 있는 중앙당 실국장 연석회의에 담당 실장이 참석해 옴. 이를 통해 중앙당과 연구원의 활동현황에 대해 정보교류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구원이 생산한 다양한 성과물들을 제공하여 당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공통답변] 학력별로 업무/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음. 업무/사업에 따라 학력 뿐만 아니라 경력 및 사회활동에 따라 업무가 배치되기도 함. 다만, 부서별 역할, 연구방향성 등에 따라 정책개발사업과 연구들은 학력별로 배치하거나,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석사급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공통답변] 바른미래연구원은 모두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연구원 자체고용 및 외부파견 직원은 없음.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릅니까?

[공통답변] 바른미래연구원은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와의 통합으로 2018년 12월부터 공식업무를 수행하였음. 그에 따라 2018년 기타수입은 정당지원금과 전년이월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짐.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과 동일한 지출방식과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음.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은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상반기에는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의 제안으로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민주평화연구원, 정의연구원 등 5당 정책연구원과의 정책연구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수시로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음. 현재는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공동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에 있음.

* 바른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당법」에 따른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는 연구원이 정당의 생산적 실용적 정책 개발에 기여
 - 정책연구소 활동이 보다 효율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는 별개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 강화 필요
 - 법적 제약으로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적 목표 : 당의 생존 기반 마련
 - 정책 생산성 강화
 - 각종 선거 핵심공약 수립
 - 선거 공약집 설계
 - 주요 이슈 또는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
 - 정기토론회 지속 추진 및 상황에 따른 긴급토론회 활성화
 - 장기적 목표 : 개혁세력의 집권
 - 당의 비전 마련
 - 정체성 확립 (기득권 vs 개혁 세력)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의 독립성 유지
 - 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연구소 순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
 - 현안 중심 대응보다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비전과 전략 마련에 집중할 필요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떤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

- 연구원 조직을 정책·공약 개발 등 핵심역량과 총선과제 중심으로 재편해서 한시적 재구성 : 조사분석(유권자 지형분석 및 데이터 선거시스템 구축), 정책 개발 및 홍보(핵심 총선공약 발굴 및 확산), 전략기획(정세분석 및 전략과제 기획)

- 당과 연구원의 전략에 따라 연구소가 정책위의장 지휘 아래 정책공약 개발본부에 편제되거나, 선대본의 각 팀에 개별적으로 차출된 경우도 있음

○ 선거 없는 시기

- 가치와 비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 마련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 입니까?

○ 정기적 사업

1. 정무지원

- 정책 콘텐츠(정책 마케팅 및 대응논리) 개발 및 당 활용 지원
- 이슈 페이퍼 발행 (현안과 이슈 분석과 대응)

2. 전략기획

- 정책간담회 (연구원의 정책역량 강화 및 활동성 배양)
- ※ 바른미래포럼(격주간), 각종 토론회·간담회·심포지엄 등 개최

3. 정책홍보

- 홈페이지 운영
- 반년간지 발간 등

○ 부정기적 사업

- 각종 현안에 대한 긴급대응 토론회 등
- 당 지도부의 요구에 의한 메시지 또는 자료 작성 등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 정책의제

- 4차산업혁명의 성장동력 발굴, 한반도평화 (관련 연구위원회 운영)
- 혁신중도 정체성 연구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방선거 주요이슈 발굴
- 지방자치
- 정당통합 사전작업

○ 입법활동의 연계비율 낮음

- 연구원(장기 비전과 전략 마련)과 정책위원회(입법활동 지원 및 현안 대응)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름
- 대부분 의원 입법이 현안과 쟁점 위주로 마련돼 중장기 비전과 의제를 ‘담론’ 형태로 제시하는 연구원 활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희박함
- 입법활동의 경우 관련 연구보고서 제출이 아니라 인력 지원(정책실 파견) 방식을 활용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 었습니까?

- 양당 통합 논리 개발
- 당 정체성과 정치노선 (중도정치와 공화주의 등)
- 지지기반 변화 전략
- 개헌(분권형 대통령제)과 선거제도 개혁 방안(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구)
- 4차산업혁명 산업전략과 일자리 대책(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 각종 선거 시 선대본 파견 또는 정책실과 결합
- 사무총장 주재 사무처 국실장 회의(주1회)에 연구원관계자 읍저버로 참석
- 연구보고서 등 공보실(언론), 조직국(당원) 통해 이메일·카톡 등으로 배포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공통답변] 학력별로 업무/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사업에 따라 학력 뿐만 아니라 경력 및 사회활동에 따라 업무가 배치되기도 합니다. 다만, 부서별 역할, 연구방향성 등에 따라 정책개발 사업과 연구들은 학력별로 배치하거나,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석사급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공통답변] 바른미래연구원은 모두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연구원 자체고용 및 외부파견 직원은 없음.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릅니까?

- [공통답변] 바른미래연구원은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와의 통합으로 2018년 12월부터 공식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8년 기타수입은 정당지원금과 전년이월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과 동일한 지출방식과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음

* 바른미래연구원 연구위원 3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소가 중앙당에 부속된 하위 부서처럼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운용은 △당 대표의 이사장 겸임, △당 대표가 임명하는 원장과 이사회, △중앙당을 통한 국고보조금 지급, △연구소 소속이나 사실상 당에서 근무하는 상당한 인력 △연구원 인력들을 당 사무처 기준에 맞춘 낮은 처우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는 바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연구소의 독립성·자율성을 해치고 우수한 인재 확보를 가로막고 있는 위에 지적한 점을 시정해야 함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정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정책위원회, 연구소가 삼위일체가 되어 각자의 특장에 맞는 역할을 협업체계속에서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 우리 연구소는 단기적 측면에서 입법과제와 현안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대안제시와 당론 수립에 집중하고 있음. 장기적 측면에서는 중도개혁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분명히 하면서 기득권 양당과 차별화되는 정책비전과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분권형 개헌과 합의제 민주주의, 다당제를 통한 생산적인 정치 모델 수립,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정책 마련, 한반도비핵화와 평화번영체제 수립 등은 우리연구소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어젠다들임.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연구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한 인력의 확보임. 그러나 당의 기준선에 맞추어진 처우와 인력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채용은 물론 인사·보수 등이 여러 직간접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장애에 부딪혀 있음. 연구소의 운영 책임자의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함. 연구소는 당의 일개 하위 부서가 아님을 당이 분명히 인식해야 함. 정당 정책연구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정책정당의 산실로서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을 맡긴 것임. 중앙선관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지침과 입장 표명을 해야함.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떤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

정책 아젠다 발굴 및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주요 공약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회를 통한 정책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중앙당과 연계한 선거본부(가칭)에 소속되어 정책·전략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 선거 없는 시기

중·장기 연구 용역을 통해 당의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다양한 외부 전문가 및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을 진행함.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 입니까?

⇒ 정기적 사업은 현안에 대한 이슈페이퍼 작성 및 정책이슈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위원회 정기 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음. 부정기적 사업으로는 토론회, 세미나 진행 및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 당 통합에 따른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 개발과 선거제도 개편이 주요 정책의제임.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연구소의 활동이 국회의 입법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 있음.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었습니다?

⇒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 개발, 청년정책 개발 및 선거제도 개편 등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요.

⇒ 주1회 진행되고 있는 중앙당 실국장 연석회의에 담당 실장이 참석하여 업무/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문을 통해 상호간 업무를 진행함. 또한, 연구보고서 등의 성과물은 홈페이지 및 SNS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직자 및 지역위원장 등에 메일링을 통해 성과물을 공유하고, 필요시 당원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있음.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공동답변] 학력별로 업무/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음. 업무/사업에 따라 학력 뿐만 아니라 경력 및 사회활동에 따라 업무가 배치

되기도 함. 다만, 부서별 역할, 연구방향성 등에 따라 정책개발사업과 연구들은 학력별로 배치하거나,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석사급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공통답변] 바른미래연구원은 모두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연구원 자체고용 및 외부파견 직원은 없음.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릅니까?

⇒ [공통답변] 바른미래연구원은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와의 통합으로 2018년 12월부터 공식업무를 수행하였음. 그에 따라 2018년 기타수입은 정당지원금과 전년이월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짐.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과 동일한 지출방식과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음.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음.

<부록 1-4> 민주평화연구원 서면 인터뷰 [총 2명]

* 민주평화연구원 부소장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정당발전의 토대가 됨은 분명한 사실임. 운영비용 중 순수연구비용과 학용연구비용계정을 넓혀서 교육과 정책과 강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단기적으로는 현안에 대한 세미나 연구 발표, 정책적 분석과 대안 마련
 - 장기적으로는 견실한 정책정당이 되기 위한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지역정책과 연계되는 예산 문제, 발전문제(정책) 등)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를 지속하고 정책의 가치를 확대, 유권자 지지를 넓히기 위해 정치·정책·리더십 아카데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분권도 가능토록 해야 정치에서의 정책성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임.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에는 선거자료, 기초 정책 데이터 분석, 선거 없는 시기에는 정책 기초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합니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적 사업은 세미나 개최, 간담회 개최, 부정기적 사업은 지역강연 보조, 자료집 발간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18년은 연동형 비례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지지 강연 및 세미나, 연동형 비례제 실현을 위한 법안제출 보조.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입법화하고 언론에 홍보.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었습니다?

- 연동형 비례제 연구 및 홍보와 교육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당대표와 연동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중소정당연동공동사무국을 설치, 매주 간담회를 하고 세미나를 열었음. 또한 지역마다 강연을 보조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음. 당 최고 회의에 참여하여 정책방향을 설명함.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분담됨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 충원하였음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른지?

- 모름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없음

* 민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정·조직의 독립성 보장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단기 : 현안 대응 전략 및 세미나, 토론회

· 장기 : 정당 비전과 정책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의 독립성 - 당무에서 벗어나 정당 정책 개발에 집중하기 위함.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에는 선거전략 구상 및 대응, 선거 없는 시기에는 정당 정책 개발 및 현안대응전략마련
-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 : 세미나, 정책개발, 부정기 : 현안대응, 여론조사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동형 비례제, 시민단체와 군소정당연계 세미나 개최. 지역 선거제 관련 교육.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율 높은 편. 지속적인 의원과 연구소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 었습니까?

- 연동형 비례제 개편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중앙당의 정책의제 결정과 이에 대한 논의 및 정책개발.
- 정기적인 월례회의 및 사업보고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분담됨, 연구 및 실무로 구분, 연구부문에다 분야별 분담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모름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른가요?

- 모름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없음

<부록 1-5> 정의정책연구소 서면 인터뷰 [총 2명]

*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조항은 정당 부설 정책연구소들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정당의 가치와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정당연구소 관련 법개정은 중앙당과 연계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30%를 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판 및 대중교육, 후원회 설치 등 사회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연구소의 위상을 재설정 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의정책연구소의 단기적 목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중견 국가에 걸맞는 민생정책,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에 맞게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기적 목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경제 상황에서 민주적 복지국가의 가치와 비전, 전략을 수립 하는 것입니다.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 정책연구소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은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입니다. 그에 걸맞게 국고보조금 30%의 연구소로 직접 지급,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 및 부소장의 인사에 있어 관련 지식인 및 전문가의 인사가 적절히 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에는 당원·국민·지역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 사업, 담론 개발 및 의제 설정사업, 정책자문단 실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선거 없는 시기에는 중장기 의제에 대한 연구과제수행 및 조사사업, 토론회, 포럼운영,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운영합니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적 사업은 매월 발간하는 월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주간여론조사 동향, 월례 여론조사, 연구과제 진행 사업 등이 있고, 부정기적 사업은 특정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각종 FGI 조사, 이슈 브리핑, 연구소 자체 보고서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탈신자유주의 비전 및 정책 수립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 복지, 주거 등과 연계된 복합정책 패키지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소 사업의 입법안 연계비율은 아젠다 및 의제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입법화에 미치는 수준을 달리 합니다.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 었습니까?

- 탈신자유주의 비전 및 정책 수립이 핵심사업이었습니다. 21대 총선을

대비한 담론개발과 의제 설정 사업, 정의당의 대안경제정책 수립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의 정치개입력과 실천력 확보를 위한 여론조사사업 및 FGI 사업, 정세분석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까?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기본적인 주간 업무조정회의를 통해 중앙당과 연구소가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필요한 단위와 기획회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연구과제 보고서, 월례 ‘정의와 대안’ 보고서를 공유하고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정의정책연구소는 성별, 연령, 학력별 등 그 어떤 조건을 들어 구성원들의 업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은 진보정치의 기본 가치입니다.
 -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연구소 재정수준에 맞게 인원 배정이 이루어졌고, 파견과 상관없이 모두 연구소에서 채용했습니다.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릅니까?
 - 기타수입은 ‘이자’입니다. 지출방식 차이는 없습니다.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비정기적인 워크숍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타당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조항은 정당 부설 정책연구소들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정당의 가치와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정당연구소 관련 법개정은 중앙당과 연계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30%를 연구소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판 및 대중교육, 후원회 설치 등 사회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연구소의 위상을 재설정 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의정책연구소의 단기적 목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중견 국가에 걸맞는 민생정책,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에 맞게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기적 목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경제 상황에서 민주적 복지국가의 가치와 비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 정책연구소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은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입니다. 그에 걸맞게 국고보조금 30%의 연구소로 직접 지급, 이사장 및 이사진, 소장 및 부소장의 인사에 있어 관련 지식인 및 전문가의 인사가 적절히 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에는 당원·국민·지역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 사업, 담론 개발 및 의제 설정사업, 정책자문단 실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선거 없는 시기에는 중장기 의제에 대한 연구과제수행 및 조사사업, 토론회, 포럼운영,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운영합니다.
 -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적 사업은 매월 발간하는 월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주간여론조사 동향, 월례 여론조사, 연구과제 진행 사업 등이 있고, 부정기적 사업은 특정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각종 FGI 조사, 이슈 브리핑, 연구소 자체 보고서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까?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탈신자유주의 비전 및 정책 수립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 복지, 주거 등과 연계된 복합정책 패키지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소 사업의 입법안 연계비율은 아젠다 및 의제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입법화에 미치는 수준을 달리 합니다.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 탈신자유주의 비전 및 정책 수립이 핵심사업이었습니다. 21대 총선을 대비한 담론개발과 의제 설정 사업, 정의당의 대안경제정책 수립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의 정치개입력과 실천력 확보를 위한 여론조사사업 및 FGI 사업, 정세분석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까?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기본적인 주간 업무조정회의를 통해 중앙당과 연구소가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필요한 단위와 기획회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연구과제 보고서, 월례 ‘정의와 대안’ 보고서를 공유하고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정의정책연구소는 성별, 연령, 학력별 등 그 어떤 조건을 들어 구성원들의 업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은 진보정치의 기본 가치입니다.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연구소 재정수준에 맞게 인원 배정이 이루어졌고, 파견과 상관없이 모두 연구소에서 채용했습니다.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른니까?

- 기타수입은 '이자'입니다. 지출방식 차이는 없습니다.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비정기적인 워크숍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타당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부록 1-6> 민중정책연구원 서면 인터뷰 [총 3명]

* 민중정책연구원 원장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현행 교섭단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정당 득표율’ 또는 ‘정당 의석수’에 따라 배분
 - ▲ 국회 내 연구 공간 배정 (정당연구소의 공통 공간 마련 - 국회 프레스 센터 건설 사례)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적 목표
 - ▲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대안적 정책 개발
 - ▲ 새로운 노동정책 개발 등 차별화된 진보정책 의제 개발
 - ▲ 정책아카데미 등 교육 강화
 - 장기적 목표
 - ▲ 정책 연구 인력의 전문성 강화
 - ▲ 당의 중장기 정책 전략 강화 대안체제 프로젝트 개발
 - ▲ 미래 대안체제 프로젝트 개발
 - ▲ 외국 진보정당의 정책연구소 등과 정책협력 추진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조직의 독립성 유지는 당헌당규에 의해 보장되어 있음. 연구/전문성 강화와 재정자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는 정당정책연구소의 재정 규모와 직접 연계된 사항임. 일정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들을 선발하려고 해도 그에 맞는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하나, 현행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 보조금 지급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임. 비교섭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함.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 ‘선거 시기’는 선거 정책공약의 개발 및 교육, 외부 발표, 후보자 선거 지원업무를 진행함.

- ▲ ‘선거 없는 시기’는 매주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을 담은 해 ‘정책과 논점’ 발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주관, 국회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사업 주관, 당내 정책 교육 사업, 주요 사회단체와 ‘정책연대’ 사업 진행. 선거가 없는 홀수 년도에 한번씩 하는 ‘정책 당대회’의 주요 정책 박람회 주관.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 정기적 사업은 주간 ‘정책과 논점’ 발행, ‘선거 정책공약 수립’, ‘비교섭단체 상하반기 정책연구용역 집행’ 등

- ▲ 부정기적 사업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당 내외 유관 단위와 진행하는 ‘정책 세미나’, 당원 교육을 위한 ‘정책아카데미’ 등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까?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래처럼 2018년에는 노동, 농민 등 민생 정책의제와 함께 재벌, 남북 관계 정책의제를 개발하였음. 특히 국회 입법 활동과 진보진영의 정책적 대안 개발에 균형을 맞추고 있음. 이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적은데다가

진보진영의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의 현장성이 진보정당의 힘이라 보기 때문임

- ▲ 비정규 의제 - 요양보호사 및 프랜차이즈 알바 연구, 돌봄 노동 휴게시간 개선 대책 등
- ▲ 농민 의제 - 농가소득 문제 해법 및 농민 수당
- ▲ 청년 의제 - 청년세대의 북한인식조사, 촛불이후 청년 정치의식 변화, 학벌사회 개혁 방안
- ▲ 여성 의제 - 성평등 교육 현황 개선안 연구, 판문점 시대 이후 남북 여성 교류 새 패러다임 연구
- ▲ 소수자 의제 - 당 활동가의 소수자 인권의식 연구,
- ▲ 재벌조세 의제 - 재벌의 국가지원금 연구, 재산과세 강화
- ▲ 남북외교 의제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연구, 남북한 과학기술교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 ▲ 기타 의제 -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당원들의 심리적 외상 분석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 었습니까?

- ▲ 민중당 정책연구소는 2018년에 설립됨. 설립 초기인 관계로 정책연구 위원 충원 및 정책역량 강화가 핵심 사업이었음.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현재 정책위의장이 정책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대표단회의,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원장, 부원장이 참석해 정기 업무보고를 하고, 당 기획조정회의에 정책실장이, 당직자회의에 연구원 전원이 참석해 업무를 보고하며 기획 조정을 하고 있음. 연구소에서 제출하는 주간 정책과 논점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의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정책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당 대표단 교육부터 광역시도당으로 체계적으로 전파 활용되고 있음.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학력별 구분에 따라 업무 분담을 하고 있지 않음. 자질과 능력, 정책적 관심사 위주로 업무를 분담함. 국고보조금이 적고 연구소 재정이 빈약하여 분야별 정책전문위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명의 연구위원이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하기 때문임.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직원은 모두 자체 고용임. 연구소에 채용되기 이전부터 당에서 정책 분야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연구소에서 채용함.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른가요?

- 기타 수입이 없습니다.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의 조선사민당 산하 연구소와 교류하기로 심양 접촉에서 협의되었으나, 남북관계 담보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민중정책연구원 정책연구부원장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 비교섭단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법, 정자법, 국회법 개정이 필요함.

▲ 비교섭단체 연구위원 배정 (4~5명/정책조정위의 숫자 정도)

▲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비의 상향 조정

▲ 국회 내 연구 공간 배정 (정당연구소의 공통 공간 마련 - 국회 프레스 센터 건설 사례)

▲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직접 지원

▲ 정책당대회, 정책박람회에 대한 별도의 매칭펀드형 국고지원(코엑스 등 장소 대관)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적 목표

▲ 새로운 노동정책 개발 등 진보정책 의제 개발

▲ 차별화된 자주 및 평등 정책 개발 - 독자적 평화협정 및 통일 방안 마련

▲ 조선사민당 산하 정책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 광역시도당, 부문조직에 대한 정책아카데미 등 교육 강화, 시도당 정책위원회 건설 지원

▲ 현안에 대한 당 내외의 공통의 정책연구 용역 시행 - 민변, 학계 등

- 장기적 목표

- ▲ 정책 연구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석박사 이수 보장
- ▲ 당의 강령 심화 연구 및 대안체제 프로젝트 개발
- ▲ 중장기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이론지’ 발간 추진
- ▲ 중국 및 북한 사회과학원, 유럽 정당 연구소 등과의 교환 연수 등 추진
- ▲ 청년 정책유람단 해외 파견 - 해외 사례 발굴 및 이론 습득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전문성 강화와 재정자립성 확보가 절실함. 이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재정 역량과 관련된 것으로, 일정 역량을 갖춘 연구위원들을 선발하려면 그에 맞는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함. 하지만 국고보조금 지급이 교섭단체 위주인 탓에 결과적으로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소도 재정이 미흡하며 사실상 정책연구 강화의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어려움.
- 이마저도 비교섭단체의 현실에서 중앙당 사무총국과 차별화된 임금체계를 수립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재정도 절대 부족한 현실임. 따라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매칭펀드제로 하거나, 비교섭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역교부세를 도입하거나, 연말 선관위 기탁금을 연구소 지정 기탁으로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현재 민중당 부설 민중정책연구원의 임금은 노동자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음)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선거 시기에는 정당의 특성 상 정책공약의 개발, 현지 선거 지원업무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음. 특히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정책역량이 부족한 관계로 선거 시기에는 현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 파견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정책공약을 시도당별로 집중교육하고 있지만 구체적 현안에 대한 정책 대처 능력의 차이로 인해 선거시기에는 파견 등을 각오해야 함
 -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간 ‘정책과 논점’을

발간하고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며, 당내 조직 및 외부 조직과의 ‘정책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정책연구용역을 알차게 진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조직화, 정책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진보진영과의 정책교류 활동이 진행됨. 아울러 정책에 대한 교육 사업도 ‘정책아카데미’ ‘광역 시도당 교육’ ‘새 노동정책교육’ 등 수시로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민중정책연구원은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으로부터 이어져 온 ‘정책당대회’를 계승해서 개최할 예정임. 정책당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당원들의 최대 정치축제로 그간 키텍스, 벅스코 등을 통째로 빌려 1박 2일 동안 최소 3500명, 많게는 6천여명이 참가해 왔음. 올해도 9월 28~29일 경주에서 당원 약 3,700명이 참여해 강령토론, 정치전략, 조직전략, 정책공약 등 주요 의제 토론과 계급계층 한마당, 부문 한마당 등 당원 총회의 장을 펼칠 예정임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정기적 사업은 주간 ‘정책과 논점’ 발행, ‘총선정책공약 수립’, ‘비교섭단체 상하반기 정책연구용역 집행’ ‘정책 현안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이 있음.
- 부정기적으로 ‘2019정책당대회’ 의제 마련을 위한 ‘의제위원회 운영’, ‘계급계층 의제 확대 회의 운영’, 강령제정을 위한 ‘강령제정위 참여’, 주거권 마련을 위한 ‘주거권위원회 운영’,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팀 운영’ 등을 하고 있음.
- 특히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의 후속 진보의제로 새로운 노동정책 - 공동사용자책임·노동자개념확대·노동보험 도입-을 민변 등과 함께 연구개발해 전체 당원 교육을 하고 있음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래처럼 2018년에는 노동, 농민 등 민생 정책의제와 함께 재벌, 남북

관계 정책의제를 개발하였음. 특히 국회 입법 활동과 진보진영의 정책적 대안 개발에 균형을 맞추고 있음. 이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적은데다가 진보진영의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의 현장성이 진보정당의 힘이라 보기 때문임

- ▲ 비정규 의제 - 요양보호사 및 프랜차이즈 알바 연구, 돌봄 노동 휴게시간 개선 대책 등
- ▲ 농민 의제 - 농가소득 문제 해법 및 농민 수당
- ▲ 청년 의제 - 청년세대의 북한인식조사, 촛불이후 청년 정치의식 변화, 학벌사회 개혁 방안
- ▲ 여성 의제 - 성평등 교육 현황 개선안 연구, 판문점 시대 이후 남북 여성 교류 새 패러다임 연구
- ▲ 소수자 의제 - 당 활동가의 소수자 인권의식 연구,
- ▲ 재벌조세 의제 - 재벌의 국가지원금 연구, 재산과세 강화
- ▲ 남북외교 의제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연구, 남북한 과학기술교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 ▲ 기타 의제 -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당원들의 심리적 외상 분석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2018년 9월에 가서 원장, 부원장을 임명했으므로 그 이전은 정책연구소 건설 준비기였음. 따라서 2018년은 정책연구소를 건설하고 이후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해나는 것이 핵심사업이었음. 즉 임원을 조직하며, 연구소 연구위원을 충원하면서 미래 연구과제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핵심과제 였음.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까?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당의 대표단 중심으로 연구원 이사회를 구성해 당과 연구원이 일체성을 갖도록 하였음. 또한 원장, 부원장, 정책실장 등이 당 대표단회의에 출석

- 하여 발언하고, 당무위원회와 중앙위, 대의원대회에서 사업보고와 의결을 통해 사업에 대해 당적 결의를 확보함. 특히 연구소 사무실이 중앙당 내에 설치됨으로써 중앙당 각 부서와 일상적인 업무조율이 가능함.
- 제도적으로 당 정책연구소는 정책위를 겸하고 있으며 대표단회의, 당무위,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원장, 부원장이 참석해 정기 업무보고를 하고, 당 기획조정회의에 정책실장이, 당직자회의에 연구원 전원이 참석해 업무를 보고하며 기획 조정을 하고 있음.
 - 연구소에서 제출하는 주간 정책과 논점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의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정책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당 대표단 교육부터 광역시도당으로 체계적으로 전파 활용되고 있음.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일부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학력별 구분에 따른 업무보다 주로 자질과 능력, 정책적 관심사, 혹은 유관분야 위주로 나뉘어 있음. 인원 부족으로 정책의 전문능력이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당 내외의 요구는 많기 때문에 당성, 종합 판단력과 정무력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임
 -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응답없음.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른가요?
- 기타 수입이 없습니다.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의 조선사민당 산하 연구소와 교류하기로 심양 접촉에서 협의되었으나, 남북관계 담보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민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당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국고보조금이 교섭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소수정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 이를 개선해야 함. 정당 득표율에 따른 배분은 물론, 정당체계의 다양성 실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준용해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 교섭단체는 당정협의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정부 부처와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갖고 있음. 반면 비교섭단체인 소수정당의 부설연구소는 이와 같은 경로가 없어 정책 개발의 기초인 자료 확보나 정책 관련 현황 파악 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의 개선도 필요

<정책연구소 일반적 운영>

2. ‘정당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단기적 목표) 노동 분야 등에서 차별화된 진보정책 개발, 정당 정책의 홍보 강화 (장기적 목표) 한국 사회 변화와 진보를 위한 장기 비전 개발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당해 연구소의 경우 조직의 독립성이나 재정 자립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음. 국고보조금 확대 필요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답변> (선거 시기) 선거 공약 개발 및 홍보, 후보자 교육 등 지원 업무
(선거 없는 시기) 현안 분석 자료 발간, 중기 차원의 정책 개발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답변> (정기적 사업) 정책현안 해설 자료 발간(주간 단위)

(부정기적 사업) 현안 관련 토론회, 유관 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당원 교육

<2018년 정책연구소 운영>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까?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비정규 의제 - 요양보호사 및 프랜차이즈 알바 연구, 돌봄 노동 휴게 시간 개선 대책 등

▲ 농민 의제 - 농가소득 문제 해법 및 농민 수당

▲ 청년 의제 - 청년세대의 북한인식조사, 촛불이후 청년 정치의식 변화, 학벌사회 개혁 방안

▲ 여성 의제 - 성평등 교육 현황 개선안 연구, 판문점 시대 이후 남북 여성 교류 새 패러다임 연구

▲ 소수자 의제 - 당 활동가의 소수자 인권의식 연구,

- ▲ 재벌조세 의제 - 재벌의 국가지원금 연구, 재산과세 강화
- ▲ 남북외교 의제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연구, 남북한 과학기술교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 ▲ 기타 의제 -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당원들의 심리적 외상 분석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당해 연구소는 2018년 9월 설립돼 연구소 인력 충원 등 기관 구성이 주요 사업이었음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각급 대의기구와 집행기관에 참석해 정책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논의 진행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재정 여건 상 한 명의 연구위원이 여러 분야를 맡고 있어 학력에 따른 업무 부담은 현실성이 낮음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전원 자체 고용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른가요?

- 기타수입 없음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의 조선사민당 산하 연구소와 교류하기로 심양 접촉에서 협의되었으나, 남북관계 담보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부록 1-7>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서면 인터뷰 [총 1명]³⁾

*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상근이사

1. 「정당법」 제38조는 정책연구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른 정책연구소 운영이 정책정당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소 발전을 위해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당의 정책개발 및 연구를 촉진하여 정당정치의 선진화,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20인미만 정당에게도 현실적 경상보조금 지원과 제33조 (교섭단체) 제34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함.

정당법에서는 정당에 속한 당원 및 정당의 설립을 주도하는 발기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과 함께 그 적정한 제공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정책정당'이 정당개혁 방향 중 하나여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귀 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화당의 단기적 목표는 박근혜대통령 불법탄핵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박근혜대통령 무죄석방 운동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진보우파정당으로서 확고한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젊은 인재영입을 통한 청년 보수의 참된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안보 교육을 통한 안보강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재건이 목표임. 진보우파

3) 서면 인터뷰 답변에는 대한애국당이 아니라 우리공화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서면 인터뷰 시점이 당명 변경 이후인 2019년 7월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정당으로서 정치문화를 선도하고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것이 핵심과제임.

-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목표는 첫 번째. 보수의 잘못된 것은 환골탈퇴해야 한다. 무능정당, 부정부패의식 정당,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끼리의 정당, 투쟁하지 못하는 정당, 웰빙 정당, 관료정당의 잘못된 폐습들을 바로 세워 진보우파정당으로 인정받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도덕적인 정당. 혁신적인 정당 목표임. 두 번째,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운동. 세 번째, 당 사무처 개혁을 통한 관료적이지 않은 정당을 만드는 것. 네 번째,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우리공화당은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정당활동과 다양한 정책연구개발로 새로운 진보우파정당을 만드는 것.

3. 정당 정책연구소는 연구/전문성 강화, 조직의 독립성 유지, 재정 자립성(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귀 정책연구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20인미만 정당에게도 현실적 경상보조금 지원과 제33조 (교섭단체) 제34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함.

4. 귀 정책연구소의 업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1) '선거 시기'와 '선거 없는 시기'에 각각 어떠한 업무/사업을 진행하십니까?
 -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함. 전국순회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선거에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고 공약 개발을 위한 자료를 준비.
 - 비선거시기에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등 관련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보고서 발간하고 구체적인 정책제안집을 만든다.
분야별 동향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고 각종 포럼을 운영하여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강화하는 등의 업무에 주력함.

여러나라의 매니페스토 성공사례를 분석 연구하여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매니페스토를 연구개발한다.

2) 1년 기준으로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 설립 등록 후, 2019년 1월 9일 개소식 진행으로 2018년도에는 ‘정기적’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5. 귀 정책연구소의 2018년도 주요 정책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정책을 연구/개발하셨습니다? 만약 귀 정책연구소 활동과 국회의 입법활동의 연계비율이 낮다면(높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 설립 등록 후, 2019년 1월 9일 개소식 진행으로 2018년도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6. 2018년도에 귀 정책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핵심사업은 무엇이었습니다?

-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 설립 등록 후, 2019년 1월 9일 개소식 진행으로 2018년도에는 중점을 둔 핵심사업이 없었습니다.

7. 귀 정책연구소는 2018년 업무/사업을 위해 중앙당과 어떻게 의견조율/협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업무/사업 결정, 회의방식, 성과물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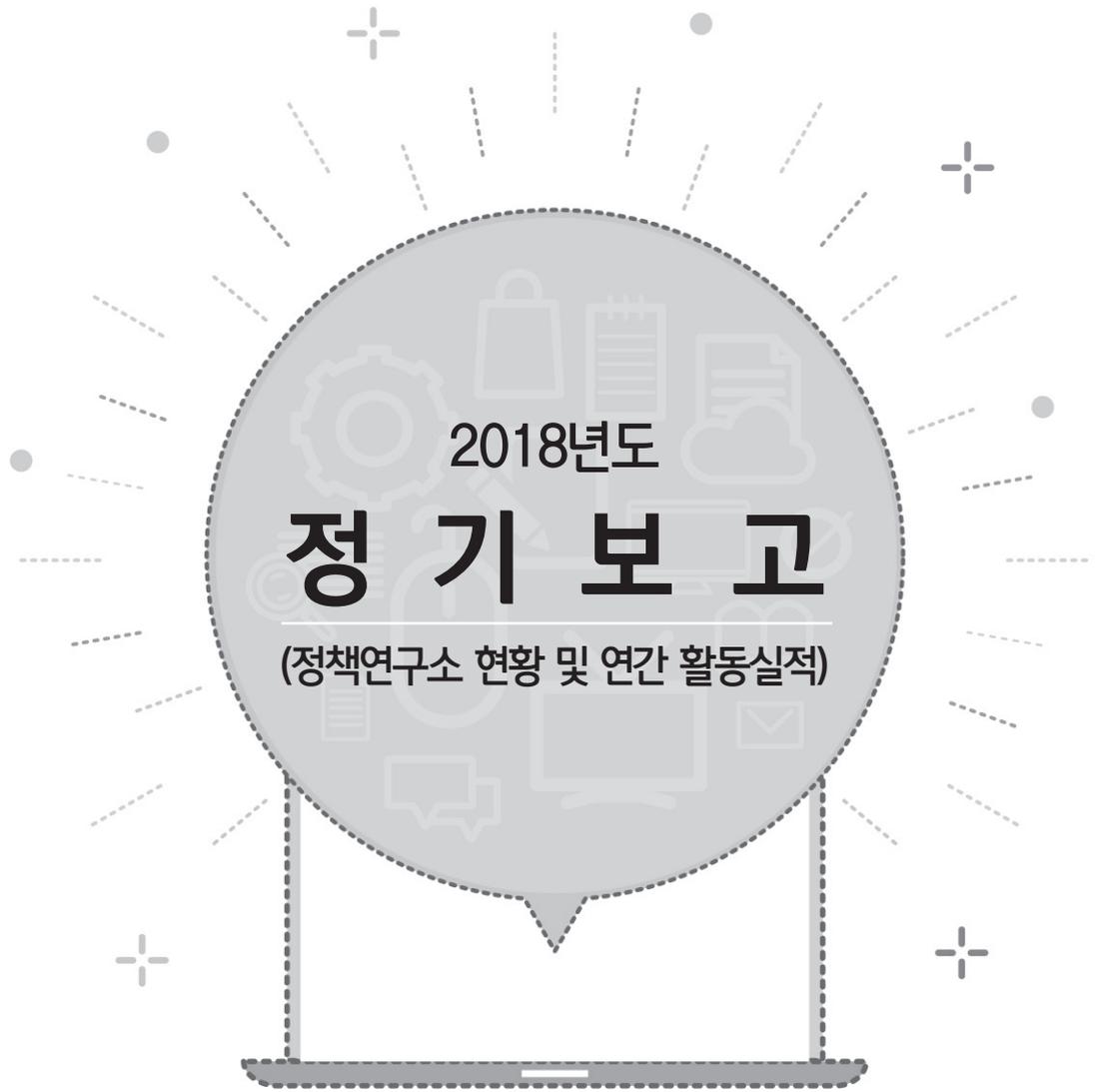
-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 설립 등록 후, 2019년 1월 9일 개소식 진행으로 2018년도에는 중앙당과 특별하게 의견 조율/협조를 진행할 활동이 없었습니다.

8.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신 연구인력은 학력별 연구인력(박사/석사/기타)과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 1) 학력별(박사/석사/기타) 구분에 따른 업무/사업이 분담되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 설립 등록 후, 2019년 1월 9일 개소식 진행으로 2018년도에는 연구인력이 없었습니다.
 - 2) 직원 수(자체고용/외부파견) 구분은 연구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까? 자체고용과 외부파견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충원된 것입니까?
 -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 설립 등록 후, 2019년 1월 9일 개소식 진행으로 2018년도에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9. 2018년 귀 정책연구소의 활동경비에는 정당지원금/기타수입/전년이월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된 활동경비입니까? 기타수입으로 충당된 활동경비는 정당지원금으로 받은 활동경비와 지출방식이나 항목이 다른가요?
-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 설립 등록 후, 2019년 1월 9일 개소식 진행으로 2018년도에는 기타수입이 없었습니다.
10. 귀 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2018년 12월 11일 설립 등록 후, 2019년 1월 9일 개소식 진행으로 2018년도에는 다른 정책연구소나 해외 정책연구소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이 없었습니다.

<참고문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각년도).
- 박경미·박지영·김은경. 2018. 『2017년도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
- 모종린. 2003. “정책연구의 세계적 추세와 KDI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연구 사례:지난 30년의 회고』. 서울:한국개발연구원. 451-470.
- McGann, James G. 2018. *2017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TTCSP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s.
- Stone, D., Denham and Garnet. 1998. *Think Tanks Across Nations: A Comparative Approach*.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Weaver, R. Kent and Paul Stares. Guidance for Governance: An Overview.” *Guidance for Governance: Comparing Alternative Sources of Public Policy Advice*. Tokyo: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01, 1-30.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민주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여의도동, 동우국제빌딩 7층, 8층)			V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22명	자체고용:		
석사급:	19명	외부파견:		
기 타:	29명			
합 계:	70명	합 계: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5,744,836,000	66,429,903	196,354,448	6,007,620,351	5,720,804,990	286,815,361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 (122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1 ~ 1.3	기재위	2018년 경제정책	자체	2p	별첨1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서울)	자체	262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부산)	자체	168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대구)	자체	93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인천)	자체	102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대전)	자체	60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광주)	자체	60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울산)	자체	59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세종)	자체	18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경기)	자체	449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강원)	자체	197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충북)	자체	156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충남)	자체	170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전북)	자체	168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전남)	자체	240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경북)	자체	270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경남)	자체	237p	별첨2
1.1 ~ 4.30	정무 등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제주)	자체	32p	별첨2
1.1 ~ 4.30	정무 등	2018년 상반기 민주연구원 정기 여론조사	외부	194p	
1.1 ~ 5.31	전체	지방선거 대비 민주당 공약개발	공동	5p	별첨3

1.1 ~ 5.10	국토위 외	2018년 지방선거 전략지도광역자치단체 (경제사회부문)		51p	별첨4 (비공개)
1.1 ~ 5.10	국토위 외	2018년 지방선거 전략지도기초자치단체 (경제사회부문)		678p	별첨5 (비공개)
1.2 ~ 1.3	보건복지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문헌연구	2p	별첨6
1.2 ~ 5.21	전체	사회적경제 정책·선거공약 총람	공동	362p	별첨7
1.7 ~ 1.22	기재위	가상화폐 열풍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제언	자체	6p	별첨8
1.10 ~ 1.25	정무위	국가정보원개혁 3대방향	자체	9p	별첨9
1.15 ~ 2.25	정무위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	자체	26p	별첨10
1.15 ~ 7.31	국토위 외	저비용사회 (3인 공동)	자체	80p	별첨11
1.16 ~ 1.17	국방위	코리아리포트 3호-1. 남북대화 순풍	자 체	2p	별첨12
1.20 ~ 2. 2	전체	지방선거 대비 세종시당 공약개발	자체	8p	별첨13
1.22 ~ 8.21	보건복지 교육 국토교통 산업자원	저비용사회	문헌연구	113p	별첨14
1.28 ~ 2.4	정무위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실시 3대 필요성 등	자체	5p	별첨15
1. 28 ~ 2. 9	행안	2018 지방선거 대비 광주지역 정책공약	단독	7p	별첨16
1.30 ~ 1.31	국방위	코리아리포트 5호-2. 군 복무기간 단축	자 체	2p	별첨17
2.1 ~ 2.23	전체	지방선거 대비 충남도당 공약 및 정책개발	자체	5p	별첨18
2.1 ~ 2.28	보건복지	2018년 보건복지분야 예산확대의 의미와 복지분야 쟁점	문헌연구	10p	별첨19
2.6 ~ 2.13	행안	2018 지방선거 대비 전남지역 정책공약	단독	8p	별첨20
2.13	통일외교	지방선거 외교안보분야 공약	공동	10p	별첨21
2.15 ~ 2.21	산자중기, 정무	위기의 한국 GM	자체	3p	별첨22
2.20 ~ 2.28	기재위	미 통상압박 강화	자체	2p	별첨23

2.20 ~ 3.19	행안	개헌단상 : 대통령제정부형태와 '총리추천제'(비공개)	단독	8p	별첨24
3.1 ~ 4.30	행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7기 지방정부 정책과제(안)	단독	33p	별첨25
3.4 ~ 8.3	보건복지	'100세 사회'를 말하다	문헌연구	47p	별첨26
3.5 ~ 3.6	보건복지	저출산 극복방안	문헌연구	2p	별첨27
3.5 ~ 5.10	정무위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길	공동	66p	별첨28
3.10 ~ 3.30	기재위	PPP 펀드 조성 방안	자체	15p	별첨29
3.12 ~ 3.13	보건복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문헌연구	2p	별첨30
3.15. ~ 5.15	정무 등	2018년 상반기 민주연구원 정기 여론조사	자체/외부	78p	
3.15	통일외교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평가와 과제	공동	7p	별첨31
3.15 ~ 5.15	정치	대한민국 중심정당은 가능한가? :	자체	38P	별첨32
3.23 ~ 4.22	정무	2017~2018년 4월 유럽연합 국가별 총선결과	문헌연구	32	별첨33
3.28 ~ 5.23	국토위	코리아 리포트	자체	6p	별첨34
4.2 ~ 4.19	국방위	<국방개혁 2.0 추진전략 1> 국방 혁신성장	자 체	42p	별첨35
4.7 ~ 4.11	기재위	일자리 추경	자체	2p	별첨36
4.16 ~ 4.17	보건복지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문헌연구	2p	별첨37
4.20 ~ 5.9	정무위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자체	23p	별첨38
4.23 ~ 5.21	보건복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보건복지분야	문헌연구	10p	별첨39
4.30 ~ 5.17	국방위	4.27 판문점선언 제2조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	자 체	47p	별첨40
5.1 ~ 5.14	산자중기, 정무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 사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자체	4p	별첨41
5.1 ~ 6.30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검토	문헌분석	18p	별첨42
5.2	통일외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공동	5p	별첨43

5.10	통일외교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공동	8p	별첨44
5.16 ~ 5.23	산자중기, 정무	재벌의 갑질 방지 대책	자체	3p	별첨45
5.20 ~ 6.4	산자중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방향	자체	8p	별첨46
5.21 ~ 5.31	국방위	사회적 의인의 공훈에 대한 사회적 보훈체계 제안	자 체	8p	별첨47
5.22 ~ 6.22	환경노동	[최저임금①] 최근 최저임금 실효성 논란과 보완대책	문헌연구	7p	별첨48
5.26 ~ 6.27	환경노동	[최저임금②] 산업 범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문헌연구	7p	별첨49
6.1 ~ 6.15	법사위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방안	공동	8p	별첨50
6.1 ~ 8.20	정무위	국민주권민주주의의 길	자체	74p	별첨51
6.5 ~ 6.20	산자중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자체	4p	별첨52
6.6 ~ 7.5	국토위/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새 시대, 시작은 이제부터	자체	7p	별첨53
6.8	통일외교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신경제지도 구상	공동	8p	별첨54
6. 10 ~ 6.22	환노위	최저임금1 최근 최저임금실효성 논란과 보완대책	공동	8p	별첨55
6.13 ~ 6.15	정무위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	자체	8p	별첨56
6.13 ~ 7.18	정치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을 위하여 :	자체	32P	별첨57
6.14	통일외교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의미와 향후 전망	공동	5p	별첨58
6.18 ~ 7.6	국방위	DMZ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지뢰제거 효율화방안	자 체	39p	별첨59
6.22 ~ 6.26	환노위	최저임금 2 산업 범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공동	7p	별첨60
6.26 ~ 6.27	국방위	코리아리포트 23호 ~ 3. 한미군사훈련 중단	자 체	2p	별첨61
6.29	통일외교	남북한 철도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공동	8p	별첨62
7.1 ~ 8.16	교육위	사람혁명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	공동	8p	별첨63
7.1 ~ 12.31	사법개혁	경미사건에 대한 신속한 형사절차 진행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형 치안판사제도' 도입 검토	문헌분석	27p	별첨64

7.3 ~ 7.4	국방위	코리아리포트 24호 ~ 2. 대체복무제 도입	자 체	2p	별첨65
7.18 ~ 7.25	산자중기, 정무	하도급법 개정	자체	2p	별첨66
7.27 ~ 8.1	기재위	2018 세법개정안 발표	자체	2p	별첨67
7.31 ~ 8.1	국방위	코리아리포트 28호 ~ 3. 국방개혁 2.0	자 체	2p	별첨68
8.1 ~ 9.3	전체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공동	16p	별첨69
8.1 ~ 8.13	정무위	'48년 8월15일 건국절' 및 '건국 70주년' 주장의 5대 문제점	자체	11p	별첨70
8.5 ~ 8.20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생활 SOC 투자 정책	자체	6p	별첨71
8.3	통일외교	전준위 강령정책분과 통일외교분야 강령 제안서	공동	5p	별첨72
8.13 ~ 9.12	보건복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 외국 사례와 그 함의	문헌연구	10p	별첨73
9.1 ~ 9.11	기재위	기준금리 인상 영향	자체	4p	별첨74
9.1 ~ 9.20	정무위	공론화 대상선정의 6대 원칙	자체	8p	별첨75
9.9 ~ 9.10	국방위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논란 대응방향	자 체	4p	별첨76
9.12 ~ 12.11	국토위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및 기부채납 제도정비의 필요성	자체	6p	별첨77
9.30 ~ 10.31	국토위	지역밀착형 생활SOC	자체	6p	별첨78
10.1 ~ 10.10	법사위	사법농단사태, 특별판사로 풀자	자체	7p	별첨79
10.1 ~ 10.10	외통위	유엔에 올려 퍼진 문재인 '적극적 평화론'	자체	5p	별첨80
10.9 ~ 10.15	정무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	8p	별첨81
10.15	통일외교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연구	공동	30p	별첨82
10.22 ~ 11.21	교육	사립유치원 회계 공공성 강화와 해외 사례의 시사점	자체	9p	별첨83
10.25	통일외교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공동	26p	별첨84
11.1 ~ 11.8	법사위	특별판사도입 3대 쟁점풀이	자체		별첨85
11.1 ~ 12.10	국토/교육	혁신도시 시즌2와 지역인재 육성방안	단독	13p	별첨86
11.5 ~ 11.15	국방위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 편성방향 고찰 ~	자 체	7p	별첨87
11.5 ~ 12.4	국토위	세계 최고수준 떠돌이 생활, 여전히 미진한 공공부문 주택확대	자체	8p	별첨88

11.12 ~ 11.23	국방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방향성 모색 -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의 해결과제 검토	자 체	7p	별첨89
11.21 ~ 11.29	교육	실문조사를 통해 본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학교 허용 필요성	자체	5p	별첨90
11. 29 ~ 12.31	행안	정책보고서 : 경상북도 경산시 지역현황과 지역특화정책	공동	16p	별첨91
12.1 ~ 12.13	산자위	신북방경제시대, 남북러 가스관의 3가지 쟁점	자체	10p	별첨92
12.3 ~ 1.30	교육	교육격차 -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제고를 중심으로	자체	35p	별첨93
12.12 ~ 12.31	행안	정책보고서 :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현황과 지역특화정책	공동	18p	별첨94
17.12.1 ~ 18.7.9	과기정통위 산업통상자 원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	외부 전문가	120p	별첨95
1.2 ~ 1.12	환노위	제7회 지방선거대비 일자리·노동분야 중앙 공약	자체	7p	별첨96
1.15 ~ 2.2	환노위	제7회 지방선거대비 인천지역 일자리·노동분야 중앙 공약	자체	4p	별첨97
1.15 ~ 2.2	환노위	제7회 지방선거대비 대전지역 일자리·노동 분야 중앙 공약	자체	6p	별첨98
2.5. ~ 2.6	환노위	노사정위 출범과 사회적 대화	자체	2p	별첨99
3.25 ~ 3.26	기재위, 환노위	청년일자리 창출	자체	2p	별첨100
4.01 ~ 5.21	기재위, 환노위, 보건복지위 , 행안위	사회적경제 정책·선거공약 총람	자체	362p	별첨101
5.20 ~ 5.21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자체	2p	별첨102
8.1 ~ 9.3	기재위, 화노위 보건복지위 , 행안위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	자체	16p	별첨103
9.4 ~ 12.7	행안위	2018 지방선거 선거운동 우수 사례집 -지방선거를 보면 총선이 보인다-	자체	479p	별첨104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 내용 104부.

나. 토론회 등 개최 (118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지방선거 전문가간담회 ~ 주거부문	1.3.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주거 및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기획 및 사회	
지방선거 관련 복지분야 제5차 정책간담회	1.8	7층 대회의실	지방선거 관련 복지분야 정책의제 개발	현장 사회복지사 중심의 복지관련 현안 토론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1.16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가상화폐 이슈에 대한 내부 간담회 개최	가상화폐 쟁점 파악 정책적 시사점 모색	
토론회	1.19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대책		
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투어	1.24	대전기독교봉 사회관 2층 컨벤션홀	6.13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대전지역 순회	지역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투어	1.25	경북도당	6.13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경북지역 순회	경북지역 의견수렴 및 공약개발 기초자료 수집	
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투어	1.25	전북도당	6.13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전북지역 순회	전북지역 의견수렴 및 공약개발 기초자료 수집	
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투어	1.26	제주도당	6.13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제주지역 순회	제주지역 의견수렴 및 공약개발 기초자료 수집	
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투어	2.1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	6.13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충북지역 순회	충북지역 의견수렴 및 공약개발 기초자료 수집	
한걸음 더! 전국순회 경청투어	2.2	서울시당	6.13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서울지역 순회	서울지역 의견수렴 및 공약개발 기초자료 수집	
환경포럼 2 ~ 조류독감	2.5.	민주연구원 8층 대회의실	조류독감 예방 및 확산 방지 방안	기획 및 사회	
촛불이후, 정당정치와 직접민주주의의 도전	2.6	국회의원회관	정당발전혁신안에 대한 평가	정당혁신안의 내용 정당혁신안의 중요성과 의의 구체적 실현방안	

전문가간담회	2.8	민주연구원	초광역정부 해외사례	해외 주요국들의 지방분권현황 지역의 혁신성장전략	
전문가간담회	2.9	민주연구원	대한민국정통성 간담회	3.1운동의 의의 대한민국의정부의 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방향	2.28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	교육 ~ 재교육 ~ 평생교육 방향성 모색	
정책 간담회	2.28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다문화 정책 평가 및 정책과제 내부 간담회	다문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민주연구원 5차 외교안보포럼	3. 6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대응전략	북-미간 전략 및 비핵화 시나리오 등	
전문가간담회	3.12	민주연구원	대한민국중심정당의 가능성	유권자 현황 유권자 이념지형분석	
정책 간담회	3.2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정책 대안 마련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개헌과 직접민주주의	3.23	국회의원회관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현행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직접민주주의의 의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방안	
군사전문가 초청 간담회	4 .2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빈센트 브룩스(V.K. Brooks) 주한미군사령관 특강	북한의 비핵화, 한미연합대응태세 등	
정책 간담회	4.1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대안 마련 간담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논의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토론회	4.18	국회입법조사 처 대회의실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소셜벤처 및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토론회	4.24	국회입법조사 처 대회의실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5. 3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미중 간 무역갈등 시나리오 점검	정책적 대응방향 모색	
민주연구원 6차 외교안보포럼	5.3	국회 본청 귀빈식당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4.27 판문점선언 평가 및 6.12 회담 전망	

해외 유관기관 방문 간담회	7.10 ~ 7.14	중 국	중국 주요기관 방문을 통한 한 ~ 중 네트워크 구축	북경, 선양, 단둥 방문 및 한-중 현안 토의	
강령정책토론회[1] : 정치·분권 및 균형발전	7. 18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정치, 분권 및 균형발전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 방향으로서 정치,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성	
강령정책토론회[2] : 사회정책분야	7. 19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사회정책분야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 방향으로서 교육, 일자리와 노동, 그리고 복지분야의 비전과 정책방향성	
강령정책토론회[3] : 경제정책분야	7. 25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경제정책분야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 방향으로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공정경제구조와 중소기업, 조세재정정책 등의 실현방안	
강령정책토론회[4] : 통일·외교·안보 분야	7. 26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통일·외교·안보분야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 방향으로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비전과 정책방향성	
간담회	8.10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최근 여론조사 동향 분석과 민주당의 대응방향 간담회	여론조사 전문가 초빙 간담회	
고령사회대책 관련 호주대사관 간담회	8.16	민주연구원 7층 대회의실	한국의 고령사회 관련 사회정책	고령사회 정책관련 한국의 대응상황 발표 및 토론 호주의 고령사회 정책관련 질의응답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간담회	8.22	국회 의원회관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간담회	정책적 대응방향 모색	
해외전문가 초청 간담회	10.12	민주연구원 원장실	브루스 베넷(B.W. Bennett) RAND연구소 박사 자문	한반도 문제 토의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1차 정책간담회	10.12	민주연구원 대회의실	문화비전 2030에 묻는다 : 문제의식 및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문화예술, 관광, 대중문화·콘텐츠, 생활문화, 문화분권 등	
로버트 퍼트남 초청강연	10.15	국회도서관 대강당(B1)	미국의 교육불평등과 한국 교육에 주는 함의	미국의 교육불평등의 양상과 구조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공개토론회	10.18	국회 본청 귀빈식당	이제는 선샤인 시대, '미스터선샤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구한말의 현대적 의미, 의병의 역사적 재해석, 한반도 평화시대 미래상	
국회 공개토론회	10.18	국회 간담회실	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를 위한 연속 토론회 1	학종 공정성 담보 방안의 실효성 검증 및 대안 제시	
국회 공개토론회	10.24	국회 간담회실	학종 공정성 및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제시를 위한 연속 토론회 2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 모색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	10.30	국회의원회관	특별판사도입의 필요성	사법농단의 문제점 특별판사제도의 내용 특별판사제도의 쟁점	
국회 공개토론회	10.31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박용진3법을 중심으로	
민주연구원 기후변화포럼	11.1	국회 본청 귀빈식당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과 주요국 정당들의 대응"	선진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비교 등	
한국경제와 소득주도성장	11.6	상동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성장전략	소주성 정책의 구성 보완방안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1차 토론회	11.9	국회 본청 귀빈식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환경, 거버넌스, 사업전략 등	
정책 토론회	11.13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정책 토론회	11.14	서울시의회 대회의실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 계획	생계형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국회 공개토론회	11.22	국회 간담회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쟁점 토론회	정부 대책 및 한유종 입법안 평가	
민주자치발전포럼 [1]	11. 29	경북 경산시의회	2019 경북 경산시 지역현황과 과제	2019년 경산시의 지역현황과 과제에 대한 개발·생산	
민주자치발전포럼 [2]	12. 12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회의실	2019 대구 동구의 지역현황과 과제	2019년 대구 동구지역의 시정과 사업, 그리고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심포지엄	12.18	국회도서관	촛불정신과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 개혁과제에 대한 심포지엄	
민주연구원 안전한세상을 위한 엄마포럼	12.20	국회 간담회실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관련 법제, 거버넌스, 해썬인증 등 정책 개선방향 제안	
민주연구원 문화비전포럼 및 원주문화재단 공동주최 토론회	12.27	원주문화재단	2018 원주문화포럼 : 국가 문화정책과 지역 전달체계	대한민국 100년 이후 문화정책 모색과 변화 : 포용국가 비전에서의 문화담론 모색	
정책세미나	1.4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북한이주민 의견 청취로 대북정책 유효성 검토	
정책간담회	1.16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주요 중점 추진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1.16 15:00	인천 호텔카리스 12층 회의장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1) 인천	지역밀착형 좋은정책 발굴 및 지방선거 공약 기초 작업	
정책간담회	1.17 14:00	춘천 세종호텔 1층 소양홀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2) 강원(춘천)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1.18 14:00	강릉문화원3 층 누리방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3) 강원(강릉)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1.19 14: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4) 경기(수원)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1.19 18:00	문화유산회복 재단 회의실	집단지성센터 사회·문화 워킹그룹(WG4) 내부 정책간담회	사회문화 분야 주요 의제 논의	
정책간담회	1.20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초청 정책간담회	주요 중점 추진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1.23 1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집단지성센터 과학기술 워킹그룹(WG1) 내부 정책간담회	과학기술분야 주요 의제 논의	

정책간담회	1.23 14:00	울산상공회의 소 6층 1회의실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5) 울산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1.24 14:00	대전기독교봉 사회관 2층 컨벤션홀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6) 대전세종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1.25 09:30	민주연구원 회의실	북한이주민 비공개 내부 정책간담회 - 미래지향적 북한이주민 지원정책	북한 이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1.25 14:00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7) 전북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1.25 16:00	대구엑스코 신관 3층 320호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8) 경북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1.26 15:00	제주상공회의 소 4층 중회의실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9) 제주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1.30 16:00	부산YMCA대 강당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0) 부산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1.31 10:00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 정책간담회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설치 등	
정책간담회	1.31 14:00	김대중컨벤션 센터212~213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1) 광주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2.1 15:00	천안축구센터 다목적홀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2) 충남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2.2 14:00	서울시당 1층 대회의실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3) 서울(강북)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2.3 15:00	창원컨벤션센 터 회의실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4) 경남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2.5 14:00	충북 NGO센터 대회의실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5) 충북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2.6 13:30	전남여성프라 자 2층 회의실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6) 전남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2.7 19:00	대구엑스코 신관 3층 320A호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7) 대구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2.8 14:00	서울시당 1층 대회의실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8) 서울(강남)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2.9 14:00	신곡노인종합 복지관 대강당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9) 경기(의정부)	2018 지방선거 대비 지역밀착형 의제 발굴	
정책간담회	2.22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2.27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연속토론회	2.27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집단지성포럼(제2회)-혁신성장과 산업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	혁신성장(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체제 도입 방안	
정책간담회	3.20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3.21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김병률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3.22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3.27 11:00	오송 C&V센터 중회의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연속토론회	3.28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집단지성포럼(제3회)-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전략	혁신성장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방안 제시	
정책간담회	3.29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전자부품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4.3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기초과학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4.5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안오성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4.5 10:30	KIST 본관 회의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방문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4.6 14:00	민주연구원 회의실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정책제안 정책간담회	2018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 개발 의제 제안	
정책간담회	4.10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토론회	4.11 13: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18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제2회)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문화유산회복 성과와 한계, 정책과 구체화 전략 모색	
정책간담회	4.12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바이오경제포럼 추진체계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	바이오경제포럼 추진체계 및 프로그램 논의	
정책간담회	4.17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연속토론회	4.18 14:00	국회입법조사 처 대회의실	사회적경제 출범기념 토론회(제1회)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 방안	'사회적경제를 통한 3대 사회적 문제 해법 모색 - 소상공인, 청년, 도시재생'	

연속토론회	4.24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적경제 출범 기념 토론회(제2회)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사회적경제를 통한 3대 사회적 문제 해법모색 - 소상공인, 청년, 도시재생’	
연속토론회	4.25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집단지성포럼(제4회) - 산업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 방안	주요 과학기술 혁신정책과 제도(프로세스) 개선방향 제시	
정책간담회	5.3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5.8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5.10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전기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공동세미나	7.11 07:30	부산 서면롯데호텔	민주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부산 광역시 공동세미나	국내 항만도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7.19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강령정책 개정을 위한 전문가-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사회분야 강령정책 개정방향 제언	
정책간담회	08.17 12:00	민주연구원 회의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및 시도당 연구소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8.31 11:00	과기정통부 회의실	과학기술 정책간담회 - 집단지성포럼 결과 정책보고서 설명회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	
정책간담회	10.19 14: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교육개발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11.2 14:00	민주연구원 회의실	에너지경제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11.6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노동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초빙세미나	11.7 14:00	민주연구원 회의실	<4차 산업혁명 독일전문가 초빙 세미나> - 4차 산업혁명 미래전략(II)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전략	
정책간담회	11.9 13: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동촌경제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11.16 16: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11.28 16: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11.30 14: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12.7 14:00	민주연구원 회의실	국토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12.13 08:00	민주연구원 회의실	농협중앙회(미래경영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정책간담회	12.14 14:00	민주연구원 회의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초청 정책간담회	중점 연구 과제 및 정책제언	
연속토론회	12.18 08: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1회) -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연구개발 추진 방향 제시	

다. 교육 · 연수활동 (11회)

교육 · 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민주주의와 선거 특강 (경인교대)	4.10	경인교대 인문사회관 307호	민주주의국가와 선거, 그리고 한국 선거법과 정당,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개혁 방향	
광주전남지역활동가교육	7.14	전남 나주시 다문화센터 2층 회의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내용과 전남광주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의제	
2018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교육연수 : 경기도 기초의원	10.12	경기 용인 양지파인리조트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지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2018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교육연수 : 서울 광역의원	10.23	경기 여주 썬밸리리조트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지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2018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교육연수 : 인천·경기 광역의원	10.24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지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2018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교육연수 : 충청·호남 광역의원	10.29	전북 무주 무주리조트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지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2018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교육연수 : 대전·전북 기초의원	10.31	전북 무주 무주리조트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지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2018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교육연수 : 영남권 광역의원	11.1	경남 김해 봉하마을 강금원기념연수원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지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당직자워크숍	3.16 ~ 17	홍천		집합교육
장애인 및 양성평등 교육	11.13	중앙당 대회의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집합교육
당직자워크숍	12.14 ~ 15	고성		집합교육

라. 정책홍보 (193회)

일 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1.3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Korea Report	
1.3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호	
1.4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호	
1.10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호	
1.1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호	
1.17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3호	
1.18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3호	
1.22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4호	

1.25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4호	
1.3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5호	
2.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5호	
2.2	홈페이지, 이메일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국가정보원 개혁 3대 방향 이슈브리핑	
2.7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6호	
2.7	홈페이지, 이메일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3대 필요성 이슈브리핑	
2.8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6호	
2.2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위기의 한국 GM	
2.2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7호	
2.22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7호	
2.23	홈페이지 게재	디지털	2018년 보건복지분야 예산확대의 의미와 복지분야 쟁점 이슈브리핑	
2.28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Korea Report	
2.28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8호	
3.2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8호	
3.6	홈페이지 게재	디지털	저출산 극복방안 Korea Report	
3.7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9호	
3.8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9호	

3.14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0호	
3.15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0호	
3.2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1호	
3.22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1호	
3.28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2호	
3.29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2호	
4.4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3호	
4.5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3호	
4.1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4호	
4.12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4호	
4.17	홈페이지 게재	디지털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Korea Report	
4.18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5호	
4.19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5호	
4.25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6호	
4.26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6호	
5.2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7호	
5.3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7호	

5.14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및 이메일 활용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 사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5.16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8호	
5.17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8호	
5.21	홈페이지 게재	디지털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보건복지분야 이슈브리핑	
5.21	책자, 홈페이지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 활용	사회적경제 정책·선거공약 총람	
5.23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및 이메일 활용	재벌의 갑질 방지 대책 이슈브리핑	
5.23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19호	
5.24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19호	
5.30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0호	
5.3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0호	
6.2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및 이메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6.4	홈페이지, 이메일	홈페이지 및 이메일 활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방향	
6.14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1호	
6.15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1호	
6.15	홈페이지, 이메일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6.13 지방선거 결과의 5대 포인트 이슈브리핑	
6.16	홈페이지, 이메일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방안 이슈브리핑	
6.20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2호	

6.2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2호	
6.22	홈페이지 게재	디지털	[최저임금①] 최근 최저임금 실효성 논란과 보완대책 이슈브리핑	
6.27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3호	
6.27	홈페이지 게재	디지털	[최저임금②] 산입 범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이슈브리핑	
6.27	연합뉴스/SBS	최저임금관련 연구보고서 내용 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완책 마련	
6.28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3호	
7.4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4호	
7.5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4호	
7.1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5호	
7.12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5호	
7.18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6호	
7.19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6호	
7.25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7호	
7.26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7호	
8.1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8호	
8.2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8호	

8.8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29호	
8.9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29호	
8.14	홈페이지, 이메일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48년 8월15일 건국절 및 건국70주년 주장의 5대 문제점 이슈브리핑	
8.22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30호	
8.23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30호	
8.29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31호	
8.30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31호	
9.5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32호	
9.6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32호	
9.12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33호	
9.12	홈페이지 게재	디지털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 외국 사례와 그 함의 이슈브리핑	
9.13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33호	
9.19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국문 34호	
9.20	홈페이지, 이메일	당원, 주요인사 이메일 배포	Korea Report 2018 영문 34호	
9.28	홈페이지, 이메일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공론화 대상선정의 6대 원칙 이슈브리핑	
10.1	홈페이지, 이메일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사법농단사태, 특별판사로 풀자	

10.10	홈페이지, 이메일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유엔에 올려 퍼진 문재인 의 적극적 평화론 이슈브리핑	
10.10	홈페이지, 이메일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사법농단사태, 특별판사로 풀자 이슈브리핑	
11.8	홈페이지, 이메일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언론	특별판사도입 3대 쟁점풀이 이슈브리핑	
12.2	식품안전 정책토론회	민주연구원 홈페이지	식품저널 등 언론보도 다수	
1.1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제2차 동북아외교안보포럼-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정치·사상, 경제, 외교정책적 함의	
1.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회)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북핵(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김형덕 한반도평화번연연구소장)	
1.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2회)2018년도 정부예산안과 국정철학(홍익표 국회의원)	
1.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3회)대한민국의 교육 정책 방향(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1.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4회)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이재명 성남시장)	
1.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5회)적폐청산과 국정원·검찰 개혁(박범계 국회의원)	
1.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6회)여성과 정치(정춘숙 국회의원)	
1.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7회)예술과 정치(임옥상 화가)	
1.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8회)정당 개혁의 방향-최재성(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	
1.15~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9회)국민연금과 기금 운용(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15~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0회)개헌(이인영 국회의원)	
1.2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1회)지선, 보선, 개헌의 해, 당과 정부의 과제(이해찬 국회의원)	

1.23~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화)국정과제 심화연구1-북핵 대응전략-이용민(연구위원)	
1.23~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2화)국정과제 심화연구2-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의실현-김진영(연구위원)	
1.29~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2회)4차 산업혁명(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1.3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3화)대내외 경제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최환석 연구위원)	
2.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신년기자간담회]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2.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국정과제 연속토론회 - 자치분권과 지역상생	
2.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국정과제 연속토론회 -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길	
2.5~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3회)평창 동계 올림픽과 남북관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4화)국정과제 심화연구2-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황금삼각형 모델 구축(고영국연구위원)	
2.8~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정당발전혁신안토론회-촛불이후, 정당정치와 직접민주주의의 도전	
2.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4회)지방자치 경험/지방분권/개헌(김영배 성북구청장/김윤식 시흥시장)	
2.13~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5화)국정과제 심화연구4-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공정거래체계 실현방안(최병천 연구위원)	
2.19~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5회)지방분권, 미세먼지 대책 등(박원순 서울시장)	
2.23~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2018 국민헌법콘서트 <우리가 주권자다> - 개헌 토론	
2.2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6회)외교안보, 남북문제(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2.27~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6화)국정과제 심화연구5-혁신친화적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방향-정상희(연구위원)	
3.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2018 우주콘서트 - 국민참여개헌 토론회	
3.7~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7화)국정과제 심화연구6_자치분권과 균형발전(박동욱 연구위원)	
3.7~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7회)남북문제(김연철 인제대 교수)	
3.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8회)문재인케어, 건강보험(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3.2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19회)교육(이범 평론가/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3.2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8화)국정과제 심화연구7-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차치 강화(이경아 연구위원)	
3.28~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20회)경제(우석훈 경제학자)	
4.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9화)국정과제 심화연구8-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김은옥 수석연구위원)	
5.1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21회)교육(몽실학교 교사)	
5.29~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22회)남북관계 관련(북한이주민)	
5.3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0화)문재인정부 1년 평가-보건복지분야(강병익 연구위원)	
6.1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1화)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최환석 연구위원)	
8.1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영상 "대한민국 거대한 뿌리"	
9.0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23회)남북관계 관련(김연철 통일연구원장)	
9.15~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새로운 정치, 시민의 정치(박주민 국회의원)	

9.15~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영화와 상상력(임찬익 영화감독)	
9.15~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왜소득주도성장인가(박광 온 국회의원)	
9.1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말과 글로 성장하는 삶(강원국 전 연설비서관)	
9.1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사법농단과 적폐청산(이재정 국회의원)	
9.1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한국사회'정의'란(표창원 국회의원)	
9.2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2화)이슈브리핑-'48년 8월 15일 건국절' 및 '건국 70주년'주장의 5대 문제점(박혁 연구위원)	
9.2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24회)남북관계 관련(문범강 조지타운대 교수)	
9.29~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장재현 전 그린피스 캠페이너)	
9.29~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9.29~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청춘, 국민연금을 만나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9.3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남과 북 현재와 미래(이종석 전통일부장관)	
9.3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신영식 해동한국사 저자)	
9.3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앞으로 20년, 나와 대한민국(김민석 민주연구원장)	
9.3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북어알(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정규방송 제1화-임신과 출산	
9.3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북어알(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파일럿 제2화-각 나라의 술 문화	
9.3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북어알(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파일럿 제1화-정상회담 기념 수다 대잔치	

10.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3화)이슈브리핑-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강병익 연구위원)	
10.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4화)이슈브리핑-공론화 대상선정의 6대 원칙-박혁(연구위원)	
10.1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2018 국제청색경제포럼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축사	
10.23~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공대(25회)남북관계 관련(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10.25~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문화비전포럼 공개토론회-이제는 선사인 시대, '미스터 선사인'으로 읽는 시대코드 정치 ,사회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10.2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5화)이슈브리핑-사법농단사태 , 특별판사로 풀자(박혁 연구위원)	
11.3~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자치분권의 방향과 전략(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11.3~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김두관 국회의원)	
11.3~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교육자치 시대 교육선진국을 향한 담대한 전진(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1.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왜? 자치분권·균형발전인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11.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저출산·고령화 자치분권에 답이 있다(양승조 충남도지사)	
11.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보수의 심장에 파란을 일으키다(장세용 구미시장)	
11.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6화)이슈브리핑-창업벤처기업 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최환석 연구위원)	
11.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기후변화포럼 공개토론회-글로벌 기후변화 동향과 주요국 정당들의 대응	
11.6~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 도입 긴급토론회	

11.9~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4차 산업혁명 독일전문가 초빙 세미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략 II-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전략
11.1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주인이 주인이다(황명선 논산시장)
11.1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지방자치, 여성이 하면 다르다(김수영 양천구청장)
11.10~	홈페이지/유튜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광역의회의 변화, 부산시의회가 주도합니다(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11.1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1차 토론회-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11.1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열정 시의원 재선 도전기(한은정 창원시의원)
11.1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자치분권이 국가경쟁력이다(박원순 서울시장)
11.1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새로운 100년, 새로운 공화국(김민석 민주연구원장)
11.20~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7화)이슈브리핑-지역밀착형 생활 SOC-박동욱 연구위원
11.2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대한민국 리더십 원칙 4+1(김민석 민주연구원장)
11.2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여성정치 100년, 성평등 민주주의 중심으로(정춘숙 국회의원)
11.24~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열정과 집념의 백범 김구(신영식 해동한국사 저자)
11.25~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행동하는 양심, 김대중(김홍걸 민화협 대표)
11.25~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통찰의 힘, 김대중의 말과 글(고도원 전 연설비서관)
11.25~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서민의 벗, 거래의 벗 김대중(정세균 국회의원/전 국회의장)
11.28~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8화)이슈브리핑-제안: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배지영 연구위원)

12.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사람사는 세상, 노무현(배기찬 전 정책조정비서관)	
12.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소통의 힘, 노무현의 말과 글(강원국 전 연설비서관)	
12.1~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노무현의 꿈!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윤태영 저 대통령 대변인)	
12.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나라다운 나라, 문재인(박범계 국회의원)	
12.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문재인의 평화외교(송영길 국회의원)	
12.2~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시민학교-사람이 먼저인 나라, 대한민국(표창원 국회의원)	
12.13~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19화)이슈브리핑-저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 편성방향 고찰(이용민 연구위원)	
12.13~	홈페이지/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 송출	민주정부(20화)이슈브리핑-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방향성 모색(이용민 연구위원)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 (98건)

발간 일자	종 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1.3	보고서	제7차 월간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2017년 12월 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1.31	보고서	1차 지방선거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지방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1.31	보고서	제8차 월간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2018년 1월 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2.5	연구논문	『한국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다』 中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서 실질적 복지국가로? ~ 역대정권 이미지 비교연구	책 발간	연구자료로 활용	
2.21	보고서	위기의 한국 GM	홈페이지 개제		
2.28	보고서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역사의 재정립	자체발간	200부 ~ 외부배포	
3.7	보고서	제9차 월간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2018년 2월 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4.4	보고서	제10차 월간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2018년 3월 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3.11	보고서	규제분권 보고서 비공개	자체발간 (공동)	당내부 의견수렴	
3.12	보고서	지방선거 여론조사 동향 -2월 비공개	자체발간 (공동)	당내부 의견수렴	
4.11	보고서	지방선거 여론조사 동향 -3월 비공개	자체발간 (공동)	당내부 의견수렴	
4.18	토론회 자료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책자발간		
4.19	연구보고서	국방개혁 2.0 추진전략 1 ~ 국방 혁신성장	책 자	200부	
4.24	토론회 자료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 방	책자발간		
4.25	연구보고서	2017~2018년 4월 유럽연합 국가별 총선결과	책자	200부/국회 및 지역배포, 홈페이지 개제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서울)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부산)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대구)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인천)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대전)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광주)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울산)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세종)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경기)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강원)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충북)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충남)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전북)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전남)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경북)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경남)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4.30	보고서	GIS를 활용한 지방선거 전략지도(제주)	자체	지방선거 전략 및 연구자료로 활용	
5.2	보고서	제11차 월간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2018년 4월 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5.14	보고서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 사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홈페이지 개제		

5.15	연구논문	대한민국 중심정당은 가능한가? : 중심·주변 정당체제의 가능성	자체발간	200부 대외배포	
5.15	보고서	2차 지방선거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지방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5.15	보고서	대한민국 중심정당의 길	공동연구	200부 ~ 외부배포	
5.17	연구보고서	4.27 판문점선언 제2조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	책 자	200부	
5.20	보고서	2018년 상반기 민주연구원 정기조사 보고서	자체발간	정기여론조사 실시후 연구자료로 활용	
5.21	보고서	사회적경제 정책·선거공약 총람	책자발간		
5.23	보고서	재벌의 갑질방지 대책	홈페이지 개제		
5.31	보고서	제12차 월간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2018년 5월 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6.4	보고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방향	홈페이지 개제		
6.20	보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홈페이지 개제		
6.5	보고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지방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6.5	보고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지방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7.1	보고서	제13차 월간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2018년 6월 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7.6	연구보고서	DMZ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지뢰제거 효율화방안	책 자	200부	
7.18	자료집	강령정책토론회[1] 정치, 분권 및 균형발전		100/토론회 배포용	
7.18	연구논문	지속가능한 중심정당을 위하여 : 6.13 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당의 진로	자체발간	200부 대외배포	
7.19	자료집	강령정책토론회[2] 사회정책분야		100/토론회 배포용	

7.25	자료집	강령정책토론회[3] 경제정책분야		100/토론회 배포용	
7.25	보고서	하도급법 개정	홈페이지 게재		
7.26	자료집	강령정책토론회[4] 통일·외교·안보분야		100/토론회 배포용	
8.3	연구보고서	'100세 사회'를 말하다	책자	200부/국회 및 지역배포 홈페이지 게재	
8.10	백서	더불어민주당 강령(개정) 자치분권균형발전,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자체발간 (공동)	당내부 의견수렴	비공개
8.20	보고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생활 SOC 투자 정책	홈페이지 게재		
8.21	연구보고서	저비용사회	책자	200부/국회 및 지역배포 홈페이지 게재	
9.3	보고서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책자발간		
9.5	보고서	제15차 월간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2018년 8월 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10.5	보고서	제16차 월간 여론조사 동향	자체발간	2018년 9월 여론조사 분석 연구자료로 활용	
10.20	보고서	2018년 하반기 민주연구원 정기 여론조사 보고서	외부	연구자료로 활용	
11.13	토론회 자료	제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책자발간		
11.14	토론회 자료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 계획	책자발간		
11.29	자료집	민주자치발전포럼[1] 경상북도 경산시 2019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70부/토론회 배포용	
12.12	자료집	민주자치발전포럼[2] 대구광역시 동구 2019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100부/토론회 배포용	
12.28	연구논문	주택소유와 자산기반투표 : 17대 ~19대 대선분석	『한국정치학 회보』 52집 5호에 게재	연구자료로 활용	

1.4	세미나 자료	북한이주민 관점에서 본 대북 및 이주민정책 세미나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1.16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1)인천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총19회 개최
1.17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2) 강원(춘천)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1.18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3) 강원(강릉)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1.19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4) 경기(수원)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1.23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5) 울산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1.24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6) 대전세종	자체발간	220부 / 현장배포	
1.25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7)전북	자체발간	150부 / 현장배포	
1.25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8) 경북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1.26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09) 제주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1.30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0) 부산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1.31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1) 광주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2.1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2) 충남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2.2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3) 서울(강북)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2.3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4) 경남	자체발간	150부 / 현장배포	

2.5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5) 충북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2.6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6) 전남	자체발간	200부 / 현장배포	
2.7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7) 대구	자체발간	150부 / 현장배포	
2.8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8) 서울(강남)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2.9	정책간담회 자료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걸음 더 한걸음 더! 전국 순회 경청투어(19) 경기(의정부)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2.27	토론회 자료	집단지성포럼(제2회)-혁신성장과 산업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자체발간	150부 / 현장배포	
3.28	토론회 자료	집단지성포럼(제3회)-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전략	자체발간	150부 / 현장배포	
4.11	토론회 자료	2018 문화유산회복 정책토론회-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문화유산회복 재단과 공동	200부 / 현장배포	
4.18	토론회 자료	사회적경제 출범기념 토론회(제1회)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 방안	자체발간	150부 / 현장배포	
4.24	토론회 자료	사회적경제 출범 기념 토론회(제2회)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자체발간	150부 / 현장배포	
4.25	토론회 자료	집단지성포럼(제4회)- 산업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 방안	자체발간	100부 / 현장배포	
5.21	총람	사회적경제 정책·선거공약 총람	자체발간	300부 / 국회의원, 시도당 등 배포	
7.9	연구보고서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	자체발간	250부 / 국회의원, 시도당 등 배포	
12.7	사례분석 보고서	2018 지방선거 선거운동 우수 사례집 -지방선거를 보면 총선이 보인다	자체발간	260부 / 당지도부, 국회의원, 시도당 등 배포	

12.18	토론회 자료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제1회) - 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	자체발간	80부 / 현장배포	
12.26	세미나 자료	사회적경제 정책자문단포럼(제1회) - 사회가치연대기금 현황 및 활용 방안	자체발간	30부 / 현장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 (97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1 ~ 4월	민주연구원	정부연구기관 조찬 정책간담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정출연 원장단 참여	총 11회 참석
1.12	민주연구원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	경북지역 관련 공약 개발	
1.19	민주연구원 회의실	정책간담회	주한 러시아대사 간담회	
1.25	민주연구원 원장실	정책간담회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마련 위한 간담회	
1.29	강연	전국순회 설명회	지선 지역공약 (강원도)	보조
2.2	강연	전국순회 설명회	지선 중앙공약 ~ 주거 및 마을 부문, 미세먼지	보조
2.6	민주연구원 원장실	정책간담회	주한 인도대사 간담회	
2.24	일본 동경 대한민국 영사관	재일과학기술협회 합동분과회	패널 발표	
3.23	민주연구원 원장실	정책간담회	주한 대만대표부 대사 간담회	
3.24	국회 본청	당대표 특보단 회의	경제 간담회 발제	
3.26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토론.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	건강형평성학회 주최, 지역별 건강불평등 현황과 대응정책	
5.30	국 회	원혜영 국회의원실 정책토론회 발제	궁에도성 남북공동발굴을 위한 군사적 과제	

6.6	울산시당	울산광역시장 후보 방송토론	2018년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방송토론 전략 및 정책 답변안과 대응논리 지원	
6.7	울산시당	울산광역시장 후보 방송토론	2018년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방송토론자료 작성	
6.15	민주연구원 회의실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정치참사 인터뷰	2018년 지방선거의 의의와 평가,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6.20	국회 의원회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토론자료 참석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	
6.27	옛 충남도청 대의회의실	토론. “시민의 정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대전광역시 민선7기 과제	
6.27	서울대학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차 교수 워크샵 발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군사적 선행과제	
6.29	국 회 김병기 국회의원의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7.1 ~ 8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8년도 국방부처	부처실적	
7.2	국 회	안규백 국방위원장실 입법지원	「군수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완료
7.25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분과위원회 간담회	경제분야 강령정책 개정 간담회	
8.1	도시문제(월간) 기고	청년주거 이슈	정책 제안	
8.8	민주연구원	정책간담회	대만 대륙위원회 부위원장 방문 간담회	
8.23	강원도 속초 델피노	토론.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패널	
8. 25	중앙당	2018 전대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회	2018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안 마련	
8.27	민주연구원 회의실	정책간담회	중국공산당 당교 부교장 일행 연구원 방문	

8.29	민주연구원 회의실	정책간담회	KF(국제교류재단) 주요국 의회인사	
9.1 ~ 12월	국회, 민주연구원 등 더불어민주당	강령·정책분과위원회	외교·안보,	
10.12	국회 의원회관	자영업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토론회 참석	토론자로 참석하여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방향 토론	
10.31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식 간담회 참석	발표자로 참석하여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 설명	
11.2	선거연수원	유권자의 정치특성 제도개선 토론회 토론자 참여	유권자가 불편을 느끼는 선거운동 제도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11.9	국회의원회관	토론 2018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정당연구소 라운트테이블	
11.29	강연	설명회	경산시 청색경제 산업정책	
11.29	강연	전국순회 설명회	경북 경산시 지역정책	
12.7	국립외교원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자 참여	논문 '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발표	
12.8	중앙대학교	한국사회학회 2018 정기사회학대회 발표자 참여	논문 '자산기반투표와 복지국가 전략' 발표	
1.19	민주연구원 회의실	집단지성포럼 운영기획회의(1차)	집단지성포럼 운영 및 패널 구성 등	
2.08	민주연구원 회의실	집단지성포럼 운영기획회의(2차)	집단지성포럼 운영 및 패널 구성 등	
2.13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기획회의(1차)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	
2.21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기획회의(2차)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 /정책자문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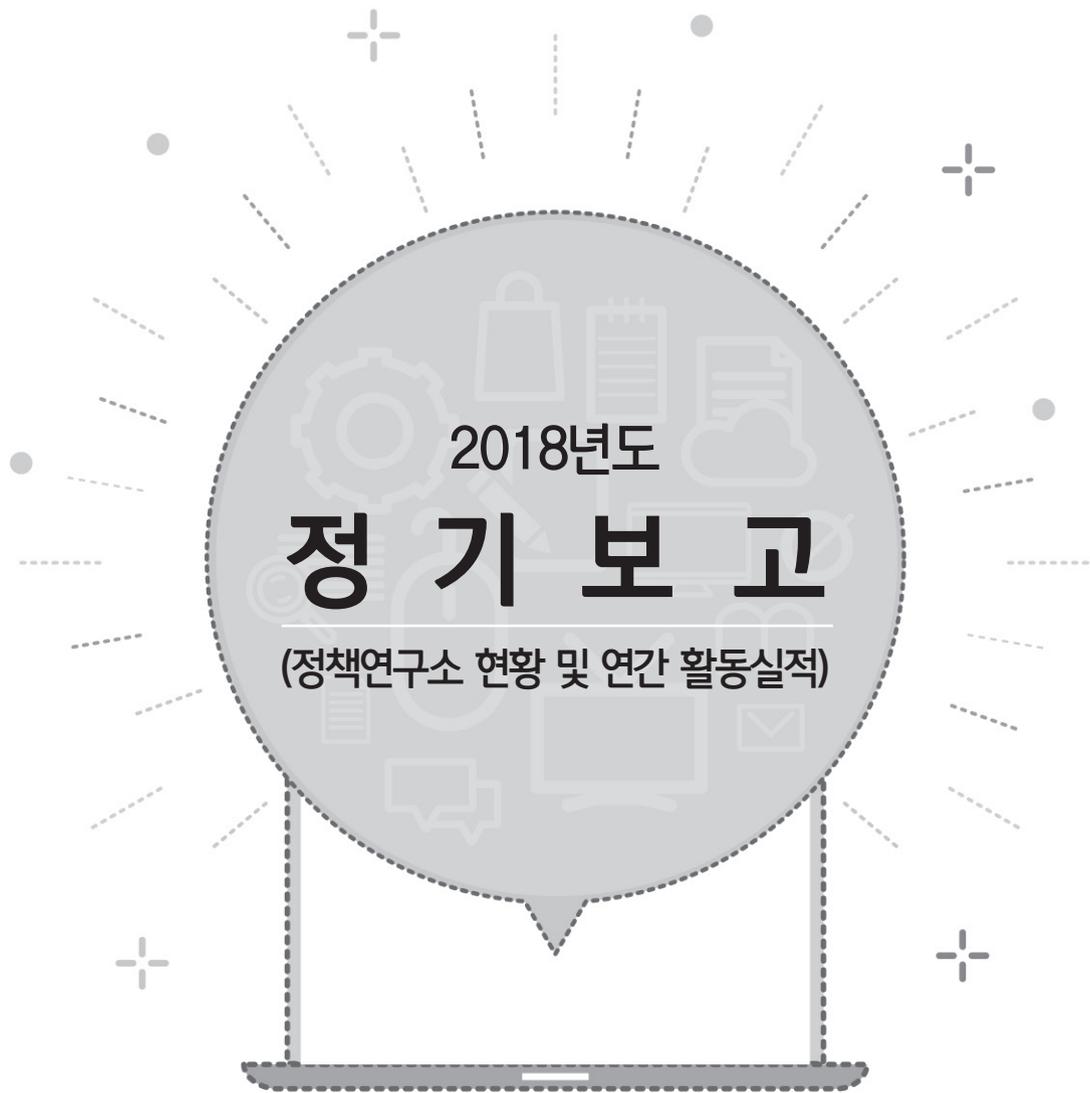
2.28	국회본청 귀빈식당	사회적경제 당정청 협의회	사회적경제 관련 현안 점검	
3.7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위원회 + 당정청 실무전략기획회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역할 및 과제, 사회적경제 방향	
3.9	국회의원식당	민주자치멘토단 기획회의		
3.14	한국가구박물관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위원 워크숍	사회적경제센터 활동 방향성 정립 및 2018년 사업계획 논의	
3.14	민주연구원 회의실	바이오경제포럼 준비 정책간담회(1차)	바이오경제포럼 개최 및 정책협력 방안	
3.15	민주연구원 회의실	민주자치 멘토단 내부간담회	지방선거 선거 공약 검토 /지방정부 및 지방의원 정책 우수 사례 발굴	
3.26	민주연구원 회의실	바이오경제포럼 준비 실무회의(1차)	바이오경제포럼 개최 및 정책협력 방안	
3.29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기획회의(3차)	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토론회 개최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 마련	
4.4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8 지방선거 공통 공약 워크숍 참가	2018년 지방선거 공약 개발 활동 공유 지방선거 공통 공약 제안 및 선정	
4.4	민주연구원 회의실	<집단지성센터>집단지성포럼 운영회의	집단지성포럼 토론회 발제 및 포럼 운영	
4.9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 공약화 준비 자료집 발간 중간 점검회의(1차)	지방선거 공약화 준비 자료 목차 구성 및 내용 검토	
4.12	민주연구원 회의실	바이오경제포럼 준비 정책간담회(2차)	바이오경제포럼 추진 계획안 검토 및 정책협력 방안	
4.12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기획회의(4차) + 정책자문단회의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 논의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화 의제 검토	

4.16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 공약화 준비 자료집 발간 중간 점검회의(2차)	지방선거 공약화 준비 자료 목차 구성 및 내용 검토	
4.16	민주연구원 회의실	집단지성포럼 과기전략정책위원회 (구 운영기획회의)	집단지성포럼 운영 및 패널 구성	
4.23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 공약화 준비 자료집 발간 중간 점검회의(3차)	지방선거 공약화 준비 자료 목차 구성 및 내용 검토	
4.27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기획회의(5차) + 정책자문단회의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공약화 의제 검토	
4.30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 공약화 준비 자료집 발간 중간 점검회의(4차)	지방선거 공약화 준비 자료 목차 구성 및 내용 검토	
5.24	민주연구원 회의실	집단지성포럼 결과 정책보고서 발간 기획회의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보고서 발간 논의	
5.28 ~ 6.13	충청북도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정책 지원	충북 제천·단양지역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정책 지원을 위한 파견	
6.27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기획회의(6차)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강화 방안	
6.28 ~ 8.25	민주연구원 회의실	전준위 강령정책분과위 파견	강령정책 개정을 위한 T/F 파견	
7.3 ~ 7.6	충남, 광주시	지역 정책 간담회	지역의견 청취 및 정책 적합도 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지역 실사)	
7.9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기획회의(7차)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논의	
7.18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사회적경제 당정청 협의회	사회적경제 일자리 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방안	

8.8	민주연구원 회의실	2018 지방선거 선거운동 우수 사례집 발간 기획회의	우수 사례 발간 추진방향 및 실행 계획	
8.27	여의도 다원	집단지성센터 전체회의	집단지성센터 활동보고 및 향후계획 논의	
8.28	국회 본청 625호	국회 노웅래 과기정통위원장 방문 정책간담회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 기술 정책 및 전략 설명(집단지성포럼 결과보고서)	
9.13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 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단 실무 지원	
9.14	국회의원회관 841호(이원욱의원실)	집단지성센터 내부 간담회	집단지성센터 운영,(가칭)과학기술혁신포럼/(가칭)집단지성미래전략포럼 추진 등	
10.15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자치발전기획회의 참석 및 실무 지원	자치발전포럼 기획 (시도지사협의회, 균형발전위 관계자 등)	
10.16	부산, 울산, 경남	(가칭)자치발전연구센터 영남권 자치발전기획조정회의 출장	민주자치발전포럼 출범을 위한 부산시청관계자, 부산시의원 및 시·도당 사무처장 의견청취	
10.17	대구, 경북	(가칭)자치발전연구센터 영남권 자치발전기획조정회의 출장	민주자치발전포럼 출범을 위한 구미시청 관계자, 대구시의원, 시·도당 사무처장 의견청취	
10.22	연구원 원장실(7층)	캐나다 사회혁신 자문위원 낸시님탄 민주연구원 내방 간담회	민주당/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 활동 소개 및 협력방안 논의	
10.22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회의 참석 및 지원	민주자치발전포럼 기획	
10.23	월드비전 회의실	대북제재 관련 민간단체 미팅 참석 및 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단 실무 지원	

10.26	연구원 대회의실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당 소속 지자체 서울사무소장 회의 참석 및 지원	민주자치발전포럼 출범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서울사무소장 의견청취	
11.2	중앙당 4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정책기획관 회의 참석 및 지원	광역자치단체 정책기획관단 및 대구·경북·제주 시·도당 정책실장 의견청취	
11.6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정례회의 참석 및 지원	센터 향후 활동목표 및 방향 논의	
11.0	국회귀빈식당 별실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연속토론회 지원 및 참석	지방분권형 남북교류협력 새로운 시작과 희망	
11.9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간담회	사회적경제 등 정책연구 및 공동세미나 협력 방안	
11.12	민주연구원 회의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기획회의(8차)	사회적경제센터 하반기 사업계획	
11.12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기획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 진행 등	
11.19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기획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 진행 등	
11.20	국회과기정통위원장 소회의실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실무기획회의	포럼 운영 및 패널 등 프로그램 논의	
11.22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점검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 진행 등	
11.26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점검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 진행 등	
11.29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민주자치발전포럼(1회) 행사 출장	경북 경산 (2019년 경산시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12.3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실무점검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 (포항, 대구) 기획	
12.4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실무점검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 (포항, 대구) 기획	

12.6	쉐라톤 서울 팔레스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운영기획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	
12.10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실무점검회의	민주자치발전포럼 (대구 동구) 기획	
12.12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민주자치발전포럼(2회) 행사 출장	대구 동구 (2019년 동구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12.14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민간단체 방북결과 비공개 간담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단 실무 지원	
12.17	연구원 8층 회의실	자치발전연구센터 운영기획회의 지원	민주자치발전포럼 평가 및 2019년 운영방향(안)	
12.17	국회의원회관 식당	민주당 사회적경제 전국위원회 제1차 시도당 위원장단 회의	사회적경제센터 주요 현황 및 계획보고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

여의도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V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6명	자체고용: 1명	
석사급: 18명		
기 타: 29명	외부파견:	
합 계: 53명	합 계: 1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6,097,397,220	2,323,279,856	1,065,453,298	9,486,130,374	6,430,155,983	3,055,974,391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62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7.11.27 -18.3.5	운영, 법제사법, 행정안전	[2018비전과정책] 정치-대한민국 4.0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외부 공동	100	정책보고서
17.11.27 -18.3.5	교육, 문화체육관광	[2018비전과정책] 교육·문화·기본으로 (Back to the Basic)	외부 공동	51	정책보고서
17.11.27 -18.3.5	보건복지, 환경노동	[2018비전과정책] 복지-보건복지, 일자리, 사회적 약자, 보육	외부 공동	41	정책보고서
17.11.27 -18.3.5	환경노동, 행정안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2018비전과정책] 사회-환경, 안전, 미디어	외부 공동	74	정책보고서
17.12.1 -18.1.11	보건복지	공적연금 개혁의 두 가지 길	외부 용역	5	이슈브리프
17.12.23 -18.1.22	교육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	자체	10	현안보고
17.12.28 -18.1.11	교육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자체	4	이슈브리프
1.1-3.31	경제	[2018비전과정책] 경제-“기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	자체	114	정책보고서
1.2-1.20	기획재정, 산업통상	文정부 촉발 최저임금 大亂 진단	자체	8	현안보고
1.2-1.30	기획재정, 산업통상	리더십이 살린 경제 -아베노믹스 경제학	자체	8	이슈브리프
1.4-1.11	외교통일	트럼프 행정부의 新 안보전략 평가	자체	3	이슈브리프
1.4-1.5	교육	이슈점검: 교장공모제	자체	1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1.10-1.18	법제사법	주취감경, 무엇이 문제인가	자체	4	이슈브리프
1.11-1.18	과학기술 방송통신	자유한국당이 배워야할 방탄소년단의 성공비결 5 가지	자체	5	이슈브리프
1.11-1.12	기획재정	이슈점점: 비트코인	자체	2	
1.15-3.10	정무	베트남 경제 현장 스페셜 리포트	자체	43	
1.17-1.19	환경노동	이슈점점: 최저임금	자체	2	
1.19-2.13	뉴미디어 · 홍보	지방선거 대비 홍보 방안연구	자체	10	현안보고
2.1-2.8	국토교통	지방선거 대비 강소도시권 육성 플랜	자체	5	이슈브리프
2.1-3.21	기획재정, 산업통상	최저임금발 서민청년물가 상승,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체	5	이슈브리프
2.5-2.8	교육	고3 수험생 82%, “정시보다 수시가 공정”	자체	4	이슈브리프
2.9-3.8	환경노동	‘과업중 대체근로 금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5	이슈브리프
2.13-2.22	과학기술 방송통신	포털 카풀앱 서비스의 논란과 대응방안	자체	5	이슈브리프
2.14-2.22	외교통일	美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자체	6	이슈브리프
2.19-3.5	정무	해외 정책 트렌드 연구 ① 영국 지방선거 정책 공약 분석	외부 공동	10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2.23-3.22	기획재정	재정준칙,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자체	5	이슈브리프
2.27-3.8	행정안전	대선 지역공약 분석과 지방선거와의 상관관계	자체	7	이슈브리프
2.28-3.13	교육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 현안보고	자체	8	현안보고
3.2-5.31	기획재정, 산업통상, 정무	과탄에 직면한 '문제' 노믹스-문제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진단	자체	61	여연정책 연구
3.2-3.8	외교통일	미국의 대북 해상 차단 조치와 한반도 정세 전망	자체	7	이슈브리프
3.2-4.15	기획재정	법인세 인하 등 선진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자체	5	이슈브리프
3.10-3.22	환경노동	문정부 청년 일자리대책의 주요 쟁점과 평가	자체	5	이슈브리프
3.13-4.12	법제사법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 상한을 규정하자”	자체	7	이슈브리프
3.15-3.22	교육	역대 최고치 기록한 사교육비	자체	5	이슈브리프
3.19-4.5	정무	해외 정책 트렌드 연구 ② 영국 런던 시장선거 후보 정책 분석	외부 공동	10	
3.26-4.5	교육	김상곤 교육정책의 난맥상	자체	5	이슈브리프
3.29-4.5	외교통일	2018 中 양화: 시진핑 1 인체제 강화와 향후 전망	자체	7	이슈브리프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4.1-4.14	기획재정, 산업통상	예상된 文정부發 ‘3월 고용쇼크’	자체	4	현안보고
4.1-4.5	과학기술방송통신	페이스북 국내 첫 과징금 사례 및 시사점	자체	5	이슈브리프
4.1-5.2	기획재정, 산업통상	금융위기 수준의 제조업 쇼크-통계청 발표 3월 ‘산업활동동향’ 관련	자체	7	현안보고
4.1-4.5	경제정책	통상 컨트롤타워, 장관급 독립기구로 격상해야	자체	5	이슈브리프
4.1-5.1	교육, 행정안전, 보건복지	문재인정부 1년 사회정책 진단. 문재인 포퓰리즘 정권의 내치실패와 민생파탄	자체	60	정책보고서
4.6-4.19	과학기술방송통신	인터넷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제도현황 및 개선안	자체	6	이슈브리프
4.6-4.12	경제정책	국가재정법 기본요건조차 충족 못한 추경案	자체	4	이슈브리프
4.11-4.19	과학기술방송통신	카카오 택시 유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4	이슈브리프
4.11-4.18	외교통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전망과 대책	자체	10	현안보고
4.11-4.26	교육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대책	자체	6	현안보고
4.12-4.19	복지	‘초고령 사회’ 진입 앞둔 한국의 시니어 시장	자체	8	이슈브리프
4.17-4.26	외교통일	남북정상회담 예상 결과 및 대응방안	자체	8	현안보고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4.18-4.23	외교통일	北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선언: 평가와 전망	자체	7	현안보고
4.19-5.3	경제정책	' 18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증	자체	4	이슈브리프
4.23-5.15	정무	해외 정책 트렌드 연구 ③ 영국 지방선거 정책 트렌드 분석	외부 공동	11	
4.25-4.25	외교통일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의 주한 미대사 임명 관련	자체	3	현안보고
4.25-4.29	외교통일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책	자체	13	현안보고
4.25-5.4	외교통일	(대한민국 안보위기 ①) 주한미군 철수 관련 논란과 대책	자체	13	현안보고
4.26-5.3	사회복지	도시 숲,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자체	9	이슈브리프
4.26-5.8	교육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육의 통합 운영 방안	외부용역	12	
4.29-5.1	외교통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분석: 美 조야 및 국내 전문가 반응	자체	7	현안보고
5.2-5.11	외교통일	미북 정상회담 관련: 쟁점, 전망, 대책	자체	13	현안보고
5.2-6.5	기획재정, 산업통상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달성?” -자영업·실직자는 인종에도 없는 J노믹스	자체	7	현안보고
5.2-5.16	경제	파탄에 직면한 ‘문제’ 노믹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진단	자체	76	여연정책 연구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5.10.-7.19	뉴미디어홍보	빅데이터에 나타난 6.13 지방선거 민심	자체	5	현안보고
5.14-5.15	외교통일	탈북 女종업원 복송 논란	자체	5	현안보고
5.16-5.18	외교통일	북한發 ‘판 흔들기’ : 평가 및 전망	자체	8	현안보고
5.20-6.8	보건복지	라돈 공포의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자체	5	이슈브리프
5.23-6.1	외교통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폐기 가능성 전망	자체	8	현안보고
5.24-5.25	외교통일	미북정상회담 결렬 관련 파장과 대책	자체	5	현안보고
5.24-6.8	경제정책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중단과 시사점	자체	6	이슈브리프
5.26-5.28	외교통일	2 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논란, 반응, 대책	자체	8	현안보고
5.29-6.8	외교통일	(대한민국 안보위기 ②)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관련 파장과 대책	자체	9	현안보고
6.7-6.13	외교통일	6.12 미북 정상회담 결과 관련 평가와 전망	자체	9	현안보고
6.9-7.9	정무	지방선거 이후, 실패원인, 문제점, 쇄신방안 등 세부내용 언론 분석	자체	47	
6.13-7.23	행정안전	6.13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	자체	60	현안보고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6.19-6.19	외교통일	UFG 훈련 중단 관련 파장과 대책	자체	5	현안보고
6.19-6.20	정무	「대한민국보수 어떤 내용으로 살릴 것인가」 좌담 결과보고	자체	3	
6.20-7.3	외교통일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분야 혁신안	자체	23	
6.21-6.27	외교통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의 평가, 파장, 전망	자체	7	현안보고
6.21-7.4	정무	공론화가 혁신비대위에 주는 시사점	자체	18	현안보고
6.25-7.12	보건복지	빛 좋은 개살구,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문제점	자체	5	이슈브리프
6.28-7.12	경제정책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문제점과 시사점	자체	8	이슈브리프
7.1-8.10	기획재정, 산업통상	근로시간 단축 -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에 겐 毒蠱	자체	5	현안보고
7.1-7.14	청년정책	2030 지지율 제고를 위한 연구보고서	자체	15	
7.1-7.26	여성가족	그녀들은 왜 분노하는가?	자체	8	이슈브리프
7.5-7.12	복지	제주 예멘 난민, 난민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체	6	이슈브리프
7.6-7.12	외교통일	폼페이오 장관의 3 차방북 평가와 비핵화 협상 전망	자체	9	이슈브리프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7.9-8.13	교육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난맥상	자체	14	현안보고
7.15-7.26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탈원전 부메랑으로 돌아온 전력수급 논란	자체	5	이슈브리프
7.15-8.14	행정안전	자유한국당 당 혁신(안)	자체	12	현안보고
7.15-8.14	행정안전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안)	자체	22	현안보고
7.2-8.10	기획재정, 국토	文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문제점	자체	6	이슈브리프
7.20-7.26	외교통일	북핵 협상과정에서 ‘중국 배후론’의 실체와 전망	자체	10	이슈브리프
7.20-7.30	정무	정당 혁신 방안 연구	자체	10	
7.23-7.24	경제정책	세수호조 및 양극화 현상의 진실	자체	5	현안보고
7.23-8.22	정무, 교육, 외교통일, 보건복지	집중연구과제 (Killer Contents)(안)	자체	4	현안보고
7.24-8.23	교육	고등교육 혁신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자체	4	이슈브리프
7.27-8.9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론: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한 부실공사	자체	9	이슈브리프
8.1-8.10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한전 적자로 인한 국민 전기료 인상 우려	자체	7	이슈브리프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8.1-9.15	경제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 분석 결과	자체	59	여연정책 연구
8.2-8.9	기획재정	문제 많은 전기요금제, 전기료 폭탄 맞는 소비자	자체	8	이슈브리 프
8.6-8.10	경제정책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점검	자체	5	현안보고
8.7-8.13	외교통일	북한産 석탄 밀반입 관련 쟁점과 과장	자체	10	현안보고
8.8-8.9	농림해양수산	장기간 폭염下 농축수산물 피해 및 대책	자체	8	현안보고
8.9-8.9	외교통일	비핵화 및 남북관계 관련 국민인식조사	자체	3	현안보고
8.10-8.17	보건복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자체	6	현안보고
8.11.-8.30	과학기술방송통신	유튜브의 국내 통신망사용 문제점 및 개선안	자체	5	이슈브리프
8.12-9.13	교육	ASU 사례로 본 학습혁명의 효과와 시사점	자체	7	이슈브리프
8.13.-8.23	환경	녹조 악화시킨 4 대강 보 개방의 역설	자체	3	이슈브리프
8.16-8.23	외교통일	관세청의 北 석탄 국내 밀반입 조사: 평가와 전망	자체	12	이슈브리프
8.21-9.20	행정안전	공공부문 임금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자체	9	현안보고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8.23-8.30	고용	외국인 근로자 130 만 시대, 현황과 대책	자체	12	이슈브리프
8.24-8.30	외교통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 평가, 전망	자체	8	이슈브리프
8.30-9.13	경제정책	‘평가르기식 보유세 강화’ 꿈수 논리	자체	4	이슈브리프
8.30-9.5	기획재정, 산업통상	장하성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Q&A 문건 검토의견	자체	6	이슈브리프
9.1-9.12	과학기술방송통신	택시업계와 키폰앱의 쟁점과 대응방안	자체	7	현안보고
9.1-9.10	정무	정기국회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자체	11	
9.1-9.13	보건복지	포퓰리즘 국가의 결말	자체	7	이슈브리프
9.1-9.30	기획재정, 산업통상	팩트로 본 문재인 정권 500 일 경제 성적표	자체	18	현안보고
9.1-11.1	행정안전	자유한국당의 선거전문가정당화의 모색	자체	23	현안보고
9.3-9.18	과학기술방송통신	상임위별 포털 정책 이슈 및 쟁점	자체	66	현안보고
9.6-9.7	기획재정	우리 조세부담률에 대한 평가	자체	4	현안보고
9.10-9.11	외교통일	‘<관문점선언> 비준동의’ 에 대한 대응논리	자체	5	현안보고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9.11-10.31	과학기술방송통신	문재인 1년 말과 글 빅데이터	자체	7	현안보고
9.12-9.14	외교통일	정부의 <판문점선언> 유엔 제출본 영문표기 논란	자체	5	현안보고
9.17-9.21	외교통일	<평양공동선언> 리딩포인트: 쟁점, 평가, 전망	자체	10	현안보고
9.19-9.20	외교통일	9.19 <평양선언> 관련 미 조야의 반응 및 평가	자체	4	현안보고
9.20.-10.2	과학기술방송통신	언론포털 쟁점과 이슈	자체	7	현안보고
9.21.-10.5	과학기술방송통신	1인 미디어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자체	7	현안보고
9.25-10.11	보건복지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아닌 복지정책	자체	5	이슈브리프
9.27-10.1	외교통일	<군사분야 합의서>에 나타난 '안보주권 해체'	자체	8	현안보고
10.1-10.10	기획재정,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	충격적 고용재난사태의 해법	자체	11	이슈브리프
10.5-10.11	외교통일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자체	18	이슈브리프
10.9-11.8	행정안전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문가 정당화의 모색	자체	8	이슈브리프
10.10-10.11	경제정책	문재인 대통령,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하는데...	자체	4	현안보고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10.10-10.25	환경노동	고용세습으로 드러난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	자체	11	이슈브리프
10.10-11.9	정무	4 차 산업혁명과 정치의 역할	자체	34	PPT
10.11-10.25	경제정책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체	9	이슈브리프
10.11-10.25	교육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	자체	20	현안보고
10.15-10.25	부동산	그린벨트 地價마저 올리는 부동산대책	자체	6	이슈브리프
10.16-11.4	외교통일	美 중간선거 판세 분석 및 대북정책 변화 관련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자체	11	현안보고
10.18-10.24	외교통일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비준 관련 대책	자체	5	현안보고
10.23-11.22	환경노동	연대임금정책과 그 시사점	자체	22	현안보고
10.24-10.25	외교통일	文정권의 ‘대북속도전’ 관련 국제사회의 평가	자체	5	현안보고
10.25-11.22	교육	정부여당의 사립유치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자체	8	현안보고
11.1-11.2	기획재정, 산업통상, 환경노동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비판적 검토	자체	7	이슈브리프
11.2-11.8	외교통일	남북합의 비준 논란 관련 핵심쟁점 및 평가	자체	8	이슈브리프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11.7-12.6	산업통산자원중소 벤처기업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자체	9	이슈브리프
11.10-11.22	환경노동	미세먼지 대책은 제자리걸음	자체	8	이슈브리프
11.11-11.22	과학기술방송통신	해외 주요 방송사 광고 현황 및 시사점	자체	5	이슈브리프
11.13-11.22	여성가족	성혐오 갈등 사태로 본 건강한 토론장의 필요성	자체	7	이슈브리프
11.14-12.13	행정안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분석	자체	25	현안보고
11.15-12.30	기획재정, 산업통상, 정부	국민 경제인식 조사분석-문재인정부 20 개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평가	자체	48	여연정책연구
11.19-11.27	정부	외부 전문가 그룹 네트워킹 및 싱크넷 구축 방안 연구	자체	9	
11.20-12.20	경제정책	2019 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자체	35	여연정책연구
11.21-12.20	정부	인공지능(AI)과 정치인의 미래	자체	6	이슈브리프
11.22-12.6	경제정책	자유한국 i 노믹스 (i nomics) 해설	자체	19	이슈브리프
12.1-12.6	과학기술방송통신	왜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자체	5	이슈브리프
12.4-12.12	정부	문재인 정부 공공개혁 문제점 연구	자체	7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 량	비 고
12.5-12.18	정무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개편 문제점 연구	자체	6	
12.5-12.24	외교통일	2018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평가 및 전망	자체	15	현안보고
12.5-12.20	보건복지	일본 공적연금 개혁사례의 시사점	자체	6	이슈브리프
12.7-12.28	정무	문재인 정부 장기집권 주장 비판 연구	자체	15	
12.10-12.21	과학기술방송통신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검토 보고서	자체	5	현안보고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162 부.

나. 토론회 등 개최(51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정책 간담회	1.4	여의도연구원	비전 2018 안보통일분과 5차 회의	2018 北 신년사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정책 세미나	1.9	여의도연구원	2018년 주택시장정책 방향	2018년 주택시장정책 방향 과 전망	
정책 간담회	1.10	여의도연구원	비전 2018 안보통일분과 6차 회의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와 향후과제	
정책 간담회	1.11	여의도연구원	대입제도 발전방안	관련 전문가 초청하여 대입제도 발전방안 모색	
정책 간담회	1.12	여의도연구원	초중등교육 발전 방안	관련 전문가 초청하여 초중등교육 발전방안 모색	
정책 간담회	1.17	여의도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 진단 및 문제점	
정책 간담회	1.17	여의도연구원	비전 2018 안보통일분과 7차 회의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의 논란과 영향	
정책 간담회	1.19	고려대학교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발전방안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	1.25	여의도연구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아베노믹스의 평가를 통한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모색	
정책 간담회	1.26	여의도연구원	비전 2018 안보통일분과 8차 회의	北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준비와 정세 전망	
정책 간담회	1.31	여의도연구원	비전 2018 안보통일분과 9차 회의	북한의 금강산 공동행사 취소의 의도와 파장	
정책 간담회	2.7	여의도연구원	비전 2018 안보통일분과 10차 회의	북한의 적극적 대화공세와 우리의 대응	
정책 간담회	2.22	국회 본관	청년맞춤형 건강 검진 간담회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한 의무건강검진 발의에 대한 간담회	
정책 토론회	2.28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정책 간담회	3.14	여의도연구원	2018 지방선거 대비 전략TF 1 차회의	6.13 지방선거 정국의 현황 및 전략을 점검	
정책 간담회	3.19	여의도연구원	2018 지방선거 대비 전략TF 2 차회의	현정부의 경제 失政 분석을 토대로 당의 전략 및 대책 수립	
정책 간담회	3.21	여의도연구원	2018 지방선거 대비 전략TF 3 차회의	지방선거 주도권 선점 이슈 개발 및 해법 모색	
정책 간담회	3.26	여의도연구원	2018 지방선거 대비 전략TF 4 차회의	경제선대위 출범에 따른 액션플랜 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정책 간담회	4.2	여의도연구원	2018 지방선거 대비 전략TF 5 차회의	지방선거 홍보전략 구상 및 구체화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	4.16	여의도연구원	남북정상회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 분석·평가 및 전망	
정책 간담회	4.27	국회의원회관	학생중심 캠퍼스를 위한 청년 간담회	당 대학생위원회, 신보라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대학생활' 관련 간담회	
정책 간담회	5.4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	인터넷청소년보호책임자 -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대형 포털 등 IT 기업들의 청소년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모색	
정책 세미나	5.8	여의도연구원	미북정상회담 시나리오별 결과 전망과 대응방안	미북회담 결과 전망 및 당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	5.24	여의도연구원	북한인권 문제 논란과 향후 전망	탈북민 인권 보호 실태 점검 및 탈북민 사회 보호 대책 수립	
정책 토론회	5.25	국회의원회관 제1 회의실	미북정상회담 전망 및 대책강구	트럼프의 미북정상회담 전격취소의 파장과 향후 한반도 정세 분석	
정책 토론회	6.4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전망	미북회담 이후 北 비핵화 가능성 타진 여부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	
행사	6.6	종각 마이크업팩트	청년토크콘서트 -트루만톡-	김세의 기자, 윤서인 작가, 우원재 대표, 이윤정 위원, 한상운 작가와 청년 100 명이 남북관계와 통일, 북한인권에 대하여 논의한 야외행사	
정책 토론회	6.21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6.12 미북정상회담 진단과 향후 전망 및 대책	싱가포르 회담 결과 분석 및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정책 세미나	7.18	여의도연구원	文정부 안보통일 분야 정책 점검 및 당의 대응방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외교안보 失政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정책 세미나	7.20	여의도연구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독립성 확보 방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문제점 점검 및 국민연금의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한 모색	
정책 토론회	7.23	국회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이 초래한 위기상황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 토론회	7.23	국회 의원회관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소득주도성장에서 비롯된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모색	
정책 토론회	8.30	국회 의원회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모색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 바람직한 개편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8.8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	온라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O2O 사업으로 인한 사이버 골목 상권 침해 방지 및 관련 기업들과의 상생방안	
정책 세미나	8.13	여의도연구원	북한産 석탄 반입 관련 의미, 파장, 대책	북한産 석탄 밀반입 논란 관련 주요이슈 점검, 향후 파장에 따른 대책 마련	
정책 토론회	9.3	국회 의원회관	고등교육 혁신방안	대학교육 혁신 방안 모색	
정책 간담회	9.4	여의도연구원	문재인정부 국가주의 비판 1 차 간담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관점 국가주의 비판 및 한국 국가주의의 도전과 자유한국당의 진로	
정책 토론회	9.7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방개혁 2.0: 북핵폐기 없는 무장해제의 위험성	文정부의 국방개혁 2.0 를 종합평가하고, 북핵폐기 없는 안보해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전략 모색	
정책 간담회	9.11	여의도연구원	문재인정부 국가주의 비판 2 차 간담회	문재인정부 과잉 국가개입 사례 및 언론이 본 국가주의 논쟁	
정책 간담회	9.17	여의도연구원	문재인정부 국가주의 비판 3 차 간담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가주의 비판의 적실성	
정책 간담회	10.12	여의도연구원	문재인정부 국가주의 비판 4 차 간담회	문재인정부 국가주의 비판 토론회 기획회의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비고
정책 간담회	10.17	여의도연구원	문재인정부 국가주의 비판 5 차 간담회	문재인정부 국가주의 비판 토론회 기획회의	
정책 세미나	10.22	여의도연구원	美 중간선거 관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美 역대 행정부의 중간선거 이후 對한반도 정책변화를 분석, 시사점 도출	
오픈방송 간담회	10.25	자유한국당 당사 시민정치원	‘말도 못하게 하는 세상’ 오픈방송	1인 미디어 환경 및 활성화 정책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유튜브 초청 생방송 간담회	
정책 세미나	10.25	여의도연구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중간선거 승패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능성을 예측,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	
정책 간담회	11.6	여의도연구원	“청년이여 자유를 호흡하라” 평가회	행사 후 평가회	
컨퍼런스 콘서트	11.10	자유한국당 시민정치원	영등포 Freedom 시즌1 “청년이여 자유를 호흡하라”	유튜브 생방송 컨퍼런스 콘서트	
정책 세미나	11.15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통일 현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당의 대북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고견 청취 및 의견 교환	
정책 간담회	11.20	여의도연구원	영등포 Freedom 시즌2 기획회의	보수 유튜브 활성화 방안 기획회의	
정책 세미나	11.29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한국경제의 성장세 추락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과제 모색	
정책 세미나	12.17	여의도연구원	2018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평가 및 전망	2018년 북한 및 한반도 정세 관련 주요 이슈 (비핵화, 남북관계, 북한내부) 분석·평가, 내년도 전망 및 핵심정책 마련	

다. 교육 · 연수 활동(4회)

교육 · 연수명	일 시 (기간)	장 소	주요내용	비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특강	1.22	더플라자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한 경제 전망	
2018 하반기 국회대비 정책혁신 워크숍	7.3	동양인재개발원	하반기국회 대비 정책 보완방안 모색 및 토론	
유튜브 방송교실	10.19-12.7	자유민주국민연합	유튜브 1인 방송 교육	
중앙선관위 2018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11.29-11.30	라르고빌 리조트	정당연구소별 연구개발 사례 공유	

라. 정책홍보(127회)

일 시 (기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2018년 사무식	포토뉴스
1.1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01) 트럼프행정부의신안보전략평가/공적연금개혁의두가지길/학 생부종합전형의문제점과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1.1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비전2018위원회	토론회 /간담회
1.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임직원, 영화 '1987' 단체관람	소식 /대의홍보
1.1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02)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뜨거운감자' 주취감경(酒醉減輕)',무엇이 문제인가 /자유한국당이 배워야할 방탄소년단의 성공비결 5가지	보고서 발간
1.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연포커스 2018-01) 文정부축발최저임금大亂진단	보고서 발간
1.2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03) 리더십이 살린 일본경제-아베노믹스 경제학 /美, 셰이프가드발동: 2018년 통상 환경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2.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최초로 전국 100여개대서 청년 정책 자문위원 150명 위촉	소식 /대의홍보
2.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04) 서울시'찾·동'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고3 수험생82%,"정시가 수시 보다 공정" /지방선거 대비 강소(強小)도시권 육성 플랜	보고서 발간
2.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05) 美'2018핵태세검토포토보고서(NPR)'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2.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건강 사각지대 청년을 위한 정책 간담회 -청년 맞춤형 건강검진 아이받나?	토론회 /간담회
2.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연구직 채용 모집 공고	모집 공고
3.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글로벌리포트 2018-01) 영국 지방선거 보면 한국 지방선거 보인다① -최근 영국 지방선거 3大 키워드	보고서 발간

일 시 (기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3.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06) ‘파업중대체근로금지’ 어떻게할것인가?/미국의 대북해상차단 조치와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 발간
3.1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스페셜리포트 《기업을 살리는 나라 베트남을 보다》 발간	소식 /대외홍보
3.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07) 최저임금 發서민·청년물가상승, 어떻게대처할것인가? /재정준칙, 어떻게 법제화 할것인가? /文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쟁점과 평가 /역대 최고치 기록한 사교육비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발간
4.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글로벌리포트 2018-02) 영국 지방선거 보면 한국 지방선거 보인다② -2016년 런던시장 선거 노동당 뒤집기 5대성공요인	보고서 발간
4.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09) 국가 재정법 기본요건 조차 충족 못한 추경案 /중평모녀의비극,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법인세인하 등 선진과세 체계확립의 필요성 /헌법에 국회의원정수 上限을 규정하자	보고서 발간
4.1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2 018-10) 예견된文정부發‘실업대란’/‘초고령사회’진입앞둔한국의시니 어시장카카오택시유료화의문제점과개선방안/인터넷청소년 보호책임자의제도현황및개선안	보고서 발간
4.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08) 김상곤교육정책의난맥상/通商컨트롤타워, 장관급독립기구로 격상해야/2018中양화:시진핑1인지배체제강화와향후전망/페 이스북에대한국내첫과정금지사례및시사점	보고서 발간
5.3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11) 금융위기수준의 ‘제조업쇼크’ /공사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급증 /도시숲,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보고서 발간
5.3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研,웹툰『나라다운(Down)나라』시리즈 선보여	소식 /대외홍보
5.3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여의도研, 웹툰 『나라다운(Down)나라』 시리즈선보여	보도자료
5.3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웹툰-01)나라 DOWN 나라-일자리가 큰일 났다	웹툰
5.1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글로벌리포트 2018-03) 영국 지방선거 보면 한국 지방선거 보인다③ -영국 정책 트렌드 200%활용법	보고서 발간
5.16	인터넷	사이트 게재	파탄에직면한 ‘문제’ 노믹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진단	연구보고서 /대외홍보

일시 (기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5.1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연정책연구 2018-01) 과탄에 직면한 '문제'노믹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정책 진단	보고서 발간
5.3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웹툰-02) 나라 DOWN 나라 -최저 임금 대란 큰일 났다	웹툰
5.3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5월31일]여의도연, 웹툰 『나라다운(Down)나라』 시리즈 선보여	언론보도
6.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웹툰-03) 나라 DOWN 나라 -근로시간 단축 큰일 났다	웹툰
6.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웹툰-04) 나라 DOWN 나라 -비정규직 철폐 큰일 났다	웹툰
6.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6월4일] 여의도연구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전망』 세미나 개최	언론보도
6.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웹툰-05) 나라 DOWN 나라 -나라 곳간 평평 큰일 났다	웹툰
6.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6월6일]여의도연구원 '트루만독' 간담회 개최	언론보도
6.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트루만독-북핵과 통일 그리고 북한 인권	포토뉴스
6.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웹툰-06) 나라 DOWN 나라 -에너지 정책 큰일 났다	웹툰
6.1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2018-12)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90%” 자영업자·실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중단과 시사점 /라돈 공포의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 발간
6.1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웹툰-07) 나라 DOWN 나라 -성장엔진 꺼진 대한민국 큰일 났다	웹툰
6.2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웹툰-08) 나라 DOWN 나라 -부자 증세 포퓰리즘 큰일 났다	웹툰

일시 (기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6.2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웹툰 01-08 모습) 나라 DOWN 나라	웹툰
6.2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현황분석자료) 거꾸로 가는 文정부 경제정책	보고서 발간
7.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	교육.연수
7.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 개최	포토뉴스
7.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13) 국민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문제점과 시사점 /폼페이오 장관 3차방북의 평가와 비핵화 협상 전망 /빛좋은 개살구,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문제점 /제주예멘난민, 난민문제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보고서 발간
7.2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7월21일] (정책토론회)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해법은 없나?	언론보도
7.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빨간불켜진한국경제,해법은없나? 정책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7.2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 /대의홍보
7.2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14) 탈원전 부메랑으로 돌아온 전력수급논란 /그녀들은 왜 분노 하는가? /북핵협상과정에서 '중국배후론'의 실체와 전망	보고서 발간
7.3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7월31일]김선동 여의도 연구원장 '국정방기프레임'가동, 인권·노동 챙겨야	언론보도
8.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정책토론회]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 /간담회
8.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원, 문제인 정부 경제 정책 비판 토론회 개최	포토뉴스
8.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8월8일] 여의도연구원, 온라인상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언론보도

일시 (기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8.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15) 소득주도 성장론: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한 부실공사 /문제 많은 전기 요금제, 전기료 폭탄 맞는 소비자 /文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문제점	보고서 발간
8.1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북한産 석탄 반입 관련 의미, 파장, 대책	토론회 /간담회
8.2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16) 韓電 대규모 적자, 국민 혈세 낭비하는 脫원전 /녹조악화시킨 4대강보개방의 역설 /관세청의北 석탄 국내 밀반입조사: 평가와 전망 /고등 교육 혁신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보고서 발간
8.3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17) 對국민경제인식조사 분석결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 평가, 전망 /유튜브의 국내 통신망 사용 문제점 및 개선안 /외국인 근로자 130만시대, 현황과 대책	보고서 발간
8.3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터 소식지
8.29-8.3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터 소식지
8.29-12.2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외교안보 및 대북통일 관련 주요소식	일일동향 발간 (총 82회)
9.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터 소식지
9.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9월4일]김선동 여의도 연구원장 인터뷰	언론보도
9.4-9.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터 소식지
9.7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유튜브	국방개혁2.0 복핵 폐기 없는 무장해제의 위험성토론회	토론회/간담회 /영상!Today
9.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국방개혁2.0 복핵 폐기 없는 무장해제의 위험성	토론회 자료집 발간
9.10-9.1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터 소식지

일시 (기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9.1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對국민 경제인식조사 분석 결과	연구보고서 /대외홍보
9.1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18) 포퓰리즘국가의결말 /ASU 사례로 본 학습혁명의 효과와시 사점 /최악의 고용지표가 선순환 체질 변화?: 장희성 정책 실장 기자간담회(8.26)에 대한 비평 / '편가르기식보유세강화' 꼼수논리	보고서 발간
9.1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9.1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연정책연구2018-02) 對국민경제인식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 발간
9.17-9.2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9.2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 청년정치캠퍼스Q 수강생 모집	소식 /모집공고
9.2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9.2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9월23일]여의도연구원, 2018청년정치캠퍼스Q 개강	언론보도
10.1	인터넷	사이트 게재	팩트로 본 문재인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연구보고서 /대외홍보
10.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0.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研, 『팩트로본문재인정부500일경제성적표』 발간	포토뉴스
10.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研, 『팩트로본문재인정부500일경제성적표』 발간	소식 /대외홍보
10.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현안보고) 팩트로 본 문재인정부 500일 경제성적표	보고서 발간

일시 (기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0.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10월1일]여의도硏,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발간	언론보도
10.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여의도硏, 웹툰 『나라다운(Down)나라』 시리즈 선보여	보도자료
10.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0.4-10.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0.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0.9	인터넷	당홈페이지 /SNS게재 및 배포	"군사 분야 합의서: 이것이 진실이다"카드뉴스 제작	당정책위· 홍보국과협 업
10.10 -10.1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0.1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19) 충격적 일자리 재난사태의 해법 / '평양선언' 과 '군사합의서' 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복지 정책	보고서 발간
10.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0.15 -10.1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0.22 -10.2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0.2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20) 고용 세습으로 드러난 귀족 노조의 좌파 기득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린벨트地價마저 올리는 부동산 대책 /(현안보고)사립유치원사태의본질과과제	보고서 발간
10.2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일시 (기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0.29-1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1.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1.5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11월5일]여의도연구원 현안보고 '사립유치원 사태 본질과 과제' 주목할 내용 보도	언론보도
11.5-11.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1.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종인 수석 연구위원, 헤럴드 경제 기고 '경제가 문제' 리는 국민 여론	연구원 동향
11.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2018-21) 경제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문가 정당화를 위한 모색 /남북합의 비준 논란 관련 핵심 쟁점 및 평가 /(현안보고) 공공기관 고용 세습사태의 쟁점과 대응방향	보고서 발간
11.8-11.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1.12 -11.1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1.19 -11.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1.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22) 미세 먼지 피해는 커지는데 대책은 제자리걸음 /해외 주요 방송사의 현황 및 시사점 /성형오 갈등사태로 본 건강한 토론장의 필요성 /(현안보고)연대 임금정책(solidaristicwagepolicy)과 그 시사점 /(현안보고)정부 여당의 사립유치원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 발간
11.2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1.2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1.2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토론회자료집)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과제	토론회 자료집 발간

일시 (기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1.2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세미나 /대외홍보
11.2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정책세미나 ‘국내의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포토뉴스
11.2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여의도연구 ‘2019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11.28 -11.2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2.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12월12일]여의도연구 ‘한국 경제 국민 인식 진단 여론 조사’	언론보도
12.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9개월, 생활 형편 악화일로	보도자료
12.1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2.13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의도연구 ‘한국 경제 국민 인식 진단 여론 조사’ 실시	소식 /대외홍보
12.1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2.2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과제	연구보고서 /대외홍보
12.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연정책연구 2018-03)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과제	보고서 발간
12.2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24) 일본공적연금개혁의 시사점 /2018유럽연합(EU)청소년 정책 방향과 시사점 /인공지능(AI)과 정치인의 미래 /(현안보고)對국민 경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 발간
12.20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12월20일]여의도연구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과제’	언론보도

일시 (기간)	홍보 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2.3-12.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2.6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이슈브리프 2018-23)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생계형 일자리로 내 몰리는 노인들/ 왜 미국중간선거에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현안보고)자유한국노믹스(inomics)해설	보고서 발간
12.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2.10 -12.1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2.17 -12.19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2.2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2.24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안보통일 일일 주요소식	안보통일센 터소식지
12.2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국민 경제인식 조사 분석 -문제인 정부 20개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평가	연구보고서 /대외홍보
12.2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여연정책연구 2018-04) 국민 경제 인식 조사 분석-문제인 정부 20개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평가	보고서 발간
12.28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018년12월28일]여의도硏 문제인정부 20개월 경제성적과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평가조사' 발표	언론보도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60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1.4	정책보고서	트럼프행정부의 新안보전략 평가	자체발간	160부	
1.11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01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18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02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25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03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2.8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04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2.22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05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2.22	정책보고서	美 ‘2018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자체발간	160부	
2.22	세미나자료	청년맞춤형 건강검진 아이 받니?	자체발간	50부 세미나 참석자 배포	
3.2	정책보고서	2018비전과 정책 “오늘의 안보튼튼 내일의 평화통일”	자체발간	100부	
3.5	정책보고서	[2018비전과정책]정치:대한민국 40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외부용역	100부 당 선거공약 참고자료로 활용	
3.5	정책보고서	[2018비전과정책]교육문화: 기본으로(BacktotheBasic)	외부용역	100부 당 선거공약 참고자료로 활용	
3.5	정책보고서	[2018비전과정책]복지: 보건복지일자리 사회적약자보육	외부용역	100부 당 선거공약 참고자료로 활용	
3.5	정책보고서	[2018비전과정책]사회: 환경안전미디어	외부용역	100부 당 선거공약 참고자료로 활용	
3.5	연구보고서	(글로벌리포트 2018-01) 영국 지방선거 보면 한국 지방선거 보인다 ① -최근 영국3.5 지방선거 3大 키워드	자체발간	150부 당 참고자료로 활용	
3.8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06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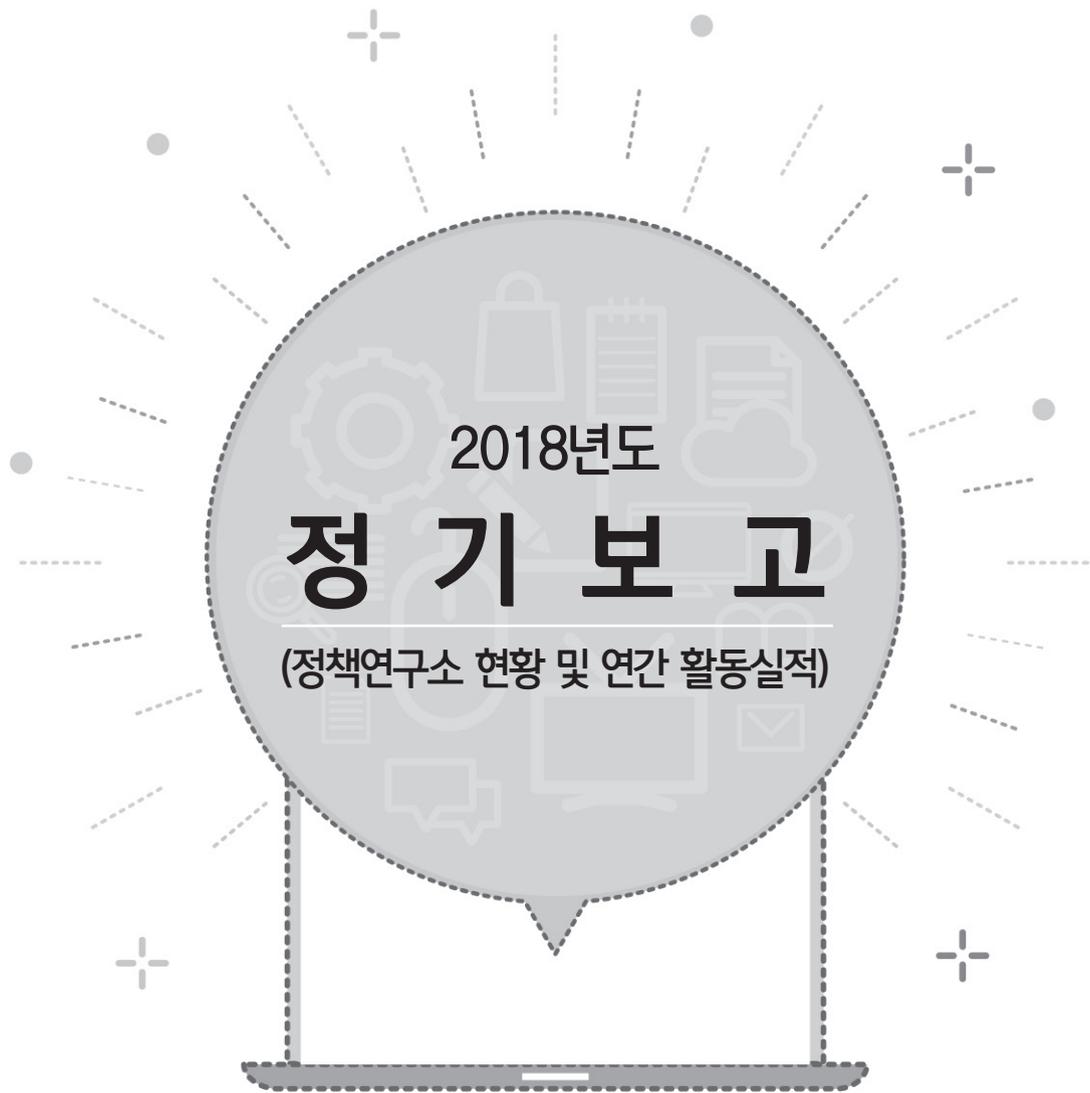
발간 일자	종 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3.8	정책보고서	미국의 대북 해상차단 조치와 한반도 정세 전망	자체발간	160부	
3.10	보고서	스페셜리포트《기업을 살리는 나라 베트남을 보다》	자체발간	300부	
3.22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07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3.31	연구보고서	2018비전과정책-경제분과 “키움과나 눔의 쌍끌이 경제”	자체발간	100부 당 선거공약 참고자료로 활용	
4.5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08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4.5	연구보고서	(글로벌리포트2018-02) 영국지방선거보면 한국지방선거 보인다② -2016년 런던시장선거 노동당 뒤집기 5대 성공 요인	자체발간	150부 당내 참고자료로 활용	
4.5	정책보고서	2018中양화: 시진핑 1인체제 강화와 향후 전망	자체발간	160부	
4.12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09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4.19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10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4.27	세미나자료	빼앗긴 캠퍼스에도 봄은 오는가?	자체발간	50부 세미나 참석자 배포	
5.3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11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5.15	연구보고서	(글로벌리포트2018-03) 영국지방선거 보면 한국지방선거 보인다③ -영국정책트렌드 200%활용법	자체발간	150부 당내 참고자료로 활용	
5.16	연구보고서	파탄에직면한‘문제’노믹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정책 진단	자체발간	17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5.25	토론회자료집	미북 정상회담 전망 및 대책강구	자체발간	50부 토론회 당일 배부 및 당내 참고자료로 활용	
6.4	토론회자료집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전망	자체발간	50부 토론회 당일 배부 및 당내 참고자료로 활용	

발간 일자	종 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6.11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12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6.21	토론회자료집	6.12 미북정상회담 진단과 향후 전망 및 대책	자체발간	50부, 토론회 당일배부 및 당내 참고자료로 활용	
6.27	정책보고서	한미군사훈련중단의파급영향과전망	자체발간	160부	
7.10	정책보고서	폼페이오3차방북평가와비핵화협상전망	자체발간	160부	
7.12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2018-13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7.23	세미나자료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해법은 없나	자체발간	100부, 세미나 참석자 배포	
7.23	토론회자료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해법은 없나	외부용역	100부, 세미나 참석자 배포	
7.25	정책보고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국 배후론의 실체와 전망	자체발간	160부	
7.26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2018-14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8.3	토론회자료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편 방안모색	외부용역	100부, 세미나 참석자 배포	
8.9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2018-15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8.21	정책보고서	관세청의 北석탄 국내 밀반입 조사: 평가와 전망	자체발간	160부	
8.23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2018-16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8.28	정책보고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 평가, 전망	자체발간	160부	
8.30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2018-17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발간 일자	종 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9.7	토론회자료집	국방개혁20: 복핵 폐기 없는 무장해제의 위협성	자체발간	200부, 토론회 당일 배부 및 당내 참고자료로 활용	
9.13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2018-18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9.13	연구보고서	對 국민 경제인식 조사 분석결과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0.1	연구보고서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500일 경제 성적표	자체발간	15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0.8	정책보고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자체발간	160부	
10.11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19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0.25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20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1.8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21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1.22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22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1.29	세미나자료	2019년도 국내 외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과제	자체발간	70부 세미나 참석자 배포	
12.3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23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2.17	서식자료	이슈브리프 및 현안보고 세부 편집 양식	자체발간	원내 자료 작성 시 활용	
12.20	연구보고서	이슈브리프 2018-24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2.20	연구보고서	2019년 국내 외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과제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12.27	연구보고서	국민 경제 인식 조사 분석 -문재인 정부20개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평가	자체발간	160부 주요 당직자, 의원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14건)

일(기)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1-3.31	여의도연구원	비전 2018 위원회 경제 분과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대비하 여보수의새로운정책방향과역점 추진과제발굴	
1.1-3.31	여의도연구원	비전 2018 위원회 기획 분과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대비하 여보수의새로운정책방향과역점 추진과제발굴	
2.1	자유한국당사	청년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정당최초로전국100여개대학교1 50여명의청년을정책자문위원으 로위촉	
1.2-2.21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교육 분야 헌법개정특위	특위 위원으로 참여	
2.20-6.13	국회 의원회관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공약개발단 간사로 참여	
2.24	강남구 대치동 스페이스 쉐어 파라다이스센터	나비미래회의주최 2018나비정치학교	청소년.청년단체주최정치학교에 서선거제도개혁을주제로특강	
3.7-3.27	국회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	경제·노동복지 정책혁신단 활동	
8.9-10.8	국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좌표와 가치 재정립 소위원회	좌표와 가치 재정립 소위원회 진행	
8.31	종로구 인사동 자유민주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주최6.13지방선거평가와 향후대책대토론회	시민단체 주최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	
10.23	여의도연구원	외신 기자 내원 인터뷰	일요미우리신문특별기획'제1야 당싱크탱크활동현황'인터뷰	
11.9	국회 의원회관	2018대한민국정책컨벤션 &페스티벌 싱크탱크세션	김선동여의도연구원장이'4차산 업혁명과정치의역할'을 주제로KeynoteSpeech	
11.9	국회 의원회관	2018대한민국정책컨벤션 &페스티벌 싱크탱크세션 정당연구소라운드토론회	여의도연구원 대표패널로 참여	
11.29-30	인천 강화 소재 라르고빌리조트	중앙선관위 주관 2018 정당정책 연구소 워크숍	정당 정책연구원과 교류협력 방안 논의	
12.7	종로구 인사동 자유민주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아 카데미주최'선거입문정치 교실'	시민단체주최정치교실에서'선거 여론조사'를 주제로 강의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 -

바른미래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 대산빌딩 4층			V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8	자체고용:	
석사급: 6		
기 타: 1	외부파견:	
합 계: 15	합 계: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3,427,044,517	81,791	-	3,427,126,308	314,423,118	3,112,703,190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2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81020~ 181025 (5일)	교육	국가교육위원회와 학제개편	자체	4p	별첨1
181022~ 181027 (5일)	외교	정책공공외교 방향과 혁신	자체	4p	별첨2
181101~ 181106 (6일)	노동	채용비리-고용세습 근절 대응 전략	자체	9p	별첨3
181101~ 181106 (5일)	방송통신	가짜뉴스와 문재인정부 입법 의도의 문제점	자체	7p	별첨4
181101~ 181106 (5일)	외교	미국 중간선거 관전 포인트	자체	5p	별첨5
181101~ 181106 (5일)	정치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 및 대응방향	자체	5p	별첨6
181102~ 181107 (5일)	외교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한의 비핵화 전망	자체	4p	별첨7
181110~ 181125 (15일)	교육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방안	자체	3p	별첨8
181118~ 181123 (5일)	행안	‘청와대 정부’ 프레임 분석과 이슈전략	자체	10p	별첨9

181206~ 181211 (5일)	외교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실천과제와 전망	자체	8p	별첨10
181207~ 181214 (8일)	정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 방안	자체	3p	별첨11
181210~ 181215 (5일)	정치	미국 중도당 개괄	자체	4p	별첨12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12부.

나. 토론회 등 개최(9회)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여론조사	181023~ 181027 (4일)	전국단위	바른미래당 전략조사	지지율 제고 방안 및 향후 전략 방안 모색	외부 용역
심포지엄	181204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전환시대의 신경제 패러다임:침몰하는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모색	
여론조사	181210~ 181221 (11일)	전국단위	선거제도 관련 국민인식조사	국회 역할 수행 평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외부 용역
여론조사	181210	전국7개권역	정치·사회현안관련 여론조사1차	국정, 정당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유권자 여론 파악	외부 용역

여론조사	181211	전국7개권역	정치·사회현안관련 여론조사2차	국정, 정당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유권자 여론 파악	외부 용역
여론조사	181212	전국7개권역	정치·사회현안관련 여론조사3차	국정, 정당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유권자 여론 파악	외부 용역
포럼	181214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헌정체제의 전환:87체제에서 2020체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가개혁 전략과 로드맵 고찰	
간담회	181220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바른토론배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모색	바른토론배틀 평가 및 개선방안, 바른토론배틀 참가자 활동 참여 모색	
토론회	181221	버텍스코리아 세미나룸	바른미래연구원 정책·사업계획	좌동	

다. 교육·연수활동(3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2018 바른미래당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연수	181102~ 181103	대명소노펠리체 (강원도 홍천군 소재)	선거제도 개혁과 민생정당 실현, 양당 통합의 화학적 결합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주최
2018년도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181129~ 181130	라르고빌 (인천 강화군 소재)	정당·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분석집에 관한 토론	
빅데이터의 이해와 응용	181218	바른미래연구원 대회의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치 혁신 모색	

라. 정책홍보(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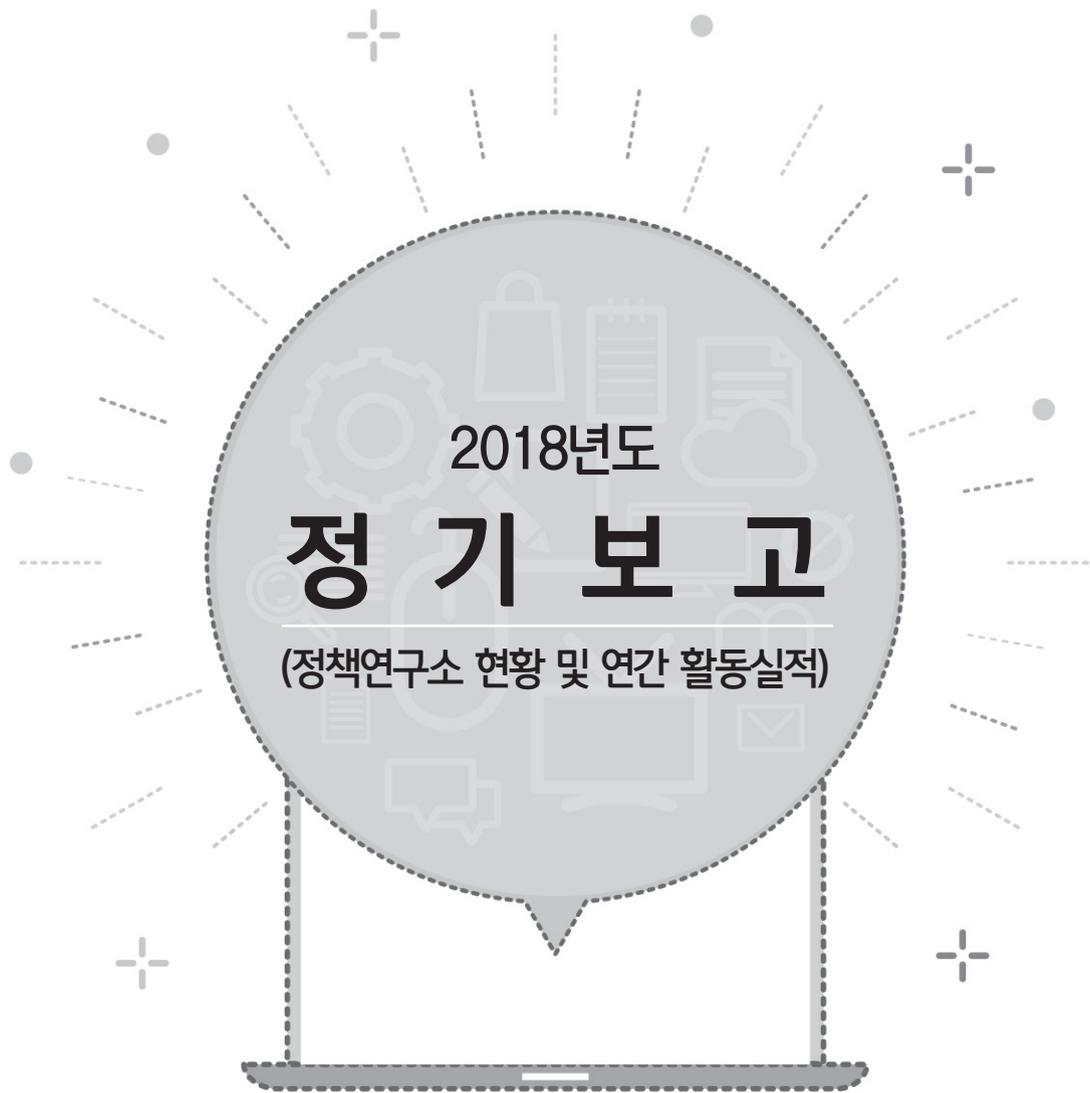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81214	언론	보도자료 배포	제1회 바른미래포럼 개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헌정체제 전환’	
181228	언론	보도자료 배포	‘선거제도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	
181231	언론	언론인터뷰	국회 교섭단체 싱크탱크 수장이 바라본 2018년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3건)

발간 일자	종 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81102	연구 보고서	바른미래당 전략 조사	외부 용역	전자자료 당 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 전달	
181204	토론회 자료	전환시대의 신경제 패러다임: 침몰하는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발간	250부 현장 배부	
181214	토론회 자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헌정체제의 전환: 87체제에서 2020체제로	자체 발간	30부 현장 배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1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81017	바른미래당 대회의실	창립(발기인)총회	바른미래연구원 설립 결의	



- 민주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 -

민주평화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5층 503호			V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3	자체고용: 3	
석사급: 1		
기 타:	외부파견:	
합 계: 4	합 계: 3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716,245,591	118,803	0	716,364,394	454,914,197	261,450,197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0건)

나. 토론회 등 개최(27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소	주제	주요내용
여론조사	180407	외주	ARS 여론조사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180428	외주	ARS 여론조사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토론회	180502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민주평화연구원 창립기념토론회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나아갈 길
여론조사	180506	외주	ARS 여론조사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180519	외주	ARS 여론조사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180526	외주	ARS 여론조사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180602	외주	ARS 여론조사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180602 ~180609	외주	ARS 여론조사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간담회	180706 ~180731	민주평화연구원	6.13 지방선거평가위원회 정책평가간담회	당이 처한 현실과 미래 진단
토론회	180724	부산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개혁입법연대와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18092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득주도 성장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	좌동
세미나	180927	광주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5.18과 여성 성폭력 학술세미나	좌동
세미나	181004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좌동
세미나	181101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문재인정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	좌동
토론회	181102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한국정당발전과 선거제도 개혁	좌동
세미나	181108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좌동

토론회	181108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좌동
세미나	181122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바람직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좌동
토론회	181126	국회 본관 226호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는?	좌동
세미나	181129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집값 하락'이 민생이다	좌동
세미나	181206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경제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	
강연회	181209	전북 노블레스컨벤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초청 강연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간담회	181210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한일 과거사 문제의 현황과 입법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좌동
토론회	181211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할 것인가?	좌동
토론회	181214	전남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 대강당	민주평화당 고흥지역위원회 초청 특강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181217	국회 본관 226호	한반도 정세 토론회	한반도 정세 토론회 2018 평가 및 2019 전망
토론회	181227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선거제도개혁 시민대토론회	5자합의 과제와 전망

다. 교육 · 연수활동(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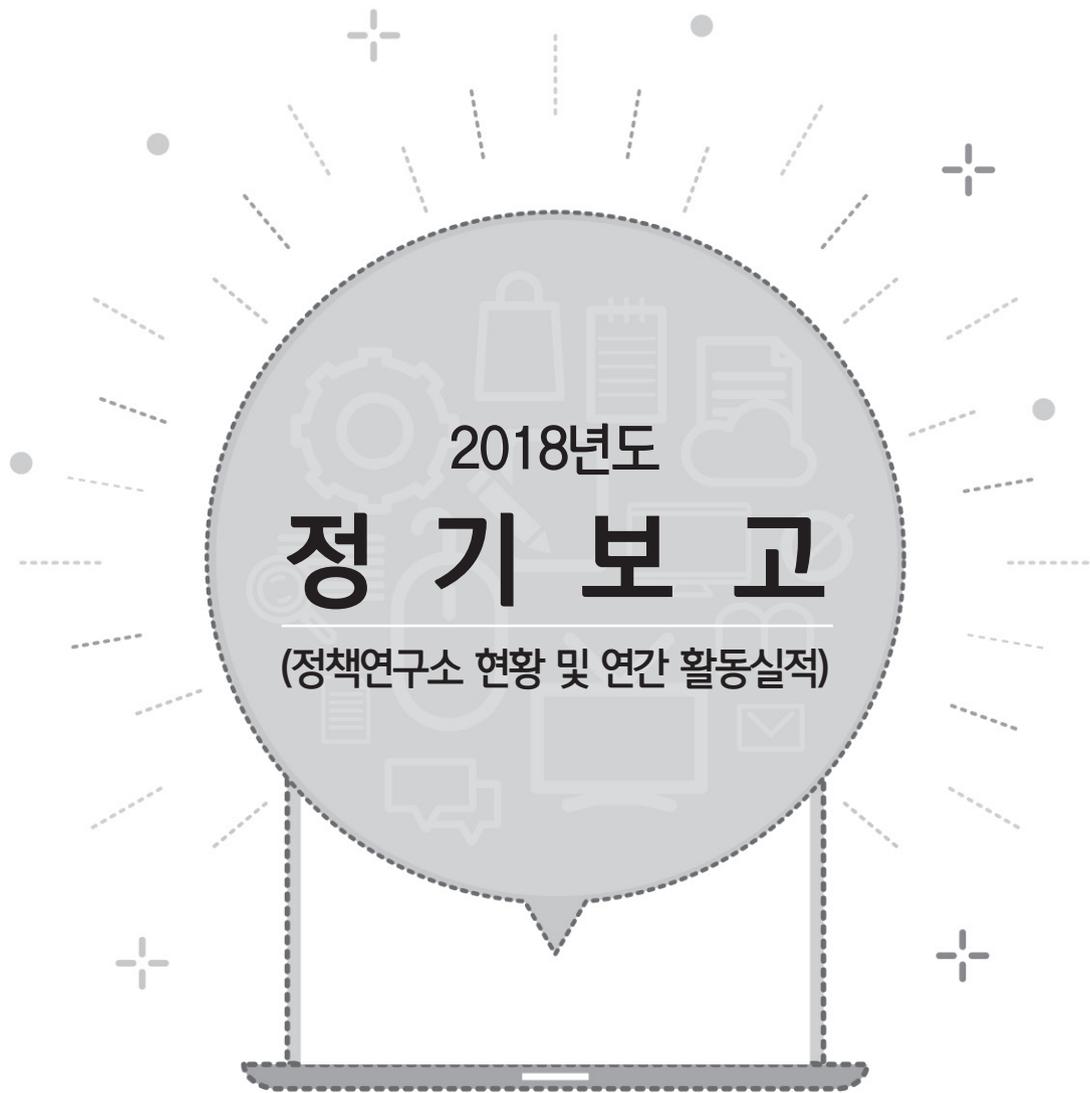
라. 정책홍보(14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201806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민주평화연구원 창립 기념 토론회 개최	
201809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소득주도 성장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	
201809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5·18과 여성 성폭력 학술세미나	
201810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201811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문재인정부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	
201811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한국정당발전과 선거제도 개혁	
201811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1811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201811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문재인정부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	
201811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바람직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201811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집값 하락’이 민생이다	
201812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경제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	
201812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교육개혁’ 쟁점 토론회	
201812	각 언론사,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및 연구원 홈페이지 개재	한반도 정세 토론회: 2018 평가 및 2019 전망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18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 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180502	토론회 자료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나아갈 길	자체발간	500부 현장배포	
180528	정책공약집	민주평화당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자체발간	5,000부 전국 시도당 배포	
180724	토론회 자료	개혁입법연대와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발간	100부 현장배포	
180920	세미나 자료	소득주도 성장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	자체발간	70부 현장 배포	
181004	세미나 자료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자체발간	70부 현장 배포	
181101	세미나 자료	문재인정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	자체발간	70부 현장 배포	
181102	토론회 자료	한국정당발전과 선거제도 개혁	자체발간	200부 현장 배포	
181108	세미나 자료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자체발간	70부 현장 배포	
181120	정책자료집	민심그대로 선거제도개혁 정책자료집	자체발간	50,000부(수첩형) 전국 시도당 배포	
181122	세미나 자료	바람직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자체발간	70부 현장 배포	
181126	토론회 자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는?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포	
181129	세미나 자료	‘집값 하락’이 민생이다	자체발간	70부 현장 배포	
181206	세미나 자료	경제 구조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	자체발간	70부 현장 배포	
181210	간담회 자료	한일 과거사 문제의 현황과 입법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자체발간	50부 현장 배포	
181211	토론회 자료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포	
181217	토론회 자료	한반도 정세 토론회 2018 평가 및 2019 전망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포	
181227	토론회 자료	5자합의 과제와 전망	자체발간	100부 현장 배포	
181228	토론회 자료모음집	민주평화연구원 전문가 초청특강 2018 하반기 자료모음집(1차)	자체발간	300부 각 지역위원장, 시도당 사무실 배포	

바. 그 밖의 주요활동(0건)



-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

정의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5층 (여의도동, 동아빌딩)			○		

나. 인 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2 명	자체고용: 2 명	
석사급: 6 명	외부파견:	
기 타: 2 명		
합 계: 10 명	합 계: 2 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800,651,480	66,866	225,002,769	1,025,721,115	840,585,370	185,135,745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3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71101 ~ 180430	행정안전위	지방자치 분야 공약개발	자체	43p	
170921 ~ 180128	국회운영위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안	자체	72p	
0102~0503	보건복지위	지역 출산·보육·아동정책 및 지방선거 공약 마련	자체	49p	
0110~0123	보건복지위	부모보험 도입 관련 기초자료 마련	자체	10p	
0120~0121	국회운영위	국회개혁 방안	자체	15p	
0126~0306	행정안전위	협치를 위한 정부형태 개헌방향	자체	37p	
0102~0419	보건복지위	지역 장애인정책 및 지방선거 공약 마련	자체	32p	
0102~0406	보건복지위	지역 건강정책 및 지방선거 공약 마련	당 건강정치위 와 공동	31p	
0102~0506	보건복지위	지역 노인정책 및 지방선거 공약 마련	자체	12p	
0102~0220	행정안전위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방안	자체	23p	
0103~0106	국토위	제천 화재 - 소방 안전 관련 문제점 및 검토방안	자체	3p	
0103~0612	환노위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개발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와 공동	22p	
0103~0612	국토위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개발	자체	30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고
0103~0613	산자중기위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개발	자체	13p	
0104~0410	행정안전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지자체 재원마련 방안 연구	자체	40p	
0108~0125	환노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 방안	자체	24p	
0205~0413	행정안전위	지방재정 분권 추진 방안 연구	자체	30p	
0331~0413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공무 국외활동 관련 개선과제	자체	9p	
0416~0502	행정안전위	지방의회 개혁방안	자체	17p	
0401~0429	산자중기위	중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자체	7p	
0405~0521	예결특위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자체	20p	
0716~0814	예결특위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방안	자체	30p	
0717~0719	행정안전위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사고 대책	자체	8p	
0702~0730	행정안전위	하반기 정치개혁 과제와 추진전략	자체	7p	
0810~1105	기획재정위	2018년 정의당 세법개정안 연구	자체	30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0816~0917	기획재정위	정의당 부동산 보유세 개선방안	자체	20p	
0820~1025	행정안전위	정치관계법 개정방안	자체	20p	
0802~1203	기획재정위	2018년 세법개정안 검토	자체	20p	
0830~0909	보건복지위	하반기 보건복지 정기국회 의제 점검	자체	7p	
0831~1130	행정안전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 2019년 예산분석	자체	10p	
0831~1207	예결특위	2019년 예산안 분석과 심사방안 연구	자체	50p	
0831~0911	환노위	하반기 환노위, 산자중기위 정기국회 의제 점검	자체	2p	
0901~0910	국토위	부동산 시장 현황 및 정부 대책에 대한 검토의견	자체	5p	
0901~0913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쟁점 이해 및 당의 입장	자체	6p	
0904~1004	기획재정위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에 따른 개편 방안 연구	자체	20p	
1014~1024	행정안전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자체	10p	
1025~1102	환노위	2019 환노위, 산자중기위 예산안	자체	4p	
1025~1102	국토위	2019 국토교통위 예산안 검토의견	자체	2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031~1109	행정안전위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방안	자체	20p	
1101~1113	행정안전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체	5p	
1102~1125	행정안전위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10p	
1201~1211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수당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자체	9p	
1207~1210	국토위	폭력적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재건축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해야	자체	5p	
0101~0130	행정안전위 원회	제천 화재 재난단계별 문제점 및 재발 방지대책	자체	5P	
0201~0205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	2017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및 시사점	자체	5P	
0320~0323	행정안전위 원회	대통령 헌법개정안, 지방분권 부분 검토의견서	자체	2P	
0828~0906	기획재정위 원회	소득분배 통계 구축 제도 개선 방안	자체	5P	
1101~1115	행정안전위 원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자체	6P	
0101~0131	행정안전위 원회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 및 대응	자체	4P	
0201~0228	행정안전위 원회	정의당형 노동존중 지방분권 강화방안 제안(입법·행정 분권)	자체	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0301~0329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평가와 노동존중 지방자치 전략 제언	자체	8P	
0601~0630	행정안전위원회	6.13 지선 후 지방권력 교체와 지방자치(재정분권·의회견제·주민참여) 강화방안 제언	자체	9P	
0801~0831	보건복지위원회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논의의 검토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모색	자체	11P	
0901~0930	보건복지위원회	마이너스 출산율 시대 임박, 2020 저출산 대책 모색	자체	16P	
1001~1031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OECD 국가별 세입·세출 추이 분석] 저부담·저복지, 얼마나 개선됐나?	자체	15P	
1101~1127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 및 지진대비 역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12P	
1101~112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정통부 국가R&D 혁신방안 검토 및 평가	자체	10P	
1201~122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부는 자회사 과학기술 출연(연)의 (손)자회사 설립을 멈추라!	자체	8P	
0401~042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북형 과학기술혁신모델로 전북경제 회생	자체	5P	
0420~0427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전북을 남북의 농업·관광 분야 평화교류 전진기지화	자체	1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0424~0502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건강·처우개선 방안	자체	1P	
0401~0503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인 제대로 지키는 도지사 될 것!	자체	6P	
0410~0510	국토교통위원회	전북비전2018: 새만금 신구상, 전북 경제회생 도지사	자체	7P	
0418~0517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형 주민·환경친화적 교통모델 실현	자체	5P	
0422~0521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비전2018: 14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북	자체	8P	
0501~0605	행정안전위원회	재정추계서(안) 및 공약가계부	자체	17P	
0601~0630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 (전북도지사후보) 공약모음집	자체	54P	
0301~0325	법제사법위원회	정책생산 방법 강의안	자체	9P	
1109~1208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진보정치 아카데미 강의자료(ppt)] 4차 산업혁명과 정의당의 전략 및 정책과제 구상	자체	29P	
1010~1109	행정안전위원회	정당연구소 정책역량(독립·경쟁·협력) 강화 방안	자체	8P	
1101~1122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공채 개편 연계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방안	자체	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1101~1123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의 기본소득 당론화 정치과정 경험 사례 분석	자체	10P	
1101~1111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와 대외정책 방향	자체	23P	선관위 주관 정당정책 토론회 준비자료
1101~1127	외교통일위원회	북미 협상의 교착 지속과 대북 제재	자체	8P	
1201 ~1222	외교통일위원회	2018년 세밑, 평화를 생각한다 : 전쟁부재의 평화를 넘어 일상의 평화로	자체	5P	
0105~0131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제시	자체	3P	
0205~0227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지엠 사태와 新지역산업정책	자체	3P	
0302~0330	환경노동위원회	군산제조업벨트의 부흥 방안 : 협동, 공유 기조로 뿌리산업 강화	자체	6P	
0603~0628	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정책의 전제조건은 대기업 개혁	자체	6P	
0803~0830	환경노동위원회	혁신성과와 공정경제 정책, 핵심은 재벌 개혁	자체	7P	
0903~0925	환경노동위원회	일본의 취업빙하기 세대 정책과 한계	자체	9P	
1002~1030	환경노동위원회	노동형태의 변화와 자기방어적 노동인식, 새로운 제도 추진 방향	자체	10P	
1102~1125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공제제도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제 실현 방안	자체	7P	
1202~1228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산업, 임박한 파국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	8P	
0122~0131	행정안전위원회	6월 지방선거전 집권여당의 압도적 우위 예상	자체	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0219~0227	행정안전위원회	평창 이후 정국	자체	5P	
0320~0330	행정안전위원회	격동의 한반도, 격랑의 한국정치	자체	5P	
0618~0628	행정안전위원회	촛불과 대평화 쓰나미 휩쓴 지방선거, 그 이후	자체	4P	
0822~0830	행정안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2기, 정권 성패의 척도는 국민 살림살이	자체	4P	
0827~090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의 전망과 정치개혁 핵심과제	자체	7P	
0924~1004	행정안전위원회	평양선언 후폭풍, 10월 한국정치 전망	자체	5P	
1023~1031	행정안전위원회	11월 산적한 정치현안, 대립 정치 지속	자체	5P	
1029~1101	행정안전위원회	선거운동 자유와 참정권 확대	자체	3P	
1116~1122	행정안전위원회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 개혁 방안	자체	3P	
1121~1128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여당 통치협상력 부재, 갈등의 증폭	자체	6P	
1121~1206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제에 관하여	자체	13P	
1219~1231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여당 개혁 후퇴와 수렁에 빠진 정치	자체	6P	
0103~0117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한국 산업의 도전과 구조조정	공동	15P	
0118~0130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노동주도성장론	자체	6P	
0205~0225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대안적 소유 모델	자체	8P	
0313~0327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금융 개혁과 협동조합 활성화	자체	6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0416~0420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노동시간 단축과 버스대란 논란	자체	2P	
0502~0518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기업범죄자 임원금지 법안	자체	3	
0507~0510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특성화고 문제	자체	5P	
0511~0517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과 엘리엇 공포	자체	4P	
0511~0517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재용	자체	5P	
0518~0525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대한항공 청문회 청원을 위한 자료	자체	4P	
0619~0629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최저임금 관련 이슈: 소득양극화와 고용위기	자체	8P	
0813~0829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자체	10P	
0910~0928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노동자가 원하는 것	자체	8P	
1010~1030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노동자 대표제: 경기변동과 노사관계의 변화	자체	10P	
1105~1129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미국의 노동자 기업 소유 제도	자체	9P	
1210~1226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주주자본주의: 주주가치 보호인가, 합법화된 약탈인가?	자체	12P	
170904 ~ 180118	국회운영위원회	해외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아젠다 사례와 시사점	외부용역	80P	
171018 ~ 80108	보건복지	기초연금 전면확대와 평등한 노후보장 실현을 위한 연구	외부용역	8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고
171020 ~ 180213	국회운영위원회	2018년 지방선거의 정치담론지형과 당의 담론에 관한 연구	외부용역	62P	
171025 ~ 180313	국회운영위원회	정의당 창업정책 개발 연구	외부용역	108P	
171027 ~ 180220	법제사법위원회	공동사용자의 법리와 활용가능성 검토	외부용역	72P	
171108 ~ 180209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조례 및 행정처분	외부용역	49P	
171110 ~ 180213	국회운영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및 월간 정치현안 조사보고서	외부용역	125P	
171124 ~ 180315	국회운영위원회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한 검토	외부용역	48P	
0112~0123	국회운영위원회	당 지지율 제고 방안 연구조사	외부용역	147P	
0213~0629	국회운영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및 월간 정치현안 조사보고서	외부용역	206P	
0308~0807	국회운영위원회	문재인정부 하 정의당의 정치 전략과 정책과제	외부용역	59P	
0418~0731	국회운영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선출 개혁방안	외부용역	62P	
0423~0608	국회운영위원회	스페인 포데모스 강령, 독일 좌파당강령, 네델란드 사회주의당 강령 번역	외부용역	226P	
0424~0604	국회운영위원회	영국노동당 선거강령, 캐나다 자유당 선거강령, 당헌, 2016년 정책강령 번역	외부용역	183P	
0430~0704	국회운영위원회	정의당 강령검토 및 개정방향과 과제-서구 정당들과의 비교연구	외부용역	6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 방법	분량	비고
0629~1012	국회운영위원회	주간 정세분석 및 월간 정치현안 조사보고서	외부용역	144P	
0827~1102	국회운영위원회	당 지지율 제고 및 당원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심층조사	외부용역	161P	

나. 토론회 등 개최(22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세미나	0410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전망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특강	
세미나	0416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에너지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본 전기차와 수소차 논란	전기차와 수소차의 한계를 파악하고 에너지 정책적 관점에서 보다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	
토론회	0509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정의당 주거 정책 발표 및 토론	
토론회	0827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중소상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정의당 상가임대차 관련 정책 발표 및 토론	
토론회	0829	국회 본청 223호	중소상공인 3대 갑질 근절법안	정의당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발표 및 토론	
토론회	0912	국회 본청 223호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방안	2018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토론회	1005	국회 본청 223호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진단과 개혁방안	한국 복지국가의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과제 제시, 분야별 정책 대안 토론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세미나	1109	국회 본청 223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관련 교통에너지환경 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추가적인 대안 모색	
세미나	1116	정의당 중앙당	공적연금에 대한 당의 입장과 현재 쟁점, 경사노위 연금특위 상황 공유 및 이후 전망	공적연금을 둘러싼 각계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연금특위 향후 상황 공유 및 이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0124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여성농민의 권리신장에 대한 공동주최 토론회	아시아 여성농민의 권리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토론회	
토론회	0131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한국산업	한국산업의 도전과 올바른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모색	
토론회	0222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청년노동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시대 청년노동의 현실과 해법에 대한 대안 모색	
간담회	0406	연구소 회의실	담론개발	민주노동당의 사례에서 살려보는 진보정당의 미래	
토론회	062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결과와 평가 및 이후 전망에 대한 대안 모색	
토론회	082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	
간담회	0906	연구소 회의실	담론개발	정의당의 지역전략으로서의 커먼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092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부동산 정책	부동산 늪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1004	중앙당 회의실	담론개발	21대 총선을 향한 정의당의 정치전략과 과제	
간담회	1115	연구소 회의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	제도통합과 다층구조 확립으 로 평등한 연금, 맘 편한 노 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	
포럼	1210	연구소 회의실	평화와 통일	진보진영 2019년 평화-통일에 대한 연구 및 과제	
간담회	1214	연구소 회의실	경제정책 담론개발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와 생태 계의 특징	
토론회	122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문재인정부 중간평가와 대안모 색-저성장 속의 경기침체와 문 재인정부 2년 결재정책 평가	

다. 교육.연수활동(13건)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고
당직자교육	0325	연구소 회의실	정책생산 방법	
정예당원교육	1208	민주노총 교육원	4차 산업혁명과 정의당의 전략 및 정책과제 구상	
경기도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0315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경기도 예산 및 주요 정책 분석 방법	
경기도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0322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경기도 예산 및 주요 정책 분석 방법	
부산시당 당원교육	1019	부산시당 사무실	부산시 정책 모니터링 방법	
정예당원교육	1124	민주노총	불평등, 경제적 선택, 그리고 협력의 진화	
당직자 교육	0326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중앙당직자 및 연구위원 교육(1차)	
당직자 교육	0329	중앙당 회의실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중앙당직자 및 연구위원 교육(2차)	
당직자 교육	0405	중앙당 회의실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중앙당직자 및 연구위원 교육(3차)	
합동워크숍	0622 ~ 0623	홍익대 국제연수원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 격려의 밤	
연구소 워크숍	0717 ~ 0718	강화도 석모도 자연휴양림	향후 정의당의 정치 전략과 연구소의 과제	
합동워크숍	1004	용인에버랜드	중앙당직자 및 연구위원 합동워크숍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당직자 교육	1213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p>중앙당직자 및 공직자 활동가 기본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경제의 구조와 역사 -장애여성운동의 역사와 쟁점 -20178년 페미니즘의 쟁점 	

라. 정책홍보(32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22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홈페이지게재	장애인 등급제 폐지,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등 전향적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0206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홈페이지게재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에 대한 정책 논평	
0209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게재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 합리화에 대한 정책 논평	
0315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홈페이지게재	'청년 일자리 대책'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정책 논평	
0419	팟캐스트	상동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 병이 있어도 실손보험에 가입?	
0401	팟캐스트	상동	미세먼지 대책, 비싼 레스토랑은 환풍구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고?	
0426	팟캐스트	상동	의협 최대집 위원장 당선, 문재인케어의 앞날은?	
0403	팟캐스트	팟캐스트 게시 및 당 홈페이지게재	문재인케어와 의협의 불편한 관계, 지역 사망률 10년이나 차이?	
0405	정책논평	상동	'2018년 정부의 추경예산안'의 시급성과 적격성에 대한 정책 논평	
0518	팟캐스트	상동	의협이 건강보험 강화를 주장? 더 뉴 건강보험 파헤치기 / 전자담배는 덜 위험한가?	
0501	팟캐스트	상동	태아 때부터 위협받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해결방법은 없나요?	
0524	팟캐스트	상동	아동주치의와 아동부터 무상의료, 정의당의 대표공약을 소개합니다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504	팟캐스트	상동	5월부터 동네의원도 15분 심층진료! 3분진료 해결될까?	
0626	정책논평	상동	재정특위의 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논평	
0628	팟캐스트	상동	지방선거 평가,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0712	팟캐스트	상동	"총으로 나를 쏘지 마세요" 감정노동자가 처한 현실 / 태국소년구조! 재난적상황은 자살률도 낮춘다는데.. 우리나라는?	
0718	정책논평	상동	정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논평	
0730	정책논평	상동	2018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논평	
0705	정책논평	상동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 논평	
0705	팟캐스트	상동	2~3인 입원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 노년을 외딴 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주거지에서 누리는 '커뮤니티 케어' 알아보기	
0817	정책논평	상동	교섭단체 3당의 규제개악법 처지 중단 촉구 정책 논평	
0828	정책브리핑	상동	2019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정의당의 심사방향 정책 브리핑	
0807	정책논평	상동	정부의 폭염 대비 전기요금 완화정책에 대한 논평	
0913	정책브리핑	상동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발표에 대한 정책 브리핑	
0921	정책논평	상동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대한 정책 논평	
1024	정책논평	상동	유류세 일시적 인하 정책에 대한 논평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1115	정책브리핑	상동	2018년 정의당 세법 개정안	
1106	정책브리핑	상동	2019년 정의당 標 예산안	
121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홈페이지게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4가지 정책조합 나열로 정부 책임을 외면했다	
1219	정책논평	상동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에 대한 정책 논평	
1206	정책분석	정책이슈 브리핑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에너지전환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1209	정책논평	상동	2019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책 논평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43건)

발간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0124	칼럼	화재로 인한 예고치 않은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막을 순 없을까?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영광군민신문 게재	
0214	칼럼	남의 일만은 아닌 밀양화재 45명의 안타까운 죽음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영광군민신문 게재	
0314	칼럼	7장을 투표하기에 복잡하지만 대선·총선 못지않게 중요한 지방선거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영광군민신문 게재	
0329	칼럼	정부 헌법개정안, 지방분권형 개헌의 틀은 갖췄으나 실질적 작동 여부는 아직 의문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영광군민신문 게재	
0502	칼럼	지역경제 전략적인 과학기술·중소기업이 답이다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영광군민신문 게재	
0619	칼럼	경제침체와 지역격차 확대되는 전북경제 위기, 균형발전 전략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고창 해피데이 게재	
0710	칼럼	호남의 민주당 지방권력 1당 독점 강화와 의회·주민 견제 방안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고창 해피데이 게재	
0718	칼럼	지방의원님께 드리는 5가지 제안과 경계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영광군민신문 게재	
0826	칼럼	오보한 기상청을 위한 변론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영광군민신문 게재	

발간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1008	칼럼	소멸되는 한국, 고창... 저출산 대책은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고창 해피데이 게재	
1025	칼럼	격차사회 (서울·지방간) -18세기 경화사족과 21세기 강남 8학군-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영광군민신문 게재	
1112	칼럼	복지국가 대한민국, 얼마나 왔나?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영광군민신문 게재	
1206	칼럼	노회찬 의원님과 그의 평생의 꿈 -독일식 (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자체발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영광군민신문 게재	
0410	기사	청년을 대표하여 장태수 위원장을 만나다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즈]게재	
0412	기사	음성의 전문연구원, 30대 청년정치인 오영훈, 군의원에 도전장을 내밀다!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즈]게재	
0413	기사	동국대 청소노동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즈] 및 레디앙게재	
0417	기사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 노동 시간 단축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즈] 게재	
0418	기사	청년층의 '레어템', 청년당원을 만나다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즈]게재	
0419	기사	(집중 인터뷰) 청년! 정치에 도전하다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즈]게재	
0427	기사	아프니까 청춘? 아프면 소리치자!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즈] 및 레디앙게재	

발간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0427	기사	청년들에게 북한, 통일이란?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 및 레디앙 게재	
0504	기사	청년을 대표하여, 장태수 위원장을 만나다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509	기사	확 바뀌는 프랑스 입시 '경쟁력과 불평등' 논란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611	기사	문턱 낮은 생활 정치, 김소하 후보를 만나다.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611	기사	행복한 복구를 꿈꾸는 정유진 후보를 만나다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611	기사	경남 청년들, 구태 정치 바꾸기 위해 나서다!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611	기사	국회의원 이정미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우리의 노동은 안녕한가요?”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611	기사	내부적으로 끓은 경기 광주시,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720	기사	대학 축제, 주류 판매 금지 논란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 게재	
0730	기사	청년주거문제, 자취생 한 달 생계비는?-한국 청년들의 고통-1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730	기사	행복주택 등 전부 대책 실효성 떨어져-한국 청년들의 고통-2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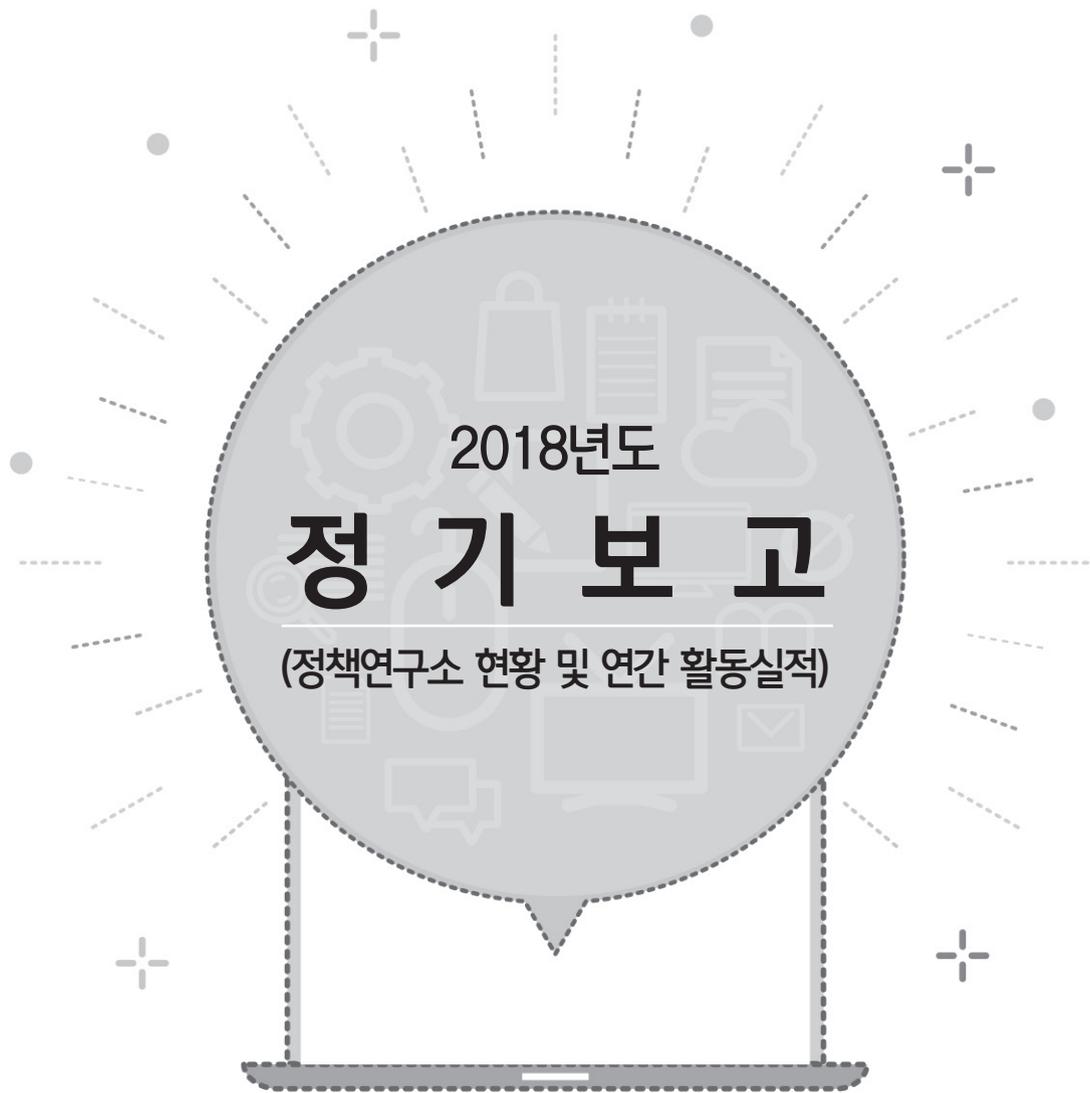
발간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0731	기사	당연하지 않은, 그러나 너무 당연했던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808	기사	'대학 평준화'는 장밋빛 미래에 불과했나?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808	기사	불공평한 대외활동, 서울 경기만 86%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817	기사	계속 되는 취업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일까?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820	기사	간호사는 왜 병원을 떠나는가?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822	기사	정의당 부대표 정혜연에게 묻다 -20대 청년과 정의당,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827	기사	탈조선 신드롬 이후 2018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꿈이 되어버린 '탈조선'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903	기사	다시 불붙는 총장 직선제 요구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918	카드 뉴스	죽은 '보수 정당' 진정한 민생 정치의 시작	외부용역	홈페이지 [정의타임스]게재	
0912	토론회 자료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방안	자체발간	50부, 관련자 및 단체 배포	

발간일자	종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1005	토론회 자료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진단과 개혁방안	자체발간	100부, 당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1116	세미나 자료	공적연금에 대한 당의 입장과 현재 쟁점, 경사노위 연금특위 상황 공유 및 이후 전망	자체발간	30부, 당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바. 그 밖의 주요활동(10건)

일 자 (기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1109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당정책토론회(11.12) 준비회의	토론회의 예상 전개 양상 및 대응 기조,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과 토론	
1212	연구소	민화협 주최 토론회(13일) 참석 당 부대표 지원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초안 작성과 기 조 설명	
0119	중앙당 회의실	16차 이사회	-연구소 이사선출의 건 -2017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 상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2017년 하반기 결산안 및 2018년 상 반기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기타안건	
0201~03 22	연구소 회의실	지방선거 담론개발	2018년 지방선거 담론개발을 위한 담론개발단 회의	
0228	국회본청 223호	청년기자단(5기) 발대식 및 1차 기획회의	-운영방향 안내 및 1차 기획회의 -현직기자 교육(1차) -기자단 단장 청년부대표와의 만남 -위촉장 수여 및 명함지급	
0711	국회본청 223호	청년기자단(5기) 2차 기획회의	-강은미 부대표와의 만남 -현직기자 교육(2차) -중간평가 및 민원수렴	
0915	중앙당 회의실	청년기자단(5기) 간담회 및 해단식	-전현직 청년기자 인사 및 청년과 정의당의 미래 토론 -심상정 전대표 간담회 -우수기자 시상 및 청년자문위원 위촉식 -5기 해단식	

일 자 (기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0416 ~ 0625	연구소 회의실	강령개정	정의당 강령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도출을 위한 회의	
0730	중앙당 회의실	17차 이사회	-연구소장 선출의 건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2018년 상반기 결산안 및 2018년 하반기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기타 안건	
1004	중앙당 회의실	18차 이사회	-연구소 부소장 선출의 건 -기타 안건	



2018년도
정기보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 민중당 민중정책연구원 -

민중정책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한국잡지협회 빌딩 5층			√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1	자체고용:	
석사급: 2	외부파견:	
기 타: 2		
합 계: 5	합 계: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196,740,427	1,597,188		198,337,615	106,594,670	91,742,945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58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고
0108	환경노동	청소년노동보호법 해설	자체	8	별첨1
0115	법제사법	민중의 헌법 7대 방향과 의제	자체	21	별첨2
0115	외교통일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안 분석	자체	3	별첨3
0122	환경노동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3	별첨4
0122	국토교통	“청년월세 10만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조례>	자체	4	별첨5
0129	법사, 정무, 기재	암호화폐 투기 거래 강력규제와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에 관한 과제	자체	6	별첨6
0205	국방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과제	자체	3	별첨7
0205	국방	‘코피(bloody nose)’작전… 군사행동의 가능성과 한계, 역할	자체	4	별첨8
0205	여성가족	미투 운동 현상과 과제	자체	3	별첨9
0226	국방	사드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분석	자체	3	별첨10
0306	국방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민중당 요구안	자체	5	별첨11
0316~0615	정무	대기업집단(재벌) 국가 지원금 연구	외부용역	59	별첨12
0316~0615	농림	농가소득문제의 해법 연구	외부용역	87	별첨13
0316~0615	외교통일	청년세대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외부용역	78	별첨14
0316~0615	여성가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외부용역	43	별첨15

0316~0615	환경노동	요양보호사 근로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외부용역	65	별첨16
0316~0615	기획재정	재산과세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및 세수효과 추계 연구	외부용역	70	별첨17
0316~0615	환경노동	프랜차이즈 청년·청소년 노동자 조직화 방안	외부용역	59	별첨18
0316~0615	국방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0차 특별협정 현황과 과제 연구	외부용역	81	별첨19
0316~0615	환경노동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차별 실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외부용역	66	별첨20
0312	외교통일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FTA 개정요구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자체	3	별첨21
0319	외교통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의미와 전망	자체	7	별첨22
0402	외교통일	북중 정상회담의 배경과 의의 분석	자체	5	별첨23
0430	외교통일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의	자체	6	별첨24
0430	국토교통	중앙정부 및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10	별첨25
0508	외교통일, 국방	평화군축 7대 방안	자체	4	별첨26
0604	기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논란에 대한 분석(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게 왜 문제인가?)	자체	6	별첨27
0618	외교통일	6.12 북미정상회담의 주요내용 분석 및 의의(‘세기의 담판’이 아닌 ‘세기의 만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자체	6	별첨28
0702	기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쟁점과 개선방안	자체	5	별첨29
0710	기재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 쟁점과 개선방안	자체	4	별첨30

0907	외교통일	대북 특사단 평양방문 관련 분석(두 가지 목적)	자체	7	별첨31
0914	국토교통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미친 집값', 필요한 건 종합대책 아닌 단일대책〉)	외부	5	별첨32
0914	외교통일	트럼프 흔들기와 미국 중간선거 전망	자체	4	별첨33
0914	행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 분석 및 향후 과제	자체	5	별첨34
0920	외교통일	『평양공동선언』 분석	자체	6	별첨35
0924~1214	환경노동	돌봄노동 휴게시간 문제와 개선대책	외부용역	74	별첨36
0924~1214	농림	농민수당 실현 방안	외부용역	77	별첨37
0924~1214	교육	학벌사회 개혁 방안 연구	외부용역	68	별첨38
0924~1214	행안	2016 촛불혁명 이후, 청년세대 정치의식의 변화와 특성	외부용역	53	별첨39
0924~1214	외교통일	판문점시대, 남북여성교류협력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의제 연구	외부용역	72	별첨40
0924~1214	여성가족	민중당 활동가의 소수자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	외부용역	73	별첨41
0924~1214	외교통일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모색	외부용역	57	별첨42
0924~1214	교육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연구	외부용역	80	별첨43
0924~1214	보건복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한 통합진보당원들의 심리적 외상 분석	외부용역	50	별첨44
1005	국방	2019년 국방예산의 문제점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삭감하고, 〈국방개혁2.0〉전면 수정해야 한다〉)	자체	5	별첨45
1012	외교통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배경과 의미	자체	5	별첨46

1019	교육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자체	5	별첨47
1019	기재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입장	자체	13	별첨48
1026	환경노동	카카오 카풀과 택시파업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제2의 우버논쟁의 서막, '카카오 카풀'과 택시파업)	자체	5	별첨49
1102	외교통일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자체	7	별첨50
1102	환경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평가	자체	5	별첨51
1109	산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에 대한 분석 및 입장	자체	4	별첨52
1116	환경노동	'광주형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	자체	4	별첨53
1116	환경노동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자체	4	별첨54
1201	정무	삼성바이오로직스(일명 '삼바') 사태의 이해	자체	5	별첨55
1210	정무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 분석(평가) 및 대안(〈'편의점업계 자율협약', 최소수입 보장 및 단체교섭권 부여해야〉)	자체	4	별첨56
1214	기재	'디지털세' 도입과 향후 과제	자체	4	별첨57
1214	외교통일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 무산의 의미	자체	4	별첨58
1221	산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분석 및 입장	자체	4	별첨58

나. 토론회 등 개최(11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2018.07.13	민중당 대회의실	노량진수산시장 대응방안	수산시장 철거 대응 현황 및 정책적 방안	
간담회	2018.07.23	중국심양	남북 정책교류 방향	정당 간 남북교류사업	
간담회	2018.10.05	민중당 대회의실	농민수당 관련 조례화	-농민수당 도입 사례 분석 -전국화를 위한 조례제정	
토론회	2018.11.15	국회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김 종 훈 의 원 실 공동
토론회	2018.12.10	민중당 대회의실	청년노동자 권리실현 정책	인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동자, 반실업청년, 취준 생을 위한 정책	
간담회	2018.12.17	민중당 대회의실	민중당 핵심의제 선정을 위한 계급계층정당 간담회	-민중당 5대 핵심의제 -노동/농민/청년/빈민/여성 등 분야별 의제 선정	
세미나	2018.11.09	민중당 대회의실	주거권운동의 역사와 과제	-주거권운동사 -주거권 관련 국내외규정	
세미나	2018.11.16	민중당 대회의실	주거실태와 주택정책	-주요주택정책의 쟁점과 전개 -주거 및 주택통계를 통해 본 주거현황 -주거관련 주요법률 -문재인, 서울시 주거정책	
세미나	2018.11.23	민중당 대회의실	진보적 주택정책	-주거권 미실현 과제를 중심으로(1가구 1주택, 공 공임대주택확대 등) -해외주택정책	
좌담회	2018.12.05	국회	한반도문제 전문가 초청 좌담회	한반도 정세 전망	김 종 훈 의 원 실 공동
워크숍	2018.12.18		한국산업노동학회 워크숍	정당이 바라보는 노동조합의 역할	공동

다. 교육·연수활동(9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정예당원교육 · 지방선거정책워크숍	2018.3.12	민중당 대회의실	지방선거분야별 정책공약 해설	당원대상
지방당직자교육 · 지방선거정책워크숍	2018.3.19	민중당 대회의실	지방선거분야별 정책공약 해설	당직자 대상
정예당원교육 · 민중당페미니즘세미나	2018.7~8	민중당 대회의실	-페미니즘 운동사 -젠더와 사회구조 -여성과 정치	7강
정예당원교육 · 당직자 정책워크숍	2018.10.15	민중당 대회의실	민중당 강령규약 해설	중앙당 당직자
지방당직자교육 · 당직자 정책워크숍	2018.10.22	민중당 대회의실	민중당 강령규약 해설	서울시당 당직자
지방당직자교육 · 전남도당 운영위원회	2018.10.16	전남도당 대회의실	농민수당과 기본소득	
지방당직자교육 · 울산시당 운영위원회	2018.11.06	울산시당 대회의실	민중당 정치개혁 방안	
지방당직자교육 · 서울시당 정책아카데미 입문과정	2018.11.17	민중당 대회의실	정책입문과정	3강
연구소집합교육	2018.12.06	민중당 대회의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부터 이재용 승계까지 쟁점과 대안	1강

라. 정책홍보(89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430	기자회견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민중당-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정책협약	
0512	기자회견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민중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정책협약	
0516	기자회견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민중당-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협약	
0517	기자회견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민중당-마트산업노동조합 정책협약	
0530	기자회견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민중당-민주일반연맹 정책협약	
0517	책자	당홈페이지, 책자발간, 대의원대회 자료집 발간	지방선거정책공약해설집	
0328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언론사 기고 (김택연의 중국과 한반도)	어린진으로 확인된 북중 우호관계	
0413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언론사 기고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와 시진핑의 진짜 속내	
0507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언론사 기고	차이나 패싱? 북한이 왜?	
0610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언론사 기고	2017년 중국 10대 유행어 4위, 10대 신조어 1위는? 송안신구	
0711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언론사 기고	미중 무역전쟁? 핵심은 무역이 아니다	
0814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언론사 기고	인민일보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사라졌다	
0919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언론사 기고	2018 동방경제포럼, 시진핑의 선택	
1018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언론사 기고	중국 양안관계의 근원, 두 개의 쌍십절	
1121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언론사 기고	한반도 문제, 결국 쌍궤병행이 해법이였다	

1010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기재부는 '근로참관제'가 아니라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010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 반대' 주민 뜻을 수용해야 한다.	
1016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점입가경 사립유치원 비리, 강력한 관리감독을 넘어 국공립유치원 전환이 시급하다.	
1025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1025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촛불정부를 자처하려면,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주거정책 제시했어야 한다.	
1105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초과 사용(10% 이상) 때 법인세 매겨야.	
1109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결핵예방백신 BCG 사태, 식약처는 책임 있는 입장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1112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1205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주민 뜻 거스르고 영리병원 강행하겠다는 원희룡 지사, 돈보다 주민 건강권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1210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반복되는 KTX 사고는 외주화가 부른 인재(人災)다.	
1211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결국, 삼성공화국.	
1217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역시, 삼성공화국	
1221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김용관 삼성전자 부사장을 즉각 소환·수사하라.	
1227	정책논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약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으로 타임플루 부작용 피해를 막을 수 없다.	

0108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청소년노동보호법 해설	
0115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안 분석	
0115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민중의 헌법 7대 방향과 의제	
0122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0122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청년월세 10만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조례〉	
0129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평창올림픽 여론분석	
0129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암호화폐 투기 거래 강력규제와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에 관한 과제	
0205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코피(bloody nose)’작전… 군사행동의 가능성과 한계, 역할	
0205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미투 운동 현상과 과제	
0205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과제	
0212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디지털 전환과 진보의 대응	
0226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사드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분석	
0306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0306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민중당 요구안	
0312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개정요구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0319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의미와 전망	

0326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통령 발의 개헌안 분석 및 당론	
0402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북중 정상회담의 배경과 의의 분석	
0409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인가, 완화인가	
0416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삼성증권 사태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논점	
0430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의	
0430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시론(족벌경영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이 나서야)	
0430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중앙정부 및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0508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평화군축 7대 방안	
0514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부처	
0528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재벌 10대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연구	
0604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최저임금 계약안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0604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논란에 대한 분석(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게 왜 문제인가?)	
0618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6.12 북미정상회담의 주요내용 분석 및 의의('세기의 담판'이 아닌 '세기의 만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0702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쟁점과 개선방안	
0710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 쟁점과 개선방안	

0907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대북 특사단 평양방문 관련 분석(두 가지 목적)	
0914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미친 집값', 필요한 건 종합대책 아닌 단일대책〉)	
0914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트럼프 흔들기와 미국 중간선거 전망	
0914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농민수당의 의미(〈'농민수당' 실현, 사람중심·농민중심 농업정책의 첫 발 떼기〉)	
0914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 분석 및 향후 과제	
0920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평양공동선언』 분석	
0920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소수입 보장 방안	
1005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2019년 국방예산의 문제점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삭감하고, 〈국방개혁2.0〉전면 수정해야 한다〉)	
1005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내용분석 및 향후 과제	
1012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배경과 의미	
1012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 2018』로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1019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	
1019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입장	
1026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카카오 카풀과 택시파업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제2의 우버논쟁의 서막, '카카오 카풀'과 택시파업)	

1026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평가분석	
1102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1102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평가	
1109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에 대한 분석 및 입장	
1116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광주형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	
1116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1123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개선 공익위원 합의안〉 분석 및 보완책	
1201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삼성바이오로직스(일명 ‘삼바’) 사태의 이해	
1210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 분석(평가) 및 대안(〈‘편의점업계 자율협약’, 최소수입 보장 및 단체교섭권 부여해야)	
1210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및 과제 (‘포괄임금제’ 개선대책 시급히 발표해야)	
1214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디지털세’ 도입과 향후 과제	
1214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평가	
1214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 무산의 의미	
1221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반박	
1221	정책과 논점 발행	당홈페이지, 언론사배포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분석 및 입장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6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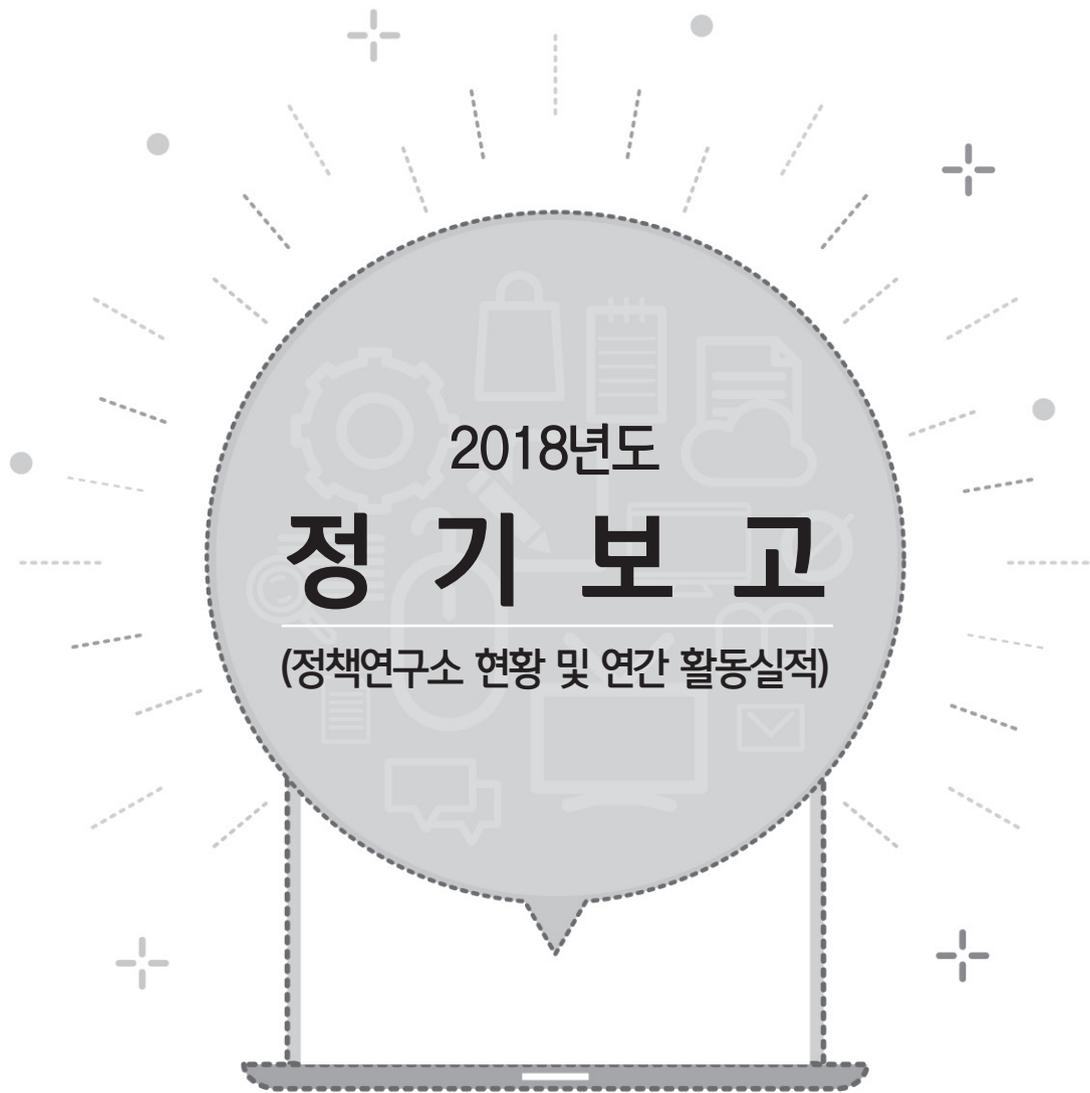
발간일자	종류	제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0110	토론회자료집	민중의 헌법 당원토론서 1.0	공동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소책자
0110	토론회자료집	민중의 헌법 당원토론서 1.0	공동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책자
0516	토론회자료집	평화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의 관계문제-군사분계선 관할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공동	50부 토론회 참가자 배포	
0517	백서	지방선거정책공약해설집	자체	100부 전국시도당위원회 배포	
0108	연구논문	청소년노동보호법 해설	자체	당홈페이지 개시 분회모임 토론	
0115	연구논문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안 분석	자체	상동	
0115	연구논문	민중의 헌법 7대 방향과 의제	자체	상동	
0122	연구논문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상동	
0122	연구논문	“청년월세 10만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조례>	자체	상동	
0129	연구논문	평창올림픽 여론분석	자체	상동	
0129	연구논문	암호화폐 투기 거래 강력규제와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에 관한 과제	자체	상동	
0205	연구논문	‘코피(bloody nose)’작전… 군사행동의 가능성과 한계, 역할	자체	상동	
0205	연구논문	미투 운동 현상과 과제	자체	상동	
0205	연구논문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과제	자체	상동	

0212	연구논문	디지털 전환과 진보의 대응	자체	상동	
0226	연구논문	사드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분석	자체	상동	
0306	연구논문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자체	상동	
0306	연구논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민중당 요구안	자체	상동	
0312	연구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개정요구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자체	상동	
0319	연구논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의미와 전망	자체	상동	
0326	연구논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 분석 및 당론	자체	상동	
0402	연구논문	북중 정상회담의 배경과 의의 분석	자체	상동	
0409	연구논문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인가, 완화인가	자체	상동	
0416	연구논문	삼성증권 사태가 우리사회에 던지는 논점	자체	상동	
0430	연구논문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의	자체	상동	
0430	연구논문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시론(즉별경영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이 나서야)	자체	상동	
0430	연구논문	중앙정부 및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상동	
0508	연구논문	평화군축 7대 방안	자체	상동	

0514	연구논문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부처	공동	상동	
0528	연구논문	재벌 10대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연구	외부	상동	
0604	연구논문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자체	상동	
0604	연구논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논란에 대한 분석(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게 왜 문제인가?)	자체	상동	
0618	연구논문	6.12 북미정상회담의 주요내용 분석 및 의의(‘세기의 담판’이 아닌 ‘세기의 만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자체	상동	
0702	연구논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쟁점과 개선방안	자체	상동	
0710	연구논문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 쟁점과 개선방안	자체	상동	
0907	연구논문	대북 특사단 평양방문 관련 분석(두 가지 목적)	자체	상동	
0914	연구논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미친 집값’, 필요한 건 종합대책 아닌 단일대책〉)	외부	상동	
0914	연구논문	트럼프 흔들기와 미국 중간선거 전망	자체	상동	
0914	연구논문	농민수당의 의미(〈‘농민수당’ 실현, 사람중심·농민중심 농업정책의 첫 발 떼기〉)	공동	상동	
0914	연구논문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 분석 및 향후 과제	자체	상동	

0920	연구논문	『평양공동선언』 분석	자체	상동	
0920	연구논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소수입 보장 방안	자체	상동	
1005	연구논문	2019년 국방예산의 문제점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삭감하고, 〈국방개혁2.0〉전면 수정해야 한다)	자체	상동	
1005	연구논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내용분석 및 향후 과제	자체	상동	
1012	연구논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배경과 의미	자체	상동	
1012	연구논문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 2018』로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자체	상동	
1019	연구논문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자체	상동	
1019	연구논문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입장	자체	상동	
1026	연구논문	카카오 카풀과 택시파업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제2의 우버논쟁의 서막, ‘카카오 카풀’과 택시파업)	자체	상동	
1026	연구논문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평가분석	자체	상동	
1102	연구논문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자체	상동	
1102	연구논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평가	자체	상동	
1109	연구논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에 대한 분석 및 입장	자체	상동	

1116	연구논문	‘광주형 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	자체	상동	
1116	연구논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자체	상동	
1123	연구논문	〈‘ILO 기본협약 기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개선 공익위원 합의안’ 분석 및 보완책	자체	상동	
1201	연구논문	삼성바이오로직스(일명 ‘삼바’) 사태의 이해	자체	상동	
1210	연구논문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 분석(평가) 및 대안(〈‘편의점업계 자율협약’, 최소수입 보장 및 단체교섭권 부여해야)	자체	상동	
1210	연구논문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및 과제 (‘포괄임금제’ 개선대책 시급히 발표해야)	자체	상동	
1214	연구논문	‘디지털세’ 도입과 향후 과제	자체	상동	
1214	연구논문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평가	자체	상동	
1214	연구논문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 무산의 의미	자체	상동	
1221	연구논문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반박	자체	상동	
1221	연구논문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분석 및 입장	자체	상동	



- 대한애국당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40 5층 애국정책전략연구원			V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1	자체고용: 1	
석사급:		
기 타:	외부파견:	
합 계: 1	합 계: 1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20,000,000			20,000,000	2,000,000	18,000,000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00건)

- 12월 11일 법인 설립으로 인한 활동 기한 부족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별 첨 : 연구·개발실적 주요내용 부.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별첨’에 작성합니다.

나. 토론회 등 개최(00회)

- 12월 11일 법인 설립으로 인한 활동 기한 부족

개최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 「주」 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 공청회, 진상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2. 국제적인 토론회, 컨퍼런스 등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교육·연수활동(00회)

- 12월 11일 법인 설립으로 인한 활동 기한 부족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합니다.

라. 정책홍보(00회)

- 12월 11일 법인 설립으로 인한 활동 기한 부족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00건)

- 12월 11일 법인 설립으로 인한 활동 기한 부족

발간일자	종류	제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고

「주」 1. “종류”는 연구논문, 토론회자료, 백서 등으로 기재합니다.

2. “발간방법”은 외부용역, 자체발간,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바. 그 밖의 주요활동(00건)

- 12월 11일 법인 설립으로 인한 활동 기한 부족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